

耽羅文化

제59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院

2018. 10.

耽羅文化

제59호 2018. 10.

차 례

특집 I 제주 4·3의 역사적 해석과 현재적 의미

- 종전 후 외세의 개입에 따른 영향과 갈등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본 제주4·3과 대만2·28의 遠因 - 7
변현정·고경아·허선주·송은경·정창원
-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41
한철호
- 동북아 비핵지대와 제주 비핵조례
-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69
윤여일

일반 논문

-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 105
李京燮
- 『聖德太子伝歴』에 반영된 新羅觀과 그 撰者 127
이주희

■ 제주도 들불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	157
정순여·김대훈·양인하	
■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방향 모색	187
양미경	

연구원 소식

회보	2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2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224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228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231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235

특집 I : 제주 4·3의 역사적 해석과 현재적 의미

종전 후 외세의 개입에 따른 영향과 갈등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본 제주4·3과 대만2·28의 遠因 -

변현정·고경아·허선주·송은경·정창원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한철호

동북아 비핵시대와 제주 비핵조례

-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여일

종전 후 외세의 개입에 따른 영향과 갈등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본 제주4·3과 대만2·28의 遠因 -*

변현정**·고경아·허선주·송은경****·정창원****

I. 머리말

II.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야기한 제주4·3의 遠因

III. 국민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만인의 갈등

IV.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과 조선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외세의 개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의 집약체로서 제주4·3과 대만2·28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두 사건 모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백색테러라는 공통점과 양민학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카이로회담에서 조선은 신탁통치, 대만은 중화민국으로의 귀속이 결정되었다. 미군은 신탁통치 과정에서 일제의 체제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대중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된 남한에서는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민위원회는 각 지역의 치안을 맡았는데, 제주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농민, 노동자, 부녀자 등의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제주대학교 사학과

***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대학교 사학과, 제주대학교 사학과

**** 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cau16a@empal.com

만, 미군에게는 불만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3·1절을 맞아 제주에서는 가두시위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군정은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하여 좌익세력을 척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조치에 반발한 남로당은 1948년 4월 3일을 기해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 진압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귀속되면서 국민당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행정장관에 임명된 陳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대만에 대한 본격적인 통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陳儀로 대표되는 국민당정부의 대만통치는 대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만은 국민당정부의 전매제 실시와 중국대륙으로의 물자 매각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당시 대만인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적인 교육과 의료시스템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행된 황민화정책으로 일본문화에 대해 상당히 익숙해 있었고, 국민당정부의 지도층은 이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노력대신 대만인이 노예화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대만인들은 국민당정부의 관직독점과 부정부패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대만인은 점점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는 버리게 되었고, 대만인들은 스스로를 본성인(本省人)이라 칭하며, 외성인(外省人)들과의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충돌이 바로 2·28사건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패전이후 변화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과 대만에 유입된 외세들이 현지인들과 빚어진 갈등에서 제주4·3과 대만2·28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주제어 : 전후처리, 외세, 제주4·3, 대만2·28

I. 머리말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8월 15일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한다. 제주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발전적 해소로 인해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치안을 유지했고, 이후 제주에 상륙한 미군정은 초기엔 인민위원회와 큰 충돌 없이 통치를 실시해 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통치체계를 유지하는 정책과 거둬진 생활고로 인해 민심이 흔들리면서 차츰 인민위원회와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결국 미군정과 인민위원회는 3·1사건을 기점으로 대척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도민의 지지를 받는 인민위원회의 인사가

주도한 3·1 가두시위를 좌익의 선동으로 파악하고, 이후 제주를 ‘붉은 섬’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 제주 4·3이다.

한편 대만은 카이로선언으로 중화민국으로의 귀속이 결정되었고, 포츠담 선언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만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중국에 귀속되었고, 동년 10월 25일 국민정부는 陳儀를 대만성 행정장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장관공서를 설치했다. 대만에서의 정치체제는 중국대륙과는 달리 행정장관이 행정법규를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었으며, 특히 군사방면에서는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민정부가 파견한 관료들은 대만에서 정권을 확보하자 경제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대만노예화론을 앞세워 하루 빨리 대만인들의 의식형태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국민정부 측의 통치는 대만인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대만 2·28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와 대만은 종전 이후 미군정과 국민정부의 개입 하에 4·3과 2·28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4·3과 대만2·28에 대한 대다수 기존 연구 성과들은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는 주제에 비중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4·3과 대만2·28에 있어 가장 크게 부각된 공통점이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그 배경인 ‘외부세력’의 개입과 통치 권력의 변화가 민중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지역에 있어 외부세력(이하 외세)의 개입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제주4·3과 대만2·28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외세를 현지에서 자주적으로 구성된 세력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으로서 기존에 현지를 통치하던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았던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제주와 대만의 외세는 각각 미군정과 국민정부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 종식 이후 제주의 인민위원회와 대만의 총독부에서 외세로 통치 권력이 이양된 후 나타난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로 인한 갈등이 집약

1) 정형아·정창원, 「두 번째 중국화 : 전후초기 진의(陳儀)의 대만 ‘심리건설」, 『역사와 실학』 64, 역사실학회, 2017, 305-307쪽.

된 사건으로서의 제주4·3과 대만2·28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미군정의 경제정책이 야기한 제주4·3의 遠因

미국은 카이로 회담 이후에 소련이 일본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루로서 한반도에서의 군정 실시를 갑작스럽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공백을 채우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와 친일 관료, 사법체제와 경찰을 유지하는 등, 일제의 체제를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²⁾

또한 도시 지역의 식량부족 현상과 이에 수반하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도 자유 시장 정책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비료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 하에서 농민들이 오히려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미국의 애초에 기대했던 목적과 달리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 사태가 심화되었다.³⁾

미군정은 방법을 바꾸어 1946년부터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였다. 미군정이 막을 내릴 때까지 지속된 미곡수집령은 미군정이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신한공사가 실시하였다. 문제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식량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구들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군정의 식량정책 변환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1946년 7월부터 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여타의 정치·경제적 화제보다 식량문제가 대두되었다. 아사 사건이 보고되면서는 세간에 루머 또한 돌기 시작했다. 이는 농민들 및 대중 사이에서 미군정에 대한 불만감을 고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⁴⁾

2) 박보영,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사회연구』 6-1,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72-73쪽.

3) 송보영, 『미군정기 식량 통제 정책과 농민 운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의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33-34쪽.

4) 송재경,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18-19쪽.

이 시기 제주에서는 해방 직후 도민의 정치·경제·문화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대체되고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지주통일 독립,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 일제 잔재세력과 파시스트 청산을 통한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노선으로 채택하였다.⁵⁾ 당시 인민위원회는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했던 인사들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 대체로 항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명망 있는 행정관료와 30대 초반의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⁶⁾ 아래의 표는 제주도내 읍·면별 인민위원회 지도부 명단이다.⁷⁾

〈표 1〉 제주도내 읍·면별 인민위원회 지도부 명단

읍·면	직책	이름	나이	출신 지역	직업	항일 경력
제주도 (전체)	위원장	오대진	48	하모	단추제조업	제건야체이카 사건(1932)
	부위원장	최남식	48	제주	교사	
	총무부장	김정로	39	제주	노동	조공 야체이카(1927)
	재정부장	김택수	45	제주	무직	위와 같음
	산업부장	김용해	45	하귀	무직	일본 전협 활동
	보안부장	김한정	50	가파	기자	제건야체이카 사건(1932)
	선전부장	현호경	37	성산	단추공장업	일본 전협 활동
	조직부장	조몽구	38	성읍	무직	위와 같음
	보건후생부	좌창립	38	곽지	의사	
제주읍	위원장	최남식	48	제주	교사	일본 전협 활동
	부위원장	강규찬	31	제주	노동	
애월면	위원장	김덕준	43	납읍	농업	사상서적 탐독
	부위원장	양군옥	45	동귀	하귀1구장	
한림면	위원장	고운선	38	한림	잡화상	제건야체이카 사건(1932)
	부위원장	좌두영				
	서기국장	김행돈	30			전협금속 오사카지부(1935)
	총무부장	김태안	36	한림	농업	제건야체이카 사건(1932)
	문교부장	양관표	36	한림	농업	대판에서 노동운동
	산업부장	고종석				
	선전부장	양병시	30	한림	잡화상	한림노동연구회(1934)
	치안부장	박성관				

5)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과 박사학위논문, 2006, 13-15쪽.

6)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58-260쪽.

7)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58쪽.

	부녀부장 농민부장	오매춘 박성선	53	금악	농업	
대정면	위원장	우영하	59	모슬포	대정면장	제간야체이카 사건(1932) 위와같음 농업학교 맹휴사건(1931) 어린이날 시위사건(1929)
	부위원장	이신호	44	모슬포	주류소매상	
	행정부장	이신호	"	"	"	
	총무부장	윤평석	37	이도	상업	
	선전부장	이운방	37	하모	농업	
	문교부장	문달진				
	치안부장	윤성추	28	강정	무직	
안덕면	위원장	고군철	55	감산	면 서기	
	부위원장	이중환	53	사계	농업	
중문면	위원장	이봉옥	45	회수	농업	
서귀면	위원장	이도백	37	가파	상업	서귀면 독서회 사건(1935) 위와 같음
	부위원장	송태삼	35	서귀	농업	
남원면	위원장	오동학	43	위미	농업	
표선면	위원장(1대)	송건은	60	하귀	상업	
	위원장(2대)	김민추	55	표선	농업	
	부위원장	홍성흡	43	표선	농업	
성산면	문서부장	한순화	32	고성		
구좌면	위원장	문도배	37	세화	농업	제간야체이카 사건(1932) 위와 같음 농업학교 학생운동(1931)
	부위원장	오문규	44	하도	농업	
	서기국장	오화국	32	하도	농업	
	총무부장	고기화	36	하도		
조천면	위원장	안세훈	53	조천	농업	조천소비조합 사건(1939)
	부위원장	조규창	33	신촌	농업	

또한 9월 말부터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노동조합·학병동맹·소비조합 등의 대중단체가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이 단체들 중 특히 청년동맹과 부녀동맹의 경우 인민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인민위원회는 자주국가 건설과 같은 정책 노선의 진행을 위해 좌익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⁸⁾

인민위원회는 제주지방에서 여러 활동을 보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치안활동이었다.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치안대는 일본 경찰의 역할을 접수하였는데, 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것이었

8)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6쪽.

다. 한 예로 일본군이 식량 및 군수품을 수장하거나 소각하자, ‘일본군 물품은 인민의 소유’라는 주장 하에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수장 및 소각방지에 매진했다.⁹⁾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에 협력한 관료들이 도민에 의해 보복을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목적은 주로 혼란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지방은 사망자의 발생이 적었다.¹⁰⁾

또 다른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적산관리였다. 기존에 일본인에 의해 가동되던 작업장들을 해방 후 산업부와 협력하여 관리하였고, 군수품의 경우 일본군이 쓰던 물품을 접수하여 주민들에게 배분하기도 했다. 아래 내용은 안덕면 창천리에서 군수품에 대한 처분을 나타내는 결의문이다.

1. 일본군 재산은 우리의 재산이다. 누구든지 매매할 수 없다.
2. 금일 이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자에게 원가를 돌려주고 재산은 회수한다.
3. 금일 이후에 매매한 재산은 일본군이 철수한 후 몰수한다.

위의 결의문에 따라 창천의 인민위원회는 일본군 철수 후 남은 목재로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¹¹⁾ 또한 미군정이 일제 통치기구를 존속시키면서 부활한 면의 행정기능을 인민위원회에서 간여했다. 면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실시할 때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협의를 하였고, 일부 면에서는 인민위원장이 면장을 겸임하기도 했다.¹²⁾ 이렇게 인민위원회가 도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인사들이 인민위원회 성립 전부

9)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7쪽.

10)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8쪽.

11) 창천리 성청회, 『창천내』, 1987;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8-199쪽에서 재인용.

12)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199쪽.

터 도내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하단체들이 도내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한편 1945년 9월 28일,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해 항복접수팀과 무장해제팀이 상륙하면서 제주지역에서의 미군 주둔이 시작되었다. 9월 30일에는 제주도에 대한 풍문 확인, 행정 및 치안상태 점검, 지방법원사무 위촉을 위해 군정청 관리와 군정장교가 방문하였다. 뒤이어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제24군수지원사령부 전쟁포로과 소속의 선발대가 도착했다.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수효가 많았고 중무장 되어있는 제주도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은 미군에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군의 제주도 진주는 이처럼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제59군정중대와 보병 6사단 제20연대 제51야전포병대대 분견대가 제주도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11월 초에 본격적으로 파견되면서 군정업무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일제하에 사용했던 건물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포고령 제1호에 따라

붕괴된 일제통치기구를 재수립하였다. 또한 일제하에서 재직하던 관료를 그대로 존속하였다. E. Grant Meade는 이러한 미군정의 인사행위에 대해 “군정요원들은 초기에 이 지방 저 지방을 돌아다니며 현 재직자이면 누구든 군정의 이름으로 그의 관직을 승인해 주었다. 많은 시장과 경찰서장 및 기타 지방고관들이 그들의 자격이나 평판이 적절히 조사되지도 않은 채 임명되었다”고 지적했다.¹³⁾ 이는 본질적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기구의 계승이었다.¹⁴⁾

이러한 미군정의 진주 이후 제주는 연이은 흉년과 어획고로 발생한 식량난을 겪었다. 이 사실은 다음의 <표 2>에서 확인된다.

13) E. Grant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6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82쪽.

14)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4-27쪽.

〈표 2〉 1941-1946년간 제주도의 주요 식량생산 현황¹⁵⁾ (단위 : 석)

품종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평균 생산량	비율(%)
쌀	20,102	11,236	19,310	11,151	11,152	14,182	14,522	3.00
대맥	222,509	83,075	124,030	169,642	135,578	61,374	132,701	27.42
소맥	3,475	3,637	3,675	6,940	6,183	2,340	4,375	0.90
관맥	54,740	66,834	77,091	91,551	45,719	20,071	59,334	12.26
조	98,498	93,994	169,346	160,845	88,753	99,684	118,520	24.28
옥수수	43	32	65	93	61	17	51	
교맥	16,972	5,646	12,001	25,103	7,954	11,620	13,216	2.73
대두	14,388	6,007	11,380	19,893	7,889	10,392	11,658	2.40
소두	1,176	631	1,521	2,263	630	1,255	1,246	0.26
고구마	108,339	72,321	192,868	167,608	167,114	113,673	128,487	26.55
합계	540,242	343,413	611,287	604,089	471,033	334,608	484,110	100.00

위의 표에 나타나듯 제주의 토지는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전체 식량생산량 중 쌀의 재배는 3%에 불과했고, 1945년부터 이듬해까지는 총 수확이 평균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다. 어획량 또한 1945년 3백만kg에서 1947년 1백만kg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여기에 해방 후 귀환인구에 따른 인구증가와 모리배의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곡가가 폭등하였다.¹⁶⁾ 다음의 기사를 보자 :

불과 4·5일 간에 일약 배가의 폭등을 본 쌀값은 그렇지 않아도 생활면에서 생지옥의 도탄에 신음하는 일반 소비대중에 심각한 타격을 줘 기아를 앞에 한 인민의 비참한 아우성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보는 요즈음 ...¹⁷⁾

위 기사의 내용처럼 곡가 폭등으로 도민의 불만이 거세지자 미군정은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배급표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도정과 면에

15) 조선은행조사부편(1948), 「조선경제연보」, 地·4면; 진관훈,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0, 111쪽 재인용.

16) 진관훈,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0, 122쪽.

17)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자.

서는 배급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당시 유해진 도지사의 행정 하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1947년 11월 12일부터 1948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었던 감찰에 따른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배급표는 수급자가 아니라 면장실에서 보관한다. 이는 정치가들이 식량배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⁸⁾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식량배급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래 표는 1947년 11월의 제주도 식량 배급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1947년 11월의 제주도 식량 배급현황¹⁹⁾

읍면별	비농가(합)		부분경작자(합)		재산가(합)	
	미곡	잡곡	미곡	잡곡	미곡	잡곡
제주읍	1	-	-	-	-	-
중문면	1	1	0.7	0.8	0.5	0.5
남원면	1	1	0.8	0.7	0.5	0.5
서귀면	1	1	-	-	0.8	0.7
구좌면	1	1	-	-	-	-

위에 정리된 표에 의하면 기존의 식량배급량은 1일 1인당 미곡과 잡곡 각각 1홉이었으나, 실제 분배 상황은 위의 표와 같이 적게 배급되었고, 11월 배급량이 12월 8일까지 전달되지 않기도 하는 등 배급시기 또한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⁰⁾

또한 미군정은 광복 직후부터 무역통제정책을 시행했다. 1946년 1월에 「대

18) Lawrence A. Nelson,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Cheju-do Political Situation>, 제주도연구회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226쪽 : “Ration cards are held in Myun Changs office instead of held by the rationee. This places direct control of food rationing in the hands of politicians.”

19) Peter J. Carroll, Administrative Assistant to Chee, Yong Eun, Director of National Food Administrator & Carroll V. Hill, Advisor, Subj: Operation of Rationing Program in Cheju Do, 3 January 1948;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26쪽에서 재인용.

20)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26쪽.

외무역규칙」을 공포하여 모든 대외거래관계를 미군정의 통제 하에 두었다. 남한지역과 타지역간 물자 및 재산 운수에 대해 군정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7월부터는 조선 이외 지역의 개인·정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특정물품의 거래, 무면허거래를 금지하고 금지된 거래에 대한 면허나 허가권 발급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외국무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미군정과 관계하는 사람들뿐이었고, 무역통제로 인한 물자 공급 제한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했다.²¹⁾ 특히 외부와의 무역을 통해 물자를 공급받는 제주도의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다. 아래 자료는 밀수문제에 대한 미군정의 보고이다.

한국이 해방된 후 많은 밀수업자들은 본부를 제주도에 두고 있다. 그들은 의류나 화장품, 유리, 기타 용품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수한다. 상품은 부산이나 충청남도의 미확인 항구를 통해 한국 전역에 판매된다.²²⁾

“제6사단 보고에 따르면 1월 2일-17일 사이에 미 구축함 1척이 한국해역에서 불법으로 수하물을 선적한 소형 선박 5척을 억류했다. 억류된 물건은 쌀, 면화, 가솔린, 비단 등이 대부분이다. 이 선박들은 제주도나 목포로 가기 위한 것이다.”²³⁾

위 자료를 통해 제주가 중심지역이거나 혹은 중간기착지로서 타지역간의 밀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정에서 지속적으로 밀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한편에서는 해안경비대 대원들이 뇌물을 받고 밀수 행위를 눈감아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미곡수집령은 도민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

행정기관의 곡물수집 공무원 3명이 지난 주 안덕면 동광리에서 곡물수집에 반대해 항의하는 주민 약 50명에게 구타당했다.²⁴⁾

21) 송규진, 「미군정기의 무역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교육』 118, 歷史教育研究會, 2011, 141-143쪽.

22)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320쪽.

23)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103쪽.

2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2쪽.

좌익인사들은 이달 들어 곡물수집에 반대하는 선동문구가 적힌 뼈라를 제주도 전역에 뿌리고 있다. 뼈라에는, “살인 경찰들에게 하루 5홉씩의 쌀이 분배되고, 악질적 테러리스트인 광복청년단(강력한 우익 무장집단)원들의 배만 살찌울 강제 곡물수집 정책을 거부하자”라고 적혀있었다...²⁵⁾

위 내용은 1947년 8월 16일의 곡물수집 공무원 구타사건과 8월 20일 선전문구 배포에 대한 미군정의 일일정보보고이다.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선전문구의 주 내용이 곡물수집이기 때문에 당시의 선전과 공무원 구타사건을 별개의 일로 볼 수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선전문구의 주된 내용이 곡물수집 정책이었다는 것은 당시 도민들에게 곡물수집 정책 관련 내용이 선전효과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군정의 곡물수집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군정은 곡물수집에 대한 소요를 좌익의 선동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존재한다.

한편 미군정이 제주에서 일어나는 소요들을 좌익세력의 선동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3·1사건 이후부터였다. 3·1사건이 일어났던 가두시위와 기념행사는 청년동맹의 後身인 민청 제주도위원회와 당시까지 표면화되지 않았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3·1절을 앞두고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준비위원회의 명의로 각 읍·면에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을 보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각 읍·면에서는 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 기타 각종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 3·1절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
- ② 24일까지 3·1운동의 원인·경과·의의·결과를 10월 인민항쟁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 ...
- ③ 25일로부터 28일까지 각 부락 및 직장대회를 소집하여 3·1시위운동에 전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
- ④ 당일에 지휘자 및 자위대는 반 및 직장별로 동원시켜 시위행렬로 부락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합할 것.

...

2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3쪽.

- ⑧ 이 양양된 인민의 기세를 살려 각 부락 및 직장에서 각종 형태의 대중집회를 가지고 농위·민청·婦同·노조, 기타 독서회·연구회·문화서클 등의 조직 강화를 도모할 것.
- ⑨ 당의 각급 기관에서는 3일 이내에 비판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할 것.²⁶⁾

남로당의 위와 같은 방침은 남로당이 3·1집회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세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명시해준다.²⁷⁾ 미군정은 남로당이 추진한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남로당은 시위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3·1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민들의 분노는 격화되었으나, 미군정과 경찰은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것에 주력하며 이날 초저녁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삼엄한 경계망을 펼쳤다. 뒤이어 대대적으로 체포작전을 전개해 3·1절 준비위원회 간부들을 검속하고 중등학생들을 잡아들였다.²⁸⁾

발포사건에 대한 미군정과 경찰의 대응을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화군중에 대한 발포는 과거의 역사에 유례가 없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볼 수 없었던 포악이요, 해방된 조선에 있어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여사한 현실을 일관할 때 허다한 모순당착이 내포하여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30만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냉정한 입장에서 고찰하고 선량한 인민과 더불어 그 진두에서 용감히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한다.

- ① 민주경찰 완전확립을 위하여 무장과 고문을 즉시 폐지할 것
- ② 발포책임자 및 발포경관은 즉시 처벌할 것
- ③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인책 사임할 것.
- ④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할 것
- ⑤ 3·1사건에 관련한 애국적 인사를 검속치 말 것
- ⑥ 일본경찰의 유업적 계승활동을 소탕할 것²⁹⁾

26) 김용해의 판결문,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69쪽.

27)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269쪽.

28)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3-44쪽.

또한 위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미군정의 명령에 불복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으며,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3·10 총파업’도 단행하였다. 제주도내 직장의 95%이상이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여 총파업에 동참하였는데, 조직적으로 파업을 전개하면서 강력한 투쟁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에 미군정과 경찰은 일시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총파업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며 다시 무차별적으로 총파업을 분쇄하기 시작했다. 이 사후처리는 당시 경찰 총수였던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맡겨졌다. 그는 제주도 도착 즉시 제주 도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3·1절에 발생한 불상사에 접촉(接觸)하여 정치 산업 및 교육 각 기관의 활동이 마비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본관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왔다. 첫째 제주도의 동포제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경비상 안전대책을 가지고 왔다. ... 바라건대 동포제위는 안심하기를, 그리고 경찰과 협력하여 제주도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를, 폭동과 같은 무질서의 행동같이 조선건국의 전도를 위함케 하는 것은 없다. 폭동의 빈발은 조선민족의 정치적 자치력과 도덕적 자율성이 결여함을 세계의 이목 앞에 폭로시켜 우리의 위신과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동포여, 반성 자중하여 일상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³⁰⁾

이 포고문에서는 3·1절 사건을 하나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안전대책에는 타 지방의 경찰들을 대거 투입하여 물리력으로 제주 치안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실제로 발표 다음날 전남, 전북 경찰청에서 2백여 명이 급파되는 등 응원경찰이 속속 증원 되었다.³¹⁾

미군정은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이 파견하고,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투쟁위원회 간부 등 500명을 검속하였다.³²⁾

... 총파업의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3월 1일 폭동 당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 것 같다. 이 증오심은 남로당의 선동으로 고무되

29)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자.

30) 『濟州新報』, 1947년 3월 16일자.

3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21쪽.

32) 강근형 외 9명,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212쪽.

어 왔다.³³⁾

… 시위와 파업, 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불법 시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에 정치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추정된다.³⁴⁾

위 인용문의 출처는 3·10 총파업 이후의 미군정 보고서이다. 자료에서 나타나듯 미군정과 경찰은 총파업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은 무시한 채 ‘남로당의 선동 조작’으로 간주했고, 민심 수습보다는 좌익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미 그들은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³⁵⁾

미군정이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한 이유는 대규모로 일어난 3·1시위를 주도한 주체가 인민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던 남로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시위의 계획부터 남로당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며, 인민위원회와 남로당 사이에 일정 정도 수준의 연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시위의 규모가 컸던 것과 시위에 대한 남로당 및 인민위원회의 영향력, 도민의 호응만을 가지고 제주도 전체를 ‘붉은 섬’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1사건 이후 남로당이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발표한 결의안은 미군정의 통치 하에서 불만이 쌓인 채 사건을 경험한 민중이 정치성향을 차치하고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좌익 척결정책으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결심하였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과 주변 오름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며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³⁶⁾ 350명의 무장대가 이날 새벽을 기해 도내 경찰 24개의 지서 중 12개의 지서를 공격했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사무소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다.³⁷⁾ 이로 인해 경찰 4명, 민간인 8

3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6쪽.

3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7쪽.

3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22쪽.

36) 강근형 외 9명,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214쪽.

명, 무장대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이 행동을 개시하며 뿌린 호소문에 담긴 주장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둘째는 단독선거·단독정부의 결사반대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미군정에 대한 저항을 표명하고 있다.³⁷⁾ 미군정은 이에 대해 군정장관 명의로 경비대의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2. 4월 18일 도착한 두 대의 L-5 연락기는 귀관의 지휘 하에 있다.
- 3. 한국 국방경비대 1개 대대가 추가로 4월 20일 오전 중에 제주도에 도착할 것이다. 도착 즉시 이 대대도 현재의 다른 한국 경비대와 같이 귀관의 작전통제 하에 놓일 것이다.
- 4. 귀관은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귀관의 수중에 있는 군부대를 이용하라.
- 5. 대규모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귀관은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라. ...³⁹⁾

이 명령은 미 군정장관 William Frishe Dean 소장이 제59군정중대 군정장관인 John Sugar Mansfield 중령에게 보낸 ‘제주도 작전’의 일부이다. 진압작전에 앞서 무장대에게 항복을 권유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 김익렬 제9연대장이 무장대와 접촉하였다.⁴⁰⁾

... 작전계획은 ①제9연대가 진압책임을 지고 ②사건발생 당시 폭도들은 경비대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67쪽.

3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67쪽.

39) 주한 미군정 사령부, 「제주도 작전」, 1948년 4월 18일 수산: 제59군정중대, 민정관(Chief Civil Affairs Officer);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3』,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25-26쪽.

40) 김창후,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자료」, 『4·3과 역사』 2, 제주4·3연구소, 2002, 73-74쪽.

를 적으로 삼는 것을 회피하였으므로 경비대가 중간에서 쌍방을 격리하고 ...41)

도외에서 온 경찰대의 무차별 사살은 상호간 너무나 엄청난 살생이 생겼을뿐더러 무력으로서는 도저히 동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경비대의 근본방침은 사살보다는 선무에 주력을 두었다. ...42)

9연대 연대장 김익렬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대표와 회담 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중이니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國警)의 산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 구국항쟁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을 특히 인민과 국경을 이간시키려는 경찰의 모략 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김 연대장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음.43)

위의 자료는 경비대와 무장대 간 협상에서 보인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의 입장이다. 김익렬 중령은 강경진압보다는 선무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였고, 경비대가 도외에서 온 경찰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해결방안 중 하나로 삼았다. 무장대는 협상을 통해 경비대가 계속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고 김익렬을 통해 경비대의 작전을 억제하고자 하였다.44)

이처럼 경비대와 무장대는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미군정의 반대와 우익단체들의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협상이 결렬되자 무장대는 남한 단독선거에 대한 거부투쟁을 전개하였고,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제주도의 선거구만이 무효처리가 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파견하며 강경진압을 전개하였고, 5월 26일에 딘 군정장관이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포고 발표를 하였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고,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연대장이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혼란 속에

4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286쪽.

42)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자.

43)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헌진 4·3의 진상: 소위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 대림인쇄사, 1995, 78쪽.

44) 김용철,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21쪽.

서 1948년 8월에 결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당시 정부는 제주 지역의 봉기에 대해 정치적 요구의 표출이 아닌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11월에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Ⅲ. 국민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만인의 갈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은 식민지 해방을 선전했다. 이에 대만 내에서는 대만인들이 대만 정치에서 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 한결을 더 나아가면 ‘自治’에 대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新竹州會議員이었던 자산가 黃維生을 비롯한 그 친족과 친구 등 수명의 협회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산을 보전하는 최선의 방법이 대만 독립이라 인식하였다. 따라서 당시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 정부의 허용과 승인 하에 전개한다면 대만 독립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인식하여 소재지방행정청에 독립청원을 제출하는 등, 대만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으로는 국민당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대만독립의 언사를 전개하거나, 심지어 몇몇은 대만이 계속 일본의 조계지 신분으로 남아있을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 한 예로 臺中市의 楊貴(楊逵)는 중경정부에 대해 방자하고 횡폭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현재 먼저 행동에 확고한 사상적 기초를 갖추면 장래에 비로소 중경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표현했다.⁴⁵⁾

1943년 카이로선언 이후 국민당을 이끌던 蔣介石은 일찍이 대만을 접수할 준비에 착수했다.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할 방법을 구상하던 과정에서 당시 대만 조사위원회 주임의원이었던 陳儀는 대만이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특수한 체제를 지녀야 하며 국유공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臺灣接管計劃綱要」가 설치되었고, 이는 蔣介石의 비준을 거쳐 최고 지도강령이 되었다.⁴⁶⁾

45)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13期, 國史館, 2007, 49-50쪽.

1945년, 대만은 중국정부의 수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 대만에서는 곧바로 권위적인 통치가 시행되었다. 일본이 투항한 후, 국민정부는 곧 陳儀를 「대만성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 당시의 행정장관은 행정권을 이외에도 대만 경비 총사령관을 겸임하며 군사권을 확보했고, 山西省 太原市 지방 자치법규 제정권까지 관할하는 상당히 큰 권력과 권한을 보유했다.⁴⁷⁾

당시, 대만 민중은 해방군인 국민정부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일본 항복 이후 국민당 군대가 대만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여 일의 정치적 공백기 동안 지방 지도자들과 지식인, 청년 등은 자발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간단체를 조직했다. 「삼민주의청년단」은 곳곳에서 지부를 창설했으며, 항일운동을 했던 陳炯, 林獻堂, 葉榮鐘 등은 「국민정부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민정부를 기다렸다.⁴⁸⁾

하지만 국민정부가 상륙한 후, 주요 공직은 陳儀의 측근으로만 구성되었고, 대만인과의 협의에 의한 통치는 묵살되었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대만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만 내부에서는 국민당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갔다. 1946년 당시 대만 행정부 내 부처장급 이상 관리 21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중국대륙 출신들로 채워졌다.⁴⁹⁾ 게다가 종전 직전에 ‘모의대만독립안’을 주도한 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대만인의 독립에 대한 자발적 움직임을 견제하고 통제했다. 아래 사료는 『警備總司令部週年工作概況報告書』에 나타난 판결문의 일부이다.

辜振甫·許丙·林熊祥·簡朗山·徐坤泉 등 다섯 사람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는 전후에 대만군참모부가 적의 공격을 받도록 교사해 대만독립을 모의했다. … 辜振甫는 … 대만독립을 모의하고,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⁵⁰⁾

46) 김정화, 「2·28 대만 민주항쟁과 연구현황」, 『人文學志』 35,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07, 79쪽.

47) 黃秀端, 「政治權力與集體記憶的競逐—從報紙之報導來看對二二八的詮釋」, 『臺灣民主季刊』 5卷4期, 財團法人臺灣民主基金會, 2008, 104쪽.

48) 지은주·董思齊,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235-236쪽.

49) 신상진, 「대만의 민주화 : 과정과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23권, 한국동북아학회, 2002, 157쪽.

경제 또한 국민당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광복 후 모든 일제의 재산, 즉 대만은행, 석유, 알루미늄, 전력, 제당, 비료를 포함한 관민영이나 독점산업은 국민당 정부가 접수하여 국가의 독점경제체제로 전환시키고 이 산업들을 대만 본토에 있는 애국적 상공업계에 맡기지 않았다.⁵¹⁾ 또한 전매제를 실시하여 경제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아래 표는 해방 이후 대북시 공무원 생활필수품 가격표이다.⁵²⁾

〈표 4〉 대북시 공무원 생활필수품 가격표 (단위 : 元)

	쌀	밀가루	설탕	방직	떨감
1945년 8월	43.73	5.83	5.42	17.00	0.15
9월	33.13	6.67	1.67	38.00	0.15
10월	44.26	6.67	1.25	38.00	0.31
11월	42.00	7.50	1.25	39.37	0.19
12월	59.23	12.10	1.62	42.00	0.22
1946년 1월	88.40	11.11	2.70	42.00	0.34
2월	171.40	10.08	6.21	50.01	0.37
3월	235.85	11.39	9.72	50.00	0.35
4월	218.63	13.75	10.14	50.00	0.38
5월	284.59	17.57	13.30	55.00	0.38
6월	189.92	20.00	19.44	55.00	0.39
7월	184.18	21.67	33.06	55.00	0.44
8월	207.59	22.78	35.83	82.50	0.55
9월	164.30	21.94	31.94	82.50	0.55
10월	193.45	21.11	31.67	120.00	0.50
11월	191.69	22.78	28.33	164.00	0.55
12월	229.23	24.17	28.89	164.00	0.62
1947년 1월	256.17	34.17	32.78	184.00	0.72
2월	393.08	53.33	54.44	184.00	1.00

50) 『警備總司令部週年工作概況報告書』, 臺北 : 警備總司令部, 1946, 94쪽 ;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13期, 國史館, 2007, 50쪽에서 재인용.

51) 藍博洲, 「대만 - 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 42, 역사문제연구소, 1998, 54쪽.

52)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13期, 國史館, 2007, 68쪽.

3월	613.92	68.06	65.28	184.00	1.17
4월	666.92	65.28	66.67	184.00	1.17

<표 4>는 1945년 8월부터 1947년 4월까지 생활필수품의 가격변동을 달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각 품목의 가격이 1945년 4분기를 기점으로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정부가 대만을 발전시키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끊임없이 대만이 보유한 쌀, 석탄, 설탕 등 물자를 대륙으로 운송해 매각하는 등 이전 일본제국과 다른없는 식민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행정장관공서는 미량부족의 잠재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관제조치와 배급제도를 폐지했으며, 대만의 미곡을 대량으로 대륙에 운송해 판매했다.

이와 같은 생활필수물자 배급기강의 혼란과 폐지 그리고 경찰력의 부재로 인해 물가 특히 식량은 비록 공시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암시장가격이 출현했고 끊임없이 급증했다.⁵³⁾ 일본이 점령했던 시기 총독부의 물가 안정화조치와 사회질서유지 측면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10월 25일 이후 대만 행정장관공서의 통치 시기에는 물가폭등으로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 또한 심화되었던 것이다.⁵⁴⁾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대만은 문화적으로도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약 50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은 대만은 언어·문화 등 제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은 깊숙하게 스며들었다. 일본 식민정부는 1896년 국어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고, 1898년에는 공학교를 설립하여 대만인의 소학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이어 1919년과 1922년 두 차례 ‘대만교육령’을 반포하면서 동화정책을 방침으로 삼아 공학교,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대만교육체제를 수립했다.⁵⁵⁾ 당시 국어운동의 최종 목표는 모든 대만인으로 하여금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 국어운동의 추진 결과, 일본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통

53) 蘇瑤瑤,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13期, 國史館, 2007, 69쪽.

54) 정형아,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耽羅文化』 4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4, 159쪽.

55) 김하림·鄭鴻生,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중국근현대사연구』 5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1, 61쪽.

계에 의하면 1940년, 대만의 ‘일본어 해독자’는 전 인구의 51%에 달했다.⁵⁶⁾ 대만인은 식민통치시기 근대적 교육으로 갖추게 된 준법정신과 더불어 이전 청조 통치기에 비해 발달된 의료체계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황민화정책으로 일본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있었고, 일본어 사용이 능숙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오랫동안 일본과의 전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국민당은 일본화된 대만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고, 오랜 기간 일본과 전쟁을 치르던 외성인들은 일본을 적대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만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노예화론’을 앞세웠다.

대만 행정장관공서는 ‘대만노예화론’에 따라 일본어에 능숙하고 일본의 식민지통치체제 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대만인들을 “중국어에 서툴러 능숙하게 공문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인재가 결핍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임용에서 배제시켰다. 陳儀는 수차례 대중을 시찰하며 “조국의 언어, 법률과 역사를 빠르게 학습해야 비로소 한 명의 좋은 국민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대만의 중국화를 호소했다.⁵⁷⁾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인들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조국으로 귀환하고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점점 버리게 되었다. 국민당정부는 일본의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만인을 배척하였고, 대륙출신 인사들의 직위 독점과 더불어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통제정책을 통해 각종 물품의 전매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인과의 이익 경쟁을 불러들여 민중의 원망과 생계곤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대만 2·28이다.

대만 2·28은 1947년 발생한 반정부 항쟁사건이자 양민학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은 1947년 2월 27일, 타이베이 延平北路에서 사제담배 판매자인 林江邁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발하였다. 조사관들은 차마 피하지 못한 林江邁의 사제담배와 현금을 모두 몰수하였고 이 과정에는 그

56) 周婉窈,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산구문화사, 2003, 175쪽.

57) 陳翠蓮, 「去殖民與殖民的對抗: 以一九四六年 臺人奴化論戰爲焦點」, 『臺灣史研究』 9, 2002, 154쪽.

녀는 조사관들에게 애원하였다. 조사관들의 과잉진압을 목격한 시민들은 분개하여 조사관들에게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조사관이 시민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이 연출되자 결국 총을 발포하였고, 구경하던 학생인 陳文溪가 그 총에 맞아 다음날 사망하게 되었다.

2월 28일 발포자를 처벌하라는 등 항의를 하던 시민들에게 국민당 정부가 총격을 가하면서 이는 전국적인 항의사태로 번졌다.⁵⁸⁾ 흥분한 시위대는 외성인(外省人)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구타하고 그들의 소지품을 방화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시위대는 방송국을 점령하여 “대만은 전쟁 후 불량정치로 인해 탐관오리가 횡행하고, 쌀을 외부로 반출하여 민생고가 심해졌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지의 탐관오리를 쫓아내고 유혈진압 생존을 도모하자.”⁵⁹⁾는 주장을 방송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와 전면전을 펼쳤다. 2월 28일 일어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시위는 당시 유혈진압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국민당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갔다. 결국, 국민당이 대만사회와 대만인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한 채 강압적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과욕이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이라는 대만 사회의 아픈 분열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사건이 발발했을 때, 행정공서의 장관인 陳儀는 蔣介石에게 “본성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외성인을 해친다.”라는 보고를 올렸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정부패, 사회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생략된 채 폭동으로 단정 지어졌다. 사건이 거세지자 대만의 각 지역에서는 처리위원회가 생겨났다. 각 지역의 신사계층이 참여한 처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수습에 착수하게 된다. 陳儀는 처리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⁶⁰⁾

대만에 군대가 파견될 것이 확정되자 陳儀의 태도는 돌변했다. 중앙에서 대만으로 군대가 진입하자 陳儀는 시위 주동자를 색출하였고, 호구를 조사하

58) 김혜련, 「[2·28학살사건부터 천수이벤 총격사건까지] - 본성인 - 외성인 갈등의 역사와 대만사회의 비밀」, 『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04, 92쪽.

59) 김정화, 「2·28 대만 민주항쟁과 연구현황」, 『人文學志』 35,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86-87쪽.

60) 허영섭, 『대만, 어디에 있는가』, 채륜, 2011, 299쪽.

여 관련자는 물론 의심되는 자까지 모두 잡아들였다. 이후 蔣介石은 감찰사 楊亮功을 보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차후 대만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보복성 폭력과 “폭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겠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관에서는 국민당군을 투입함과 동시에 무자비한 살육으로 인해 대략 2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

대만 2·28은 국민당이 대만에서 정권을 장악한 지 1년 만에 발생하였다. 국민당의 무능과 강압적 통치방식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였다. 국민당은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고, 그 결과 대만인들은 蔣介石과 국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외성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게 하였다.

대만 2·28 이후 국민정부는 장관공서체제의 개혁과 조정을 진행한다. “장관공서를 省政府로 고치고, 省主席이 경비사령관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며, 省 정부 위원과 각 廳處長은 될수록 대만인을 임용하도록 하고, 縣長이나 市長은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정부기관 중 대만인과 타성인을 모두 평등하게 대하고, 민생공업 중의 公營범위를 될수록 감소시키며, 현행 행정정책에 중앙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⁶¹⁾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인출신의 魏道明을 省主席으로 임명하였다.

사건발생 후 2년 후인 1949년 5월 20일, 국민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후 12월, 국공내전에서 패한 蔣介石은 50만 명의 국민당군을 이끌고 대만으로 入島한다. 대만은 중화민국의 이름아래 국가체제를 갖추었고, 계엄령은 1987년까지 대략 40년 동안 이어졌다.

상술한 내용으로 볼 때, 대만 2·28이 국민당의 강압적인 진압에 의해 발발하였다는 점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국민당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깊이 내제되어 있다. 당초 국민당이 입도했을 때 대만인은 그들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국민당의 모순된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들을 외성인(外省人)으로 규정하며 그들과 다른 족군(族群)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인의 민족의식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한족(漢族)이라는 결속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만의 독특한 족군(族群)관계, 그리고 여러 열강의 지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

61) 김정화, 「2·28 臺灣民衆抗爭과 臺灣意識」, 『사립』 29권, 수선사학회, 2006, 220쪽.

로 한족(漢族), 내지는 중국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한국인과는 차별성을 지닐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해방이후 대만은 같은 한족(漢族) 출신에게 장악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동족이 아닌 외세로 간주된 외래인(外來人)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IV. 맺음말

이처럼 제주와 대만은 종전 후 미군정과 국민정부가 통치를 담당하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제주의 경우 미군정이 통치 초기부터 식량난과 무역 문제, 일제의 잔재를 해결하는데 과오를 범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의 불만을 야기했고 인민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 3·1사건은 도민의 불만과 인민위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분출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후에 빚발친 소요사건의 원인에 대해 미군정은 좌익의 선동으로만 간주했다.

한편 대만의 경우는 일본의 임시관리 기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사회경제적 양상이 국민정부 접수 후 빠르게 붕괴되었다. 대만인들의 기대와 달리 국민정부는 대만의 물자를 대륙으로 유출해 대만 내의 경제를 곤경에 빠트렸다. 또한 대만노예화론을 내세워 대만인들을 정치에서 배제시켰고, 부정부패를 행하면서 대만인의 반감을 조장했다. 이러한 국민정부 측의 차별정책은 당시 대만인과 외성인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대만 2·28이 일어났다.

제주 4·3과 대만 2·28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도 있겠다. 두 지역 모두 전후처리과정에서 ‘외세’라고 규정할 수 있는 미군정과 국민정부가 유입되었다. 이들은 현지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갈등을 유발하였다. 미군정은 제주의 상황을 좌익세력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제주를 ‘붉은 섬’으로 인식하였으며, 국민당이 파견한 대만의 통치권력은 대만 2·28을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이라 보고하며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즉, 제주와 대만 모두 자국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부를 구성함과 아울러 식민시기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민중의 불만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측면

을 이유로 한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도외(島外)에서 들어온 세력들과 현지인 사이의 모든 갈등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제주 4·3과 대만 2·28이었다.

상술한 내용에 기반할 시, 제주도에서의 외래인은 미군정이며, 대만에서의 외래인은 국민당이다. 물론 제주의 경우 미군정이 외래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국민당은 대다수의 대만인과 같은 한족이자 전후 국민당의 유입을 환영한 대만의 경우에는 국민당을 외래인이라 칭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대만의 경우에는 먼저 대만의 독특한 족군(族群)관계를 봐야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2·28을 기준으로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으로 나뉘었으며, 본성인(本省人)은 다시 객가인(客家人 : 漢族), 민난인(閩南人 : 漢族), 원주민(原住民)으로 나뉜다. 한족(漢族)의 경우에는 대만이 서양열강과 정씨(鄭氏) 집안, 청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량 유입되었다. 하지만 청을 제외한 서양열강, 정씨집안,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의 대만은 중국 본토와는 다른 국가로 인식되었고 분류되었다.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탐라시대를 제외한 고려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동안 이미 한반도내 부속도서로서 인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주민을 제외한 대만인들은 한족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인식은 낮다는 추측이 가능하나, 제주인은 한반도내 구성원, 즉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대만인은 한족이라는 유대감은 있지만 중국과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은 낮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겠으며, 이는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대만 2·28을 기점으로 하여 국민당과 함께 유입된 한족들은 대만인 입장에서 보면 외래인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폭력이라는 성격을 지닌 제주 4·3과 대만 2·28은 연구에 있어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연관시켜 연구하는 글이 많아지고 있고, 연구뿐만 아니라 제주 4·3 피해 유족들과 대만 2·28 피해 유족들과의 교류도 또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두 사건을 연관시키는 이유를 단지 국가폭력적인 측면으로 단정시키는 느낌이 강하다.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 4·3과 대만 2·28에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욱이 당시 동아시아 정세 내에서 왜 이런 사건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이라는 기존의 공통점이 아닌, 외세의 개입과 그들이 시행하였던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이라는 배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외세의 통치가 제주와 대만에 끼친 영향과 그 결과로서 제주 4·3과 대만 2·28을 탐색해 보았다. 두 사건의 연구교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두 사건을 모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떠나질 않는다. 따라서 필자들은 오히려 외세의 개입,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외세의 모순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현지인들의 분노를 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제주 4·3과 대만 2·28이라 파악했다.

참 고 문 헌

1. 신문 및 자료집

『국제신문』

『濟州新報』

제주4·3연구소 편,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
편 1』,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
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주한미군사령부, 「제주도 작전」, 194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Cheju-do Political Situation>

2. 논문 및 저서

강근형 외 9명,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직후 지방정치 연
구」, 『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1991.

김용철,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김정화, 「2·28 臺灣民衆抗爭과 臺灣意識」, 『사림』 29권, 수선사학회, 2006.

김정화, 「2·28 대만 민주항쟁과 연구현황」, 『人文學志』 35,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2007.

김창후,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자료」, 『4·3과 역사』 2, 제주4·3연구소, 2002.

김창후, 「『넬슨 특별감찰보고서 ; 제주도의 정치상황』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김창후, 「『넬슨 특별감사보고서 ; 제주도의 정치 상황』 해제」, 『제주도연구』 17, 제주
학회, 2000.

김하림, 鄭鴻生,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중국근현대사연구』
5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1.

- 김혜련, 「[2·28학살사건부터 천수이벤 총격사건까지] - 본성인 - 외성인 갈등의 역사와 대만사회의 비밀」, 『인물과사상』 75호, 인물과사상사, 2004.
- 藍博洲, 「대만 - 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 42, 역사문제연구소, 1998.
- 문창송 編,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소위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주, 대림인쇄사, 1995.
- 박보영,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사회연구』 6-1,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집회와 총파업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 송규진, 「미군정기의 무역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역사교육』 118, 歷史教育研究會, 2011.
- 송보영, 『미군정기 식량 통제 정책과 농민 운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송재경,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신상진, 「대만의 민주화: 과정과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23권, 한국동북아학회, 2002.
- 양정심, 『濟州4·3抗爭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형아,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耽羅文化』 4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4.
- 정형아·정창원, 「두 번째 중국화: 전후초기 진의(陳儀)의 대만 ‘심리건설」, 『역사와실학』 64, 역사실학회, 2017.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 주완요 지음, 손준식·신미정 옮김,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2003.
- 지은주·董思齊, 「신생 민주주의 과거청산의 정치적 동학: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 진관훈, 「해방 후 제주도 경제와 ‘4·3」, 『탐라문화』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허영섭, 『대만, 어디에 있는가』, 채륜, 2011.
- 허호준,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5·10 선거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13期, 國史館, 2007.
- 陳翠蓮, 「去殖民與殖民的對抗: 以一九四六年 臺人奴化論戰爲焦點」, 『臺灣史研究』 9卷 2期, 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2002.

黃秀端,「政治權力與集體記憶的競逐—從報紙之報導來看對二二八的詮釋」,『臺灣民主季刊』5卷4期,財團法人臺灣民主基金會,2008.

Abstract

Impact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Foreign Powers After the War

- Indirect Causes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Taiwan February 28 Inc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economic Factors -

Byeon, Hyeon-Jeong·Go, Gyeong-A, Sun-Ju·Song,
Eun-Gyeong·Jung, Chang-Won

This study focused on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Taiwan February 28 Incident as the result of the intervention of foreign powers and all the conflict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handling postwar issues in Taiwan and Joseon that were Japanese colonies. Both the two incidents were the white terrors committed by the governments and innocent people were massacred. At the Cairo Conference, it was agreed to establish a trusteeship in Joseon and to return Taiwan to the Republic of China. Under the trusteeship, the United States utilized the system of the Japanese Empire, and made people's life even harder.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rule, many activities of the People's Committee were observed. In particular, the People's Committee was in charge of public security in each region, and Jeju was no exception. The committee had a broad base of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farmers, workers and women, but it must have been an eyesore to the U.S. military. In the meantime, a street demonstration was staged in Jeju to celebrate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U.S. military

rule took this opportunity and decided to eradicate leftists, recognizing Jeju as the 'Red Island.' The South Korean Workers' Party rose up in arms against the action of the U.S. military rule on April 3, 1948, and innocent people were indiscriminately killed in the course of suppression.

As Taiwan was returned to the Republic of China, the Kuomintang of China came to power. Chen Yi (陳儀),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Administration, wielded absolute power and started to rule Taiwan in earnest. The Kuomintang's rule over Taiwan, led by Chen Yi, moved in a wrong direction without understanding the circumstances of Taiwan. Taiwan experienced serious infl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monopoly system by the Kuomintang government and the disposal of goods to Mainland China. Back then, Taiwanese people experienced modern education and medical systems in the era of Japanese Colonialism. In particular, the Japanization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made Taiwanese people familiar to Japanese culture in the process. The leadership of the Kuomintang government thought Taiwanese people were enslaved by Japa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situations. On the contrary, Taiwanese people started to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monopoly of public posts and corruption of the Kuomintang government. They gradually came to abandon their expectations for going back to their homeland, and called themselves *benshengrens* (本省人, meaning people of this province), keeping their distance from *waishengrens* (外省人, meaning people of non-Taiwan provinces). A clash that occurred against this backdrop was the February 28 Incident. In other words, foreign powers that flew into Joseon and Taiwan due to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after Japan's defeat came into conflicts with natives, resulting in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Taiwan February 28 Incident.

Key words : handling postwar issues, foreign power, Jeju April 3 Incident, Taiwan February 28 Incident

교신 : 정창원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E-mail: caul6a@empal.com)

논문투고일: 2018. 07. 20

심사완료일: 2018. 10. 11

게재확정일: 2018. 10. 13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한철호*

- I. 머리말
- II. 제주 4·3 사건 목차와 성격
- III.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그 특징
- IV. 제주 4·3 사건 구성 요소와 그 특징
- V. 맺음말 : 향후 제주 4·3 사건 집필 방향

국문요약

제주 4·3 사건은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사건의 발생원인과 성격 혹은 평가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제주 4·3 사건 관련 내용, 이를 토대로 집필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경향과 구성 요소 및 그 특징을 고찰한 다음, 향후 『한국사』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의 집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제주 4·3 사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행히 2018년 7월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 6개 중에 ‘제주 4·3 사건’이 들어갔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은 ‘통일 정부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hanch777@dongguk.edu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서술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서술할 지면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계열성을 고려해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분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 폭력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평화와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모범적인 사례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주 4·3 사건을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넣음으로써 서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많은 분량을 서술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구성·서술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한국사』는 대체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주 4·3 사건의 개요를 비교적 충실히 서술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제주 4·3 사건의 명칭뿐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학계 성과를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본문 외에 다양한 사진·자료와 코너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 4·3 사건은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분단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평화·인권의 소중함과 화해·상생의 메신저로 내세울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제주 4·3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관련 연구자·연구소·단체들도 교재와 자료를 개발·제공해주어야 한다.

주제어 : 제주 4·3 사건,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한국사』

I. 머리말

올해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오랫동안 그 진상이 은폐·왜곡됨으로써 객관적 사실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행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1999년 12월 국회의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0년부터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의 구성, 2003년 8월 국무회의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그해 10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의 최종 확정 및 정부의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사과 등으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견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주 4·3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음 접하는 중·고등학교 역사 혹은 한국사 교과서를 꼽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검정교과서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역사교육의 논리보다는 정권의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교과서의 이념 성향 여부를 가름하는 일종의 잣대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만을 세밀하게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현대사의 논쟁점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부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 결과 제주 4·3 사건의 서술 내용과 그 의의를 비교 분석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역사교육학 관점에서 제주 4·3 사건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필자 역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교육과정·준거안과 이를 토대로 집필된 교과서의 서술을 유기적으로 살펴해보았으나 역부족이었고, 그 대상도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와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에 한정된 것이었다. 최근에는 역사교육과정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 관련 내용을 폭넓게 분석한 성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서술했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¹⁾

1) 김득중,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서술 분석」, 『4·3과 역사』 8, 2008; 지수걸, 「한국 근현대사 논쟁과 10학년 『역사』 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교육과정·집필기준을 토대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 새로 집필될 교과서의 기준으로 확정 공고된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집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제주 4·3 사건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의 목차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내용과 구성 및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집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제주 4·3 사건 목차와 성격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관의 변화보다는 6·25 전쟁(한국전쟁)·10월 유신 등 정치적 사건 혹은 정권 교체를 계기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권의 성향과 논리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²⁾ 그 결과 역사교육과정은 이념공세의 터전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제정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역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특정집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것이었다.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표1>과 같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은 2007·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집필

109, 2009; 박태균, 「한국현대사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와 교과서 수록 방안」, 『역사학보』 205,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역사교육』 116, 2010; 박진동, 「해방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 205, 2010;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 103, 2011; 조한준, 「역사와 교육과정 내 제주 4·3관련 내용 분석」; 도면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 관련 서술 분석」,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등 참조.

2)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최상훈, 「역사와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등 참조.

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교육과정의 大綱化 원칙에 따라 대단원을 포괄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 교육과정보다 더 대강화하여 제시했던 탓에 특별히 제주 4·3 사건을 서술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나마 “(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라는 항목 정도가 제주 4·3 사건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었다.

〈표 1〉 2009·2011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제주 4·3 사건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시기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시기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 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나)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	②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 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전쟁의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서술하고 휴전선의 형성과 남북의 대치 과정을 기술한다. 전쟁에 따른 물질·인적 피해를 서술하고, 남북 간의 대립과 이산가족의 고통 등 전쟁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다. 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과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음에 유의한다. 전쟁 이후 남·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

을 비교하도록 한다. 6·25 전쟁이 미친 주변 국가의 국제 정치적 위상 변화 등에 유의한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베트남·독일 등의 사례에도 유의한다.
--

그런데 집필기준에는 이전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및 친일과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라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기준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집필기준에 제주 4·3 사건이 명시됨으로써 집필자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이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성격을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규정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로 그 앞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는 간접적으로 제주 4·3 사건이 자칫 5·10 총선거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거나 당시 좌우 대립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제주 4·3 사건이 단순히 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혼란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의 주민이 희생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한국사』에 제주 4·3 사건을 서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대단원명은 교육과정에 의거해 8종 모두 동일하지만,³⁾ 대단원 아래 중·소단원의 구성은 출판사별로 다르고 중단원명과 소단원명, 소주제명도 각각 다르다. 특정한 대단원의 목차 구성은 출판사별로 집필자의 역사교육적 고민에 따라 이루어지며, 중요한 사건이나 용어는 중단원이나 소단원, 소주제별로 따로 구성된다. 역사교육적 고민이란 해당 단원 또는 주제가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학생이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게 하거

3) 현행 역사과의 중·고등학교의 각종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대단원명은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과정 대강화 정책에 따라 중단원 및 소단원, 소주제는 집필진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제목을 정하고 있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도 이를 따르고 있다.

나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집필자의 역사교육적 고민은 한정된 지면 내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기도 한다.

결국 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구성하며, 자신의 역사교육적 고민을 구현하기 위해 대단원 안의 목차를 구성한다. 8종의 『한국사』는 현대사 단원인 VI단원에 58~72쪽을 할애하였다. 크게는 14쪽이라는 분량의 차이가 나지만, 각각의 교과서는 정해진 지면 안에서 본문과 각종 요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했던 것이다. 제주 4·3 사건은 현대사 단원인 VI단원 안에서 첫 번째 중단원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교과서별로 중단원 내 제주 4·3 사건이 들어간 목차 구성(<표2>)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학사는 ‘1.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중단원 아래 세 번째 소단원 ‘3) 미·소 공동 위원회와 단독 정부 수립 활동’의 세 번째 소주제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안에 제주 4·3 사건을 서술하였다. 이에 앞선 2개의 중단원의 제목은 ‘1)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 ‘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인데, 이는 대단원 안에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인 냉전과 아시아의 공산화 물결이라는 세계사의 배경 속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공산화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한 단독 정부 수립 활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를 방해하는 좌익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각각 설정하고 그 안에서 제주 4·3 사건을 파악했던 것이다. 다음 소단원 ‘4) 남북한에서의 좌우익 투쟁과 정부 수립’에서는 두 번째 소주제인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에서 좌익 세력의 방해 등으로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목차 상으로만 보면, 자연스럽게 제주 4·3 사건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한 좌익의 활동으로만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

금성은 중단원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에서 9개의 소주제를 설정했는데, 그 중 세 번째·네 번째 소주제인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과 ‘5·10 총선거 실시’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다. 그에 앞선 소단원에서는 세계사적 배경인 냉전과 8·15 광복으로 생긴 해방 공간 속에서 신국가 건설 운동을 펼치는 한

반도를 조명했던 사실로 미루어, 그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갈등하는 가운데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의 제주 4·3 사건 관련 목차

교학사	금성
1.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 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 3) 미·소 공동 위원회와 단독 정부 수립 활동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 ·미·소 공동 위원회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4) 남북한에서의 좌우의 투쟁과 정부 수립 ·북한에서의 정권 수립 과정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⁴⁾ ·친일파 청산의 과제 2. 6·25 전쟁 1) 소련의 적화 전략과 김일정, 중국 2)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⁵⁾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냉전의 기운이 동아시아로 확산되다. 2) 8·15 광복과 신국가 건설 운동 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 연합의 결정 ·남북 협상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5·10 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농지 개혁 ·친일파 청산의 과제 2.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3.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 기본권의 성장 1) 자유의 종이 울리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⁶⁾ ·4·19 혁명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1. 동아시아에 냉전이 확산되다 2.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광복을 맞이하다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다 ·3국 외상 회의에서 한국 독립 방안을 결정하다 ·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다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 3.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4. 6·25 전쟁이 일어나다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통일 정부 수립 운동 2) 좌우의 세력의 갈등 3)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다 ·남북 협상이 진행되다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다 4)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2. 6·25 전쟁
미래엔	비상교육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1)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냉전 체제의 형성 2) 광복과 미·소 군정 3) 통일 정부 수립 운동 ·미·소 공동위원회, 무기한 연기되다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다 ·유엔 소총회, 남한 단독선거를 결의하다 ·김구와 김규식, 남북 협상을 전개하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나다	1. 냉전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냉전 체제가 등장하다 2) 광복과 함께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좌절된 친일파 청산 ·농지 개혁의 단행 ·북한 정부의 수립

지학사	천재교육
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냉전 체제의 성립 (2) 8·15 광복 (3)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 (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다 ·단독 총선거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다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2. 6·25 전쟁	1. 냉전의 전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주제 1.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의 형성 ·연합국의 전후 처리 ·유럽에서의 냉전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주제 2. 8·15 광복과 통일 국가 수립 운동 ·8·15 광복과 미·소 양군의 진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좌우 대립 ·미·소 공동 위원회와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주제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 ·북한 정부의 수립

두산동아는 두 번째 중단원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아래 다섯 번째 소단원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다. 냉전의 세계사적 배경 속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미·소의 갈등 속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 가운데 제주 4·3 사건이 배치된 것이다. 비록 제주 4·3 사건이 소제목으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그 성격을 규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리베르스쿨은 첫 번째 중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3)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의 세 번째 소주제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에서 제주 4·3 사건이 들어갔다. 이처럼 소주제명에 제주 4·3 사건을 명시한 것은 학습자에게 이 사건의 위상과 중요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주 4·3 사건은 그 앞의 소주제명

- 4)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5·10 총선거는 성공리에 실시되었다.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는 이듬해에 선거가 실시되었다.”(307쪽).
- 5) ‘더 알아보기 : 공산 빨치산(조선 인민 유격대)의 활동’ “한반도에는 광복 직후 남로당의 활동을 통하여 전투적 성격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대구 10·1 사건을 일으키고,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였다.”(312쪽).
- 6) “이승만 정부는 집권 초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실업자 급증과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컸으며,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사회가 어수선하였다.”(385쪽).

인 ‘통일 정부 수립 운동’과 달리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미래엔은 첫 번째 중단원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내 세 번째 소단원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의 다섯 번째 소주제명으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를 붙였다. 이는 리베르스쿨과 동일하지만, 제주 4·3 사건을 단독 정부 수립이 아니라 통일 정부 수립 운동으로 파악한 점은 다르다. 또 목차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다음 소주제명으로 유일하게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나다’를 제시함으로써 제주 4·3 사건과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첫 번째 중단원 ‘1. 냉전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의 첫 번째 소주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다. 여기에는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지학사는 첫 번째 중단원인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내 네 번째 소단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세 번째 소주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다’에서 제주 4·3 사건을 서술하였다. 이는 그 앞 소주제 ‘단독 총선거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다’와 짝을 이루면서 제주 4·3 사건을 단독 총선거 반대 움직임으로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천재교육은 첫 번째 중단원 ‘1. 냉전의 전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주제3.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첫 번째 소주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는 제주 4·3 사건의 명칭만 간단히 제시되었고, 두 번째 소주제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 사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하나의 소주제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사』 8종의 목차에서 제주 4·3 사건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는 집필기준에 의거해 제주 4·3 사건은 모두 중단원 ‘정부 수립’ 아래 배치되었지만, 소단원에서는 편차가 나타났다. 제주 4·3 사건이 들어간 소단원의 소재목은 집필기준을 거의 충실하게 적용해서 정부 수립을 위한 갈등(금성),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사건(리베르스쿨),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천재교육), ‘단독 총선거를 반

대하는 움직임(지학사) 등이거나 단순히 정부의 수립(비상교육)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필기준과 달리 제주 4·3 사건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나 운동(두산동아, 미래엔)으로 파악한 것도 있는 반면, 단독 정부 수립 활동에 대한 좌익의 방해(교학사)로 간주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소주제명은 본문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제주 4·3 사건에 대한 관점과 서술 방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소주제명이지만 제주 4·3 사건을 적시한 것(리베르스쿨, 미래엔)은 학습자에게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그 특징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는 제주 4·3 사건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어 있다.⁷⁾ 이를 근거로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경향을 편의상 배경, 주도세력과 경과, 결과와 피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 4·3 사건의 배경에 관해서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혹은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의거한 듯 1947년 3·1절 기념대회를 거행한 뒤 시가행진하던 도민에게 경찰이 발포한 것을 계기로 서술한 교과서가 많았다(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 본문에는 없지만 하단코너에 기술된 것도 있다(비상교육). 이는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6종 가운데 한 곳에서만 1947년 3월 1일 기념대회를 서술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만하다.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이에 대한 서술이 없다.

7)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536쪽.

그러나 이 내용은 교과서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예컨대, 교학사는 이 대회에서 남로당 제주 도위원회가 조직총동원을 내려 각종 구호를 외치게 했으며, 당일 기마경찰이 모르고 아이를 쳤음에도 시위를 구경하던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갔기 때문에 경찰이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서술하였다. 이를 보면 경찰의 발포 원인이 아이를 친 지 모르는 기마경찰에게 항의하기 위해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간 데 있는 듯하다. 이는 사실에도 어긋난다. 또 금성은 남한의 단독 선거에 따른 갈등이 가장 컸던 곳이 제주도였다는 전체 아래, 경찰의 발포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에 미군정청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 단체가 오히려 강압적으로 대응해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자세히 경과를 썼다. 천재교육은 도민들이 시위에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으며, 미군정이 파견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 주민들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고 자세히 서술하였다. 미래엔은 경찰의 발포로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자 검거과정에서 수많은 일반인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고 기술하였다. 비상은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교를 비롯한 주민 6명이 죽었고, 분노한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두산동아는 경찰의 발포를 계기로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 간단하게 적었다.

다음 제주 4·3 사건의 주도세력을 살펴보면, 남로당(교학사), 남로당 제주도당(금성, 천재교육), 남조선 노동당(리베르스쿨, 지학사), 좌익 중심의 무장대(두산동아), 좌익세력(미래엔),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비상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집필자의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지만, 좀 더 명확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듯하다. 또 주도세력의 목적이나 원인에 관해서는 5·10 총선거 반대(교학사, 리베르스쿨), 단독 선거 반대(지학사), 단독 선거 반대와 미군 철수(금성), 미군 철수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두산동아, 비상교육),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미래엔, 천재교육) 등을 꼽았다. 5·10 총선거 혹은 단독 선거 반대가 많았지만, 이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으로 달리 표현하거나 미군 철수를 서술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들 중 교학사는 중단원을 달리해 본문이 아닌 하단 코너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시 언급했는데,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두 번째 중단원 ‘2.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아래 첫 번째 소단원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의 ‘더 알아보기 : 공산 빨치산(조선 인민 유격대)의 활동’에서 광복 직후 남로당의

활동을 통해 전투적 성격을 가진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였다고 서술하였다(312쪽). 즉, 제주 4·3 사건의 주도세력은 남로당에서 남로당 내 일종의 과격파 공산주의자들로, 그 목적이 총선거 반대에서 노골적인 대한민국의 건국 저지로 각각 바뀌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혹은 단독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쓴 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건국 저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지지’로 직결되는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은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왜곡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여겨진다.

주도세력의 무장봉기 후 경과에 대해서는 경찰서(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와 공공 기관(교학사)이나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천재교육)를 습격했다고 서술한 것도 있고, 경찰·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두산동아)고 쓴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무장봉기에 대응해서는 이승만 정부가 군인·경찰·우익 단체들을 동원해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금성), 미군정이 극우 청년들·경찰·군대를 파견해 진압에 나섰다(리베르스쿨), 미군정이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미래엔), 정부는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다(지학사), 미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섰다(천재교육)는 등으로 서술되었다. 본문이 아니라 하단 코너에 미군정과 정부가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진압했다고 쓴 것도 있다(비상교육). 진압의 주체를 정부로 보기도 하고 미군정으로 파악하기도 했으며, 양쪽을 모두 거론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드러난다. 진압에 동원된 세력도 군인·경찰·우익 단체를 모두 적시한 것도 있지만, 한 두 개만 적은 것도 있다. 단, 교학사는 무력 진압을 전혀 쓰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을 수습”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제주 4·3 사건의 결과에 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본문이나 본문 외 구성 요소에서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3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단, 교학사는 소단원을 달리해 남한의 정부 수립 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5·10 총선거는 성공리에 실시되었다.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는 이듬해에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서술하였다(306쪽).

무고한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단순히 많다거나(교학사, 두산동아) 큰 피해를 입었다(리베르스쿨, 지학사)고만 서술한 것도 있는 반면 2만 5

천 명 이상(금성) 혹은 수만 명(비상교육, 천재교육)으로 적는 등 편차가 있다. 미래엔은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지만 오랜 기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교학사에는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과 더불어 유일하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는 사실이 서술되었다. 이처럼 양측의 희생자 수를 밝히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서술한 것은 마치 양측 모두 비슷한 희생을 당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학살 및 피해 규모,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주체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 본문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에 희생자와 피해 상황을 기록한 것들도 있다. 두산동아는 사진설명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제주시민 약 28만 명 중 희생자가 2만 5천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하였다. 리베르스쿨 역시 하단 코너 ‘도움글’에서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서 ‘토벌대’가 제주도 169개 마을 중 3분의 2 이상인 130여 개 마을을 불태웠으며, 희생자는 2만 5천 명~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하였다. 미래엔은 사진 설명에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당시 제주 주민의 10%가 넘는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지학사는 날개단애 희생자들의 인원이 아니라 신고 건수를 제시했는데, 신고 건수는 희생자 수에 크게 못 미치는 사망자 10,715건, 행방불명 3,171명이다. 이들 가운데 피해 상황과 희생자 수를 제주도(민) 전체의 비율로 제시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적은 것보다 얼마나 무고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3〉 제주 4·3 사건의 본문 내용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로스쿨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
배경	1947년 3·1절 기념 대회 경찰의 발포	○	○	○		○	○		○
	미군정청의 강압 대응		○						○
주도세력	남로당	○							

	남로당 제주도당		○					○
	남조선 노동당				○		○	
	좌익 무장대			○				
	좌익 세력					○		
	공산주의자						○	
무장 봉기 목적	총선(단독 선거) 반대	○	○		○	○		○
	단독 정부 수립 반대			○			○	
	통일 정부 수립		○			○		
	미군 철수			○			○	○
경과	경찰서 습격	○					○	○
	공공 기관 습격	○						
	우익 단체 습격							○
대응	정부의 군인·경찰·우익 단체 동원과 대규모 진압		○					
	정부의 병력 투입과 진압						○	
	미군정의 군인·경찰· 우익 단체 파견과 진압				○			○
	미군정					○		
	미군정·정부의 군대·경찰 동원과 진압						○	
	많다	○		○				
희생 자	큰 피해				○		○	
	2만 5천 명 이상 희생		○	○	○	○		
	수만 명						○	○
	희생자 신고 건수						○	
	경찰·우익의 피살	○						

Ⅳ. 제주 4·3 사건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

교과서는 본문과 각종 사진·도표·자료, 그리고 탐구활동 등 각종 코너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 관계를 맺으면서 완성도를 높여준다. 특히 집필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어떤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본문 외의 요소로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역사교육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인식·이해력·판단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서들 중에는 주제에 따라 본문보다 구성 요소의 분량이 더 많은 경우도 많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도 교과서의 본문과 그 외의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그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학사는 본문 이외에 사진자료와 날개단의 용어설명을 제시하였다. 용어 설명은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를 실었다.⁸⁾ 사진은 ‘제주 4·3 사건 때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설명글이 달려 있다. 이는 동일한 사진에 ‘제주 4·3 사건 당시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금성·비상교육의 설명글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 사진의 설명에서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라는 구절은 무력진압을 전혀 쓰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을 수습”하였다는 본문의 내용과 짝을 이루면서 군경이 적어도 대규모 학살과 무관한 채 제주도민을 보호했다는 느낌을 주는 듯하다.

금성은 날개단의 사진자료와 용어설명, 그리고 하단의 ‘더 알아보기’로 구성하였다. 사진은 교학사와 동일한 것인데,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용어설명도 국회의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거의 동일하며, 본문에 서술하지 않았던 1949년 제주도의 선거 실시 사실을 추가함으로써 제헌 국회에 제주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 하단 코너의 ‘더 알아보기’는 ‘제주 4·3 사건,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문(2003. 10.31)’과 사진(‘제58주년 4·3 희생자 위령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제시한 다음, 1980년 후반 이후 진상 규명 움직임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 및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사실을 간략하게 적었다.

8) 날개단의 용어설명 ‘제주 4·3 사건’은 초판인 2014년에는 없었지만, 2016년판에는 추가되었다.

이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평화와 인권 문제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부각하려 한 듯하다.

두산동아는 교학사와 마찬가지로 날개단의 ‘제주 4·3 평화 공원 위령탑’ 사진자료만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사진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희생자 수를 밝히고, 2003년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간단히 서술한 설명글이 달려 있다. 정부의 사과 후 2008년에 조성된 평화 공원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이 지닌 평화의 이미지로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된다.

리베르스쿨은 날개단의 사진자료와 하단의 ‘도움글’을 제시하였다. ‘서북 청년회’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남한으로 넘어온 이북 5도의 청년들이 결성한 우익 반공 단체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설명글이 달려 있다. 이로써 본문에 언급된 ‘극우 청년들’은 바로 서북청년회 소속임을 알 수 있다. 하단 코너의 ‘도움글’ 제목은 ‘제주 4·3 사건과 진상 규명’이며, 제주 4·3 사건 당시 토벌대의 무자비한 진압에 따른 피해 현황을 서술하고,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소개하면서 희생자의 숫자를 제시하였다. 단, 여기에서 근거로 들은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의 오기이다. 여기에서 이에 짝해 실린 ‘제주의 학교 운동장에서 무장대 협력자를 가려내는 심문반’ 사진은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미래엔은 하단 코너 ‘사건 속으로’의 ‘제주 4·3 사건’에서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 보고서(2003)’를 자료로 제시한 뒤, 특별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및 사과, 명예 회복 노력을 서술하였다. ‘과거사 정리 기본법’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서술한 것은 두 사건의 관련성을 시사해준다. 이에 짝하는 사진자료로 ‘제주 4·3 평화 공원 모자상’을 넣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본문에서 서술하지 않았던 희생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상교육은 하단 코너 ‘사건 속으로’의 ‘제주 4·3 사건’에서 본문에서 간략하게 서술했던 배경과 경과 및 희생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사과를 덧붙였다. 이에 짝하는 사진은 교학사·금성과 동일한 것으로, 제목은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이다.

지학사는 사진이나 하단 코너 없이 날개단의 ‘제주 4·3 사건의 발발과 전개’에서 제주도 3·1절 기념식 이후 사건의 경과와 피해 상황,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제주 4·3 평화 재단(2008) 설립을 서술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 상황은 희생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신고 건수이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본문의 내용보다 날개단의 설명이 분량도 더 많고 내용도 더 자세한 점이 특이하다.

천재교육은 하단 코너의 ‘생각넓히기’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이라는 주제로 ‘특별법’, 진상 조사 보고서,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소개하고,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서술하였다. 또 교과서들 중 유일하게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누리집을 알려주고 “‘제주 4·3 사건’ 방에서 전개과정을 더 알아보자”라는 학생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누리집을 통해 제주 4·3 사건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좀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 이와 짝하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 모습(2009)’ 사진도 과거의 사건 진상보다 미래의 화해·평화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구성 요소를 통해 다양하게 제주 4·3사건에 관해 서술하였다. 단순히 사진이나 추가 설명만을 넣은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하단 코너를 설정해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최근의 진상 규명 및 화해·인권을 강조하였다. 본문에서 주로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 등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반면,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는 최근의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해결하거나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본문과 짝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과거의 진상 규명과 미래의 당면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면의 제약 탓으로 여겨지지만, 학생 스스로가 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탐구활동 등은 매우 적었다고 판단된다.

〈표 4〉 제주 4·3 사건의 본문 외 구성 요소

교학사	사진자료(제주 4·3 사건 때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날개단)용어설명(제주 4·3 사건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금성사	(날개단)사진자료(제주 4·3 사건 당시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들) (날개단)용어설명(제주 4·3 사건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 5·10 총선거 미실시 및 1949년에 3개 선거구 중 2개는 실시하였음) (하단 코너)더 알아보기(제주 4·3 사건, 그리고 평화와 인권) -노무현 대통령 발표문(2003.10.31.) -사진자료(제58주년 4·3 희생자 위령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
두산 동아	(날개단)사진자료(제주 4·3 평화 공원 위령탑) + 희생자의 규모(25,000~30,000명) + 정부의 공식 사과(2003) 소개
리베르 스쿨	(날개단)사진자료(서북청년회 ; 남한으로 넘어온 이북 5도의 청년들이 결성한 우익 반공 단체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하단 코너)도움글(제주 4·3 사건과 진상 규명) -토벌대의 무자비한 진압실상 -제주 4·3 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 희생자의 규모 -사진자료(제주의 학교 운동장에서 무장대 협력자를 가려내는 심문반)
미래엔	(하단 코너)사건 속으로(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보고서(2003) -제주 4·3 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2005) -사진자료(제주 4·3 평화 공원 모자상) + 희생자의 규모(25,000~30,000명) 제시
비상 교육	(하단 코너)(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의 경과 및 희생 상황 설명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제정 + 정부의 사과(2003) -사진자료(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 도민들)
지학사	(날개단)내용설명(제주 4·3 사건의 발발과 전개) -제주 4·3 사건의 경과 설명 -제주 4·3 사건 위원회의 인명 피해 신고 현황(신고 건수 사망자 10,715건, 행방불명 3,171명)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제주 4·3 평화 제단(2008)
천재 교육	(하단 코너)생각넓히기(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제주 4·3 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진상 조사 보고서(2003) +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평화 공원, 평화 기념관(2008)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누리집 소개
-사진자료(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 모습(2009))

V. 맺음말 : 향후 제주 4·3 사건의 집필 방향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집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4·3 관련 내용, 이를 토대로 집필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경향과 구성 요소 및 그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제주 4·3 사건이 『한국사』 교과서에 바람직스럽게 집필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검정제도 하에서는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제주 4·3 사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과 형식은 다르지만, 2018년 1월 개발된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이어 7월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제주 4·3 사건’이 들어간 점은 앞으로 『한국사』에서 반드시 제주 4·3 사건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다양한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 대강화 원칙에 따라 최소화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아니라 ‘학습 요소’에 들어갔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10한사04-01] 8·15 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세계 냉전 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소주제 :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는 꼭 서술해야 할 ‘학습요소’에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협상’ 등과 함께 ‘제주 4·3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⁹⁾ ‘학습요소’가 총 6개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9) 이환병,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중학교역사·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시안개발(3차공청회)』, 2018년 1월 26일, 62~63쪽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8.

으로 제주 4·3 사건의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전 단순히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한 좌익의 활동’이나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서술하도록 규정되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올바르게 밝히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결실은 그동안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밝혀온 역사학계의 성과가 축적되고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제주도민의 열의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원칙에 따라 제주 4·3 사건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 제주도 내 반대 여론이 비등했던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제주 4·3 사건을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고, 그 뒤에도 제주도교육청 등이 각종 집필 관련 공청회와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의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당위성과 대안을 촉구·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서술할 지면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 의하면, 시계열성을 고려해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확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은 중학교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고등학교는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제주 4·3 사건이 현행 교과서보다 분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고, 무엇보다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시되는 사건이지만, 교과서에서는 서술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제주 4·3 사건이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그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평화와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모범적인 사례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주 4·3 사건만 단독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교과서 내 특별 코너로 구성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

‘학습요소’로 들어간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넣음으로써 서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단원은 시기상 6월 민주 항쟁 이후를 다루는 만큼, 국가 폭력이나 인권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묶어 제주 4·3 사건을 다룰 경우 분량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1면 전체를 특집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이러한 특집 구성은 서술상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실제로 반영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구성·서술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사』를 비롯해 거의 모든 교과서는 본문과 그 외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한국사』는 한두 출판사만 제외하고 본문에서 관점·서술방식과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주 4·3 사건의 개요를 비교적 충실히 서술하였다. 그러나 교과서별로 제주 4·3 사건의 배경·주도세력·성격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편차가 있고, 학계에서도 제주 4·3 사건의 명칭뿐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는 낙관할 수 없지만 향후 교과서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이외에 최근의 학계 성과를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보완·심화하거나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현재와 미래의 내용을 제시하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코너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본문 외 구성 요소는 현행 『한국사』에서 집필진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되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자기주도학습과 탐구활동을 하거나 역사적 사고력 배양 등 역사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코너가 거의 없었다. 사진의 경우도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나 평화와 인권의 신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가의 진상 규명과 사과 등이 이뤄졌음에도 이념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지면의 제한과 집필자의 성향 탓도 있다.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은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분단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평화·인권의 소중함과 화해·상생의 메신저로 내세울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탑·평화공원 등을 만들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집필자는 이러한 사례를 제주 4·3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다양하고 참신하게 마련하는 데 힘쓰고, 제주 4·3 사건 관련 연구자·연구소·단체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교재와 자료를 개발·활용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8.
-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 권희영 외, 『한국사』, 교학사, 2014.
- 김종수 외, 『한국사』, 금성, 2014.
- 도면희 외, 『한국사』, 비상, 2014.
- 왕현종 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 정재정 외, 『한국사』, 지학사, 2014.
- 주진오 외, 『한국사』, 천재교육, 2014.
- 최준채 외, 『한국사』, 리베로스쿨, 2014.
-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 2014.
-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김득중,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서술 분석」, 『4·3과 역사』 8, 2008.
- 도면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 관련 서술 분석」,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 박진동, 「해방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 205, 2010.
- 박태균, 「한국현대사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와 교과서 수록 방안」, 『역사학보』 205, 2010.
- ,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역사교육』 116, 2010.
- 조한준, 「역사와 교육과정 내 제주 4·3관련 내용 분석」,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 지수걸, 「한국 근현대사 논쟁과 10학년 『역사』 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109, 2009.
- 최상훈, 「역사와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 103, 2011.

Abstract

The Trend and Tasks in the Account on Jeju 4·3 Incident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Han, Cheol-Ho

Jeju 4·3 Incident is one of the cases showing a representative cross section of contemporary history in South Korea. Though the truth of the Incident had been revealed and impair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s until regaining it in 2003. The dispute in terms of the cause, the core, and the evaluation of the Incident, however, has been continuing over.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the accounts on the Incident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show the interrelationship of current situation, curriculum, frame of reference and perspective of the authors. The paper analyzes the trend in the description on Jeju 4·3 Incident in Korean History Textbooks and suggests some ideas for future textbook writing.

First, we need to be more careful in setting up Curriculum and Description Criteria for history textbook that influence the authors' writings of textbooks significantly. Curriculum and Writing Guide for Korean History were built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situations at that time. The account on Jeju 4·3 Incident has shown deviation. Thus it is suggested to be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secure the author's autonomy and neutrality to the maximum while providing the minimal writing guideline. On the one hand, to provide the necessity and justness of the account on the Incident the recent results such as *Reports on the Truth of Jeju 4·3 Incident* have to be

reflected.

Next, the textbook authors should write correctly with a correct perception on Jeju 4·3 Incident. Some authors don't write even the fact of the Incident reflecting their own disposition. The government is impairing the neutrality of history education by its controlling and nullifying the intent of the inspection system. The textbook authors, however, should describe the truth of the Incident with a sense of mission as historian and history educator because history textbooks guide history education and have a strong influence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se historical perspectives don't be formed enough. Thus the authors of textbooks should describe Jeju 4·3 Incid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history education. The Textbooks must lead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Incident in diverse perspectives and to find its nature and significance for themselves beyond simple memorization. Though the authors have less their space for writing due to the decrease in the quantity of contemporary history part, they are encouraged to do their best to provide the measures for fostering the sense of peace in tune with the times of writing about Jeju 4·3 Incident.

Lastly, it is suggested that the textbook writers, researchers, institute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more communication to interchange information relevant to Jeju 4·3 Incident. By increasing thei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in-depth studies of the Incident, they should develop matters for the textbook writing and expand the scope of mutual understanding. This will help the authors write the history textbooks by grasping the truth and essence of Jeju 4·3 Incident in spite of relatively insufficient space permitted in history textbook.

Key Words : Jeju 4·3 Incident, Textbook, 2015 Revised Curriculum, Description Criteria, Korean History Textbook, *Reports on the Truth of Jeju 4·3 Incident*

집필 : **한철호**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E-mail: hanch777@dongguk.edu)

논문투고일: 2018. 09. 10

심사완료일: 2018. 10. 12

게재확정일: 2018. 10. 13

동북아 비핵지대와 제주 비핵조례

-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여일**

- I. 들어가며
- II. 한반도비핵화 논의의 내력과 쟁점
- III. 동북아비핵지대 구축의 필요성과 난맥상
- IV. 제주비핵조례와 ‘평화의 섬’ 구상
- V. 결론 :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핵 문제와 ‘제주 평화의 섬’ 구상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구축이라는 세 가지 사안을 결부시켜 동북아비핵지대와 함께 제주비핵조례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동북아-한반도-제주도의 평화라는 상이한 층위에서 20여년 간 저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어온 세 가지 사안이 제주도의 강정 앞바다에서 착종하고 있다는 시점을 취할 것이다. 그 까닭은 2017년 11월 22일, 제주해군기지로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입항해 제주도가 핵무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동북아비핵지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실현하고 동북아 공동안보가 성립하려면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7220).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해 북한 내지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도출되더라도 지역 내에 핵권력의 불평등에 따른 핵위협 가능성은 존재한다면 핵개발에 대한 유혹과 핵확산의 가능성 역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북한 내지 한반도가 비핵화된다면 이는 제주도의 ‘평화의 섬’ 구상 및 제주해군기지 운용의 환경적 조건을 크게 바꿀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일동맹의 압박이 강화되면,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비핵지대는 동북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주비핵조례를 제정해 제주해군기지 가동에 따라 연루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역할하고, ‘평화의 섬’ 구상을 내실화하는 한 가지 방향이기도 할 것이다.

키워드 : 한반도비핵화, 동북아비핵지대, 제주비핵조례, 평화의 섬 구상, 제주해군기지

I. 들어가며

1990년대 초 탈냉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냉전의 종언 이전, 이 지역에서는 소련, 중국이라는 대륙의 사회주의권과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양의 자본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한반도는 체제 대립의 분절선이자 최전선, 냉전의 발원지이자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의 추세 속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과 같은 과거 ‘적성국가’들과 국교를 맺고, 남북한의 관계도 전환을 맞이하는 듯했다.

그 시기에 일어난 세 가지 사안을 돌이켜보는 데서 시작하자. 첫째 사안은 북핵 문제다. 소련과 공산권의 몰락으로 진영 대립이 이완된 가운데 남한과 북한은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발효했다. 그러나 이듬해 1993년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일어난다. 이를 두고는 남북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1992년 한중수교가 성립하는 등 한국의 북방정책이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위축시키자 북

한이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¹⁾

둘째 사안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은 역사적 수교에 이르렀고, 1991년 4월 당시 소련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장소가 제주도였다. 이윽고 같은 해 5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태평양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문정인, 고성준, 양영철이 「신혼여행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하며 ‘제주 평화의 섬’에 관한 아이디어가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6월 제주국제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의에서 「동북아 질서와 제주도: 평화의 섬 구상을 위한 제언」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10월 제주국제협의회는 ‘평화와 번영의 제주’라는 주제 아래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셋째 사안은 제주해군기지다. 1990년대 초부터 해군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 해군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제주도 군항시설, 즉 제주해군기지 설치계획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1993년에 국방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의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해 1995년에는 『국방중기계획』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구상이 담기기에 이른다.

이러한 세 가지 사안은 층위를 달리하면서도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제주도의 평화와 얽혀왔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세 가지 사안이 이후 20여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간단히 돌이켜보자. 첫째 북핵 문제는 점차 지역화되어갔다. 제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5월 북한의 폐연료봉 임의추출 조치에 대해 미국의 선제공격설이 부각되며 최고조에 달했으나 1994년 10월 ‘북미기본합의문’(일명 제네바합의)이 극적으로 체결되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핵개발을 이어가 지난 20여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지역적 난제가 되었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올해 2018년이다. 지난 4월 한국과 북한의 판문점선언은 점증해온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상간 합의문으로는 최초로 선언했으며, 6월 북한과 미국 간의 센토사합의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반세

1) 허문영, 『북핵보유선언 이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통일연구원, 2005, 4쪽.

기 넘게 이어진 양국 간의 긴장과 적대 관계를 극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내기로 천명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었다고는 하나 ‘말 대 말’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 단계로 들어서면 관계국들 간의 입장 차이와 이해 갈등이 표면화되는 과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평화의 섬’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진행중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며, 2000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제9장)’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2001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제1회 제주평화포럼이 개최되어 ‘제주평화선언’이 채택되고 9월 제주도는 ‘제주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0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관련 규정은 존속되었고, 2004년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구상 초기에 비무장평화지대가 중요한 방향성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평화의 섬’은 평화주의의 염원을 실현하기보다 발전주의의 논리로 기우는 방향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제주해군기지 계획은 실현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구상은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임관식 연설에서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2년 10월 해군은 화순항에 해군 부두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²⁾ 이에 지역주민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제주도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계가 제주도를 평화허브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제주비전’에 어긋난다며 반발하자 제주도정도 화순항 해군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화순항 해군시설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05년 4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9월 위미항을 검토하여 기초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2006년 5월 방위사업청이 제주해군전략기지 건설을 공식화했다. 지역사회의 반발은 다시금 거세게 일었는데, 그러자 해군기지 부지가 갑작스럽게 강정으로 변경되고 이후로는 알려진 것처럼 10년에 걸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의 반대투쟁에도

2) 「제주해군기지 수용, 갈등불씨 여전」, 『연합뉴스』 2007년 5월 14일.

불구하고 2016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강정 앞바다로 미국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의 세 가지 사안을 결부시켜 동북아비핵지대와 함께 제주비핵조례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다만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짚어둬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세 가지 사안은 동북아-한반도-제주도라는 상이한 층위에서 저마다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관건이며, 현재 동북아 안보에서 핵심적 사안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향후 추이는 제주도의 ‘평화의 섬’ 구상 및 제주해군기지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평화의 섬’ 구상과 제주해군기지도 그 의의 내지 문제성이 로컬 수준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 둘째, 세 가지 사안은 상호간의 규정력이 비대칭적이다. 가령 북핵 문제의 향후 추이는 ‘평화의 섬’ 구상과 제주해군기지 운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역방향으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양자가 인과관계 내지 환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한반도비핵화가 실현되면 ‘평화의 섬’ 구상의 환경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겠지만, 그럼에도 ‘평화의 섬’ 구상에는 제주도 차원의 개발 계획이나 관계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관성이 작용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의 규모와 역할도 해군의 조직 논리에 따라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않을 것이며,³⁾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여하 등에 따라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렇듯 층위와 벡터를 달리하며 20여년 간 진행되어온 세 가지 사안이 제주도의 강정 앞바다에서 착종하고 있다는 시점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동북아 수준의 사안인 한반도비핵화 문제와 일단은 제주도라는 로컬 수준의 사안으로 간주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의 섬’ 구상을 매개로 결부지어 동북아비핵지대와 제주비핵조례를 향후 동북아-한반도-제주도의 평화를 위한 과제로서 가다듬고, 아울러 이를 ‘평화의 섬’ 구상을 내실화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것이다.

3) 조성윤, 「고난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역사비평』82, 2008, 203~209쪽.

II. 한반도비핵화 논의의 내력과 쟁점

1. 핵무기능력의 비대칭성과 북핵 문제

2018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나아가 한반도평화체제 형성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3개 조 13개 항으로 이뤄진 판문점선언은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의 종식, 남북관계 적극적 개선과 발전,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 열기를 기치 삼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그리고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센토사합의는 반세기 넘게 이어진 양국 간의 긴장과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냈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다만 한반도비핵화의 향방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간 협상으로 결정된다기보다 북한 핵개발의 배경이 된 한반도분단체제의 종식 문제로 까지 확장되어 향후 다자간 구도로 전개될 것이며, 한반도비핵화가 실현되면 지역 차원의 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의 제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해 핵개발 의혹이 야기되며 시작되었다. NPT는 기존 5개 핵무기국가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에 새로운 핵무기국가의 등장을 막기 위해 성립된 것으로 핵무기 확산의 방지라는 의의를 지니지만, 기존 핵무기국가의 핵 기득권을 유지시켜 초강대국의 패권을 공고하게 만들 위험성도 존재한다.⁴⁾

핵무기능력이 비대칭적인 조건에서 비핵국가는 핵무기국가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핵위협 대상이 되어온 역사적 경위가 있다. 가령 1976년 8월 작전명 ‘폴 버니언(Paul Bunyan)’은 평양을 직접 겨냥한 핵위협이었으며, 냉전기 내내 북한을 향한

4) 정철호, 『NPT 유효성 한계의 극복 방향』, 세종연구소, 2011.

핵위협은 간헐적으로 이어져왔다.⁵⁾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의 핵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2000년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래 2001년 9·11 테러를 배경으로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며 적대시 정책을 펼쳤고, 북핵 문제를 세계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와 결부시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NPR 2002)에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표명했다. 2010년에 들어 오바마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2010)에서 핵무기는 오로지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한다고 밝혀 핵위협의 여지를 축소시켰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2018)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폐기하기로 했던 전술핵무기를 장착한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동아시아 해역을 주유하는 미 함대들에 다시 장착하고 해상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들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⁶⁾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선언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의 핵심은 북한 핵무기 능력의 무력화에 있지만,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내려면 대북 군사위협,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쳐 NPT 체제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도출되더라도 역내에 핵권력의 불평등에 따른 핵위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핵개발에 대한 유혹과 핵확산의 가능성 역시 남게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 20여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정치적 합의가 파기되면 더한 대결과 교착 상태로 돌아가곤 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정치적 합의 이상으로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국가의 핵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다자적 틀이 마련되어야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는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Peter Hayes, “Ending Nuclear Threat via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s-Free Zone”, NAPSNet Special Report January 6, 2015,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ending-a-nuclear-threat-via-a-northeast-asia-nuclear-weapons-free-zone/>)

6) 「미국 국방부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요약서」, 『뉴스타운』 2018년 2월 4일.

2.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실효성과 한계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탈냉전기에 체결되었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이 역사적 실마리로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공동선언은 서문과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 (2)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 공동 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 (5) 남과 북은 이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 선언이 발표된 후 1개월 안에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6) 이 공동 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⁷⁾

한반도비핵지대화를 골자로 하는 이 공동선언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경계한 미국 이외에도 역내 국가의 동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은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했기에 북한에 핵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중국 역시 NPT 가입을 1992년까지 미루고 있었지만 소련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일본은 비핵3원칙을 국시로 삼고 있었으며 3대 핵강국의 핵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최초로 일국을 넘어선 비핵지대를 천명한 공동선

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 문제의 이해』, 통일교육원, 2016, 291쪽.

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 점에서 공동선언을 한반도비핵화의 역사적 자원으로 삼는 것은 중요하나 동시에 역사적 경위에 근거해 그 한계를 짚어내는 일도 긴요한 과제다. 가령 제1항은 ‘비핵 8원칙’을 천명하고 제4항에 남북한 상호사찰을 담았으나 국제적인 감시사찰을 마련하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제3항의 ‘핵재처리 및 농축우라늄시설 배제’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⁸⁾ 나아가 이철기는 공동선언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짚어내고 있다. 비핵화조약으로서 형식면에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의 미비, 적용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 결여, 무해통항권과 기항권에 관한 규정 결여, 핵보유국들에 의한 국제적 보장장치 결여, 특별사찰제도를 포함한 검중제도 결여 등 비핵지대조약으로서 미비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⁹⁾

여기서 적용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 결여, 무해통항권과 기항권에 관한 규정 결여는 이후 다음과 같은 논란을 야기했다. 한국은 공동선언 체결 이후 공동선언이 지상시설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즉 토마호크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구축함, 잠수함과 B61 핵폭탄을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로 들어오거나 부산항 등에 정박하더라도 공동선언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미국 B-52, B-2 장거리 폭격기가 한국의 공군기지에 착륙하면 공동선언 위반이지만 영공을 비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의 요코스카에는 미 해군의 아시아태평양사령부와 제7함대가 있는데, 이곳으로 입항한 미국의 항공모함, 구축함이 B61 핵폭탄이나 토마호크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면 북한은 그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북한은 공동선언에서는 불명료하거나 공동선언으로는 다룰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왔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핵무장한 미국의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이 한국 영해로 투입되면 이를 공동선언의 핵위협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해 핵무장의 근거로 삼곤 했다.

나아가 공동선언의 실효성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제적 보장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공동선언은 남북한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지 핵무

8) 임형주, 「동북아의 비핵지대화 논의경과와 우리의 대응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87~88쪽.

9) 이철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 『통일시론』 9(3), 2000, 100쪽.

기국가들에 의한 국제적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 기존의 비핵지대조약들은 대체로 ‘보장의정서’ 형식을 통해 핵무기국가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소극적 안보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공동선언은 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이상의 한계는 북한이 공동선언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3. 한반도비핵화 논의의 현재적 시사점

여기서 한반도비핵화의 성사를 위해 갖춰져야 할 역내 조건을 고찰하기 위해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비핵지대에 관한 논의는 탈냉전기가 되어서야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1958년에 1천여 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자 이듬해 북한은 아시아에 핵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고 주창했다. 1978년에는 일본 사회당 대표단의 방북에 즈음해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비핵지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1980년에는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그 실천적 조치로서 ‘조선반도비핵평화지대화’를 제의했다. 1981년에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사회당과 함께 동북아비핵평화지대 창설을 다시 제안했으며,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의 결의문, 1986년 6월 정부성명, 1987년 7월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비핵지대화를 반복적으로 제안했다. 1990년 5월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도 북한은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며 ① 남한 내의 모든 핵무기의 즉각 철수를 위한 공동 노력, ② 핵무기 불생산·불구입, ③ 핵무기 적재 외국비행기·함선의 한반도 내 출입·통과 금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동북아/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남한 내의 미군 철수와 전술핵무기 철거를 전제로 하였기에 성사가능성이 낮았다.

이처럼 냉전기에 동북아/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정권 차원 내지 당 차원에

10) ‘안보보장’(security assurance)은 핵무기국가로부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받은 비핵국가를 나머지 핵무기국가들이 적극적인 군사 지원 등을 통해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적극적 안보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PSA)과 핵무기국가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소극적 안보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서 제출된 것은 주로 북한과 일본이었으나 학술계 차원의 논의는 미국발이 주종이었다. 동북아의 지역질서가 요동친 1970년대 초에 집중되는데, 1972년에 미국의 중국 전문가 알렌 파이팅(Allen Whiting)은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반경 2,400km까지를 비핵지대화하는 동북아비핵지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동경을 중심으로 외곽선을 그린 것은 일본의 경제성장과 원자력기술 발달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까닭이었다. 그의 제안은 일본을 비핵국가로 묶어놓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거론했지만 중국과 소련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의 외교관 윌리엄 컨닝햄(William C. Cunningham)은 6개국의 합의로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동북아의 비핵화 및 군비통제의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또한 한반도비핵화를 전제로 일본의 핵무장을 차단하기 위한 현상유지적 제안이었다. 이어서 1975년에 미국의 몰튼 헬프린(Morton Helferin)은 남북한이 상호무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한반도를 핵무기 금지지역으로 설정하여 4강이 이를 존중하지는 제안을 내놓았다.¹¹⁾ 이 같은 제안들은 기존 핵무기국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와 일본을 비핵지대로 묶어두지만, 핵무기국가를 아우르는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는 미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동북아/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둘러싼 논의의 역사적 내력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북한 당국의 주장이든 미국 학자의 제안이든 한반도비핵지대화는 독자적으로 거론된 적도 있지만,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하위 단위이거나 동북아비핵지대화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둘째, 공히 동북아/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창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법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주한미국의 전술핵 철수, 나아가 핵무기 국가들의 핵감축을 주장하지만, 미국발 제안은 한반도와 일본을 비핵지대로 남겨두는 것이 목적이며 이로써 기존 핵무기국가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냉전기의 경위와 비견하건대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비핵화 프로세

11) 임형주, 「동북아의 비핵지대화 논의경과와 우리의 대응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83~87쪽.

스는 두 가지 지점이 다르다. 첫째, 냉전기에는 일본의 핵무장이 관건적 요소였지만, 현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 과제다. 둘째, 냉전기와 달리 북한이 핵무력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 간의 상호 핵위협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기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의 양자간 합의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핵지대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핵위협에 대한 대처는 한미·미일·북중 동맹 등 양자동맹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조약을 맺어 집단안보체제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조약에 근거한 공약은 행정부의 선언적 정책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를 계기로 동북아비핵지대라는 틀을 다시금 구도해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이른 것이다.

Ⅲ. 동북아비핵지대 구축의 필요성과 난맥상

1. 동북아시아에서 비핵지대의 효용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e: NWFZ)는 일반적으로 핵무기 자체가 부재하고 핵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을 의미한다. 핵무기의 부재란 비보유(non-possession), 비배치(non-stationing)를 포함하고, 핵무기의 불사용은 비사용(non-use), 비사용 위협(non-threat of use)을 포함한다. 비보유, 비배치는 역내 비핵지대조약 체결국에 부과되는 의무이고 비사용, 비사용 위협은 역외 핵무기국가들에 부과되는 의무이다.¹²⁾

여기서 비핵지대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비핵화(Denuclearization)와

12) 1975년 유엔총회 결의는 비핵지대의 개념을 ‘핵무기의 전반적인 부재’(total absence of nuclear weapons)와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할 ‘국제적 검증 및 통제 체제’(an international system of verification and control)의 수립으로 정의하고, ‘역내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를 핵보유국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UN Document A/RES/3472B(XXX),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3472\(XXX\)](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3472(XXX)).

비교하자면, 비핵화는 특정지역 내지 국가에서 기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선언 형식으로 발표된다. 하지만 비핵화에는 5개 핵무기국가가 당사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비핵지대는 특정 지역 내에서 국가 간 조약으로 핵무기의 생산, 보유, 배치,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핵 군축 방식이다.¹³⁾

이러한 비핵지대의 효용이 무엇인지는 비핵지대가 왜 구상되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비핵지대는 핵무기 비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핵무기 개발의 의혹을 사거나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지닌 문턱국가(threshold state)를 겨냥해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시키거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해 해당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역내 국가들에 대한 역외 핵무기국가들의 핵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비핵지대를 건설하면 역내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외 핵무기국가로부터의 핵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동북아 지역의 맥락에 대입한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비핵지대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것 이외에도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여 일본의 핵무장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에 대해 덧붙인다면, 한반도 비핵화로는 동북아 긴장의 주요 원인인 일본과 중국 사이의 마찰이 해소되지 않으며,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이 충분한 역지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인 핵전력의 보유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을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대국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비핵지대가 구축되면 이런 우려를 상당 정도로 불식시킬 수 있다.¹⁴⁾

13) Umeyabashi, Hiromichi.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NEA&NWFZ).” Peace Depot & 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Briefing Paper, 2004.

1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한의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문제 삼았지만 일본은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타국들이 재처리와 고속중수로 등을 포함하는 플루토늄 이용계획을 연기 또는 중지시키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플루토늄 이용계획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량은 2013년 말 현재 47(톤)에 달하는데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으로 핵 강대국인 미국(49t)이나 러시아(52t)

둘째, 미국·중국·러시아 등 기존 핵무기국가들 사이의 핵군비 경쟁과 핵무기 활동을 억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 여러 핵보유국가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북한까지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다면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¹⁵⁾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핵전략 열세의 극복, 중국의 핵전력 증강 억제에 필요성 등이 긍정적인 요소이다. 나아가 동북아비핵지대는 이미 형성된 동남아 비핵지대와 결합해 동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구성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시아 공동안보는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공동안보를 구축해 동아시아 공동안보가 성립할 수도 있다.¹⁶⁾

2. 동북아비핵지대 구축의 동북아적 제약요소

이러한 비핵지대는 이상적 청사진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어온 현실적 실천이다. 1957년 폴란드에 의해 중부유럽에 대한 비핵지대 창설이 제안된 이래, 세계 각지에서 비핵지대의 실천이 있어왔다. 이미 1968년 남미 지역의 틀라텔볼코조약, 1986년 남태평양 지역의 라로통가조약, 1997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방콕조약, 1996년 아프리카 지역의 펠린다바조약, 2006년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조약 등이 체결되거나 발효되어 총 116개국에 비핵지대 내에 속해 있다.¹⁷⁾ 그리고 북미와 EU 지역이 핵 분쟁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거나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도 동북아는 여전히 비핵지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북아비핵지대의 실현에는 지역적 조건에 따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첫째,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핵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는

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5년 7월 16일.

15) 방수옥, 김동찬, 「한반도의 안보와 중·미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 가능성 모색」, 『OUGHTOPIA』 26(3), 2011, 117~120쪽.

16) 윤여일,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 생산적 접점 마련을 위한 시론」, 『아세아연구』 61(2), 2018, 109쪽.

17) 한인택,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JPI정책포럼』 117, 2013, 32쪽.

지역이다. 동북아 지역에는 핵무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역외 국가이나 미국도 동맹관계를 통해 깊이 개입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처럼 이분법적으로 역내 국가에게는 핵무기 ‘부재’의 의무를, 역외 핵무기국가에게는 ‘불사용’의 의무를 부과하기가 힘들어진다. 동북아 지역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하려면 미국·러시아·중국에 핵무기 ‘불사용’의 의무를 넘어서 핵무기 ‘부재’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수준으로 미국·러시아·중국이 핵무기 ‘부재’의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¹⁸⁾

둘째, 이런 이유에서 동북아비핵지대는 핵무기국가가 지대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핵무기국가의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기착과 영공통과 문제가 까다로운 쟁점이 된다.¹⁹⁾ 이와 관련해 미국이 비핵지대 설립에 대해 견지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핵지대의 설립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주도해야 하며, ② 참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③ 비핵지대조약은 충분한 검증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④ 비핵지대 설립이 기존의 안보협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⑤ 비핵지대조약은 당사국들이 핵폭발장치를 개발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야 하며, ⑥ 비핵지대는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권리(특히 항해자유의 원칙) 행사에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⑦ 비핵지대의 설립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항과 영공통과를 포함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기존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비핵지대의 설립에 행위자로서 참여할 것이며, 기존의 안보협정과 저촉되지 않도록 그 목표와 방법을 제한할 것이며, 특히 항해자유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영공통과를 포함한 통행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동북아비핵지대는 동북아 지역에 존재하는 군사동맹조약과 상충할 수 있다. 역내의 비핵국가가 역외의 핵무기국가와 동

18) 문병철,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의 가능성과 안보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42(2), 2016, 119쪽.

19) 방콕조약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도 비핵지대로 포함시켰으며, 이런 이유로 핵무기 국가들이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20) Zachary S. Davis, “The Spread of Nuclear-Weapon-Free Zones : Building a New Nuclear Bargain”, *Arms Control Today* 26(1), 1996, p.16.

맹관계에 있는 경우 그 동맹을 통해 얻어지는 안보이익이 이웃국가들과 비핵지대를 건설해 얻어지는 공동이익보다 우선할 경우 비핵지대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²¹⁾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상호안보조약,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과 같은 군사동맹조약에 근거한 핵무기국가의 핵우산 정책과 핵무기국가의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기착과 영공통과는 비핵지대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비핵지대조약의 체결이 미국 핵우산의 약화 내지 포기를 의미한다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현재의 정황에 따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비핵지대 구축의 핵심적 계기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비핵화일 텐데,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으로 비핵화되는 경우 미국이 동북아비핵지대를 구축할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하여 이삼성은 한반도비핵화를 매개로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결부짓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먼저 한반도평화협정은 북한의 핵폐기 약속을 담고 그 일정을 밝히며, 그에 상응해 미국의 대북한 핵무기 및 재래식 공격 위협을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행하는 일정을 이 협정에 담는다. 아울러 평화협정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개국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동북아비핵지대를 위한 6개국 협상을 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비핵지대조약의 체결과 북한의 핵폐기 일정의 완성을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한반도평화협정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²²⁾

3. 동북아비핵지대 형성의 쟁점들

동북아 지역에서 비핵지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타지역과는 다른 난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동북아비핵지대안을 짜내

21)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구소련의 동남아비핵지대안에 찬성했지만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이 미국의 핵억지력 존속을 희망했기에 비핵지대의 탄생이 지연되었다.

22) 이삼성, 「비핵무기시대 건설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출발점」, 『프레이시안』 2014년 10월 17일.

려는 노력은 방금 언급한 이삼성을 포함해 여러 학자에 의해 이어져 왔다. 2장에서는 냉전기의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보다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탈냉전기 이후의 논의를 마저 검토해보자. 탈냉전기에 나온 최초의 구체적 제안으로는 1995년 존 엔디콧(John E. Endicott)이 이끄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국제전략기술정책센터 연구팀이 제시한 ‘제한적 비핵무기금지대안’을 꼽을 수 있다.²³⁾ 여기서 ‘제한적’이란 동북아비핵지대 실현의 난점들을 고려해 비핵지대의 수준을 완화시킨다는 의미다. 엔디콧은 핵무기의 생산, 보유, 통과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20세기의 비핵지대 방식은 21세기 동북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범이라고 평가하며 ‘비보유’, ‘비배치’, ‘비사용’의 원칙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킨 ‘제한적’ 비핵지대화 방안을 제시했다.²⁴⁾

아울러 이 안에서는 비핵지대의 설정 범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안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킬로미터의 원형 지역에서 전술핵무기의 제거와 사용 금지를 주장한다.²⁵⁾ 이 범위 안에는 남북한은 물론 일본 전역과 대만, 몽골리아, 러시아의 연해주 및 시베리아 일부, 중국 영토의 동쪽 절반이 포함된다. 이는 북한과 함께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국·러시아·미국에게 일정한 매력이 있으나 미국의 대일본 핵우산은 묵과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미국편향적인 범위 설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는 이러한 미국 싱크탱크 중심의 동북아비핵지대 방안의 한계를 의식하고 동북아의 조건을 고려하여 ‘3+3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한국·북한·일본의 3개국이 지리적 의미의 비핵지대를 구성하고 미국·러시아·중국이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포함한 비핵지대의 존중 의무를 지는

23) Endicott, John, “The Impact of a Limited Nuclear Free Zone on Deployed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NAPSNet Special Reports*, June 23, 1995, ([https:// 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the-impact-of-a-limited-nuclear-free-zone-on-deployed-nuclear-weapons-in-northeast-asia/](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the-impact-of-a-limited-nuclear-free-zone-on-deployed-nuclear-weapons-in-northeast-asia/))

24) Endicott, John,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s: the time has com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1), 2008, p. 13.

25) Endicott, John and Gorowitzm Alan, “Track II Cooperative Regional Security Efforts: Lessons from the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Pacifica Review*, 11(3), 1999.

방안이다.²⁶⁾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지만 비핵3원칙을 견지하는 일본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한 바 있는 남북한이 비핵지대를 공고히 하는 조약을 맺고 미국·러시아·중국 등 핵무기국가들이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일정한 지대 안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배치 등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같은 조약 안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의정서에 담는다는 것이다.²⁷⁾

이삼성 역시 역내 비핵국가의 영역을 비핵지대로 만들고 주변 핵무기국가들이 이를 존중하여 소극적 안전보장의 의무를 진다는 비핵지대의 기본구성을 동북아의 실정에 맞춰 짜내는 방안으로서 우메바야시와 마찬가지로 ‘3+3인’을 제시했다. 남북한과 일본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와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비핵지대로 삼는 조약을 체결해 핵무기의 생산·제조·사용·반입을 금지하고 미국·러시아·중국은 비핵지대에서 핵무기를 사용·반입·제조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나 선박 등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²⁸⁾

이상의 동북아비핵지대안들을 통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쟁점은 지역 설정이다.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영토(territory)이고 다른 하나는 외각경계선(outer perimeter)이다. 전자는 조약 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합한 지역을 적용 범위로 설정하며, 후자는 조약 당사국들의 영토뿐만 아니라 공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설정하여 외각 경계선을 도표로 나타낸다.²⁹⁾ ‘제한적 비핵무기지대안’은 이중 후자를 채용한 경우이다. 이철기도 동북아는 해양 지역이 중요하니 한반도의 관문점을 중심으로 반경 1,200마일 또는 2000킬로미터와 같은 외각경계선 개념을 도입해 NPT상의 핵무기국가인 미국·러시아·중국의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이들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가 적절

26)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서해문집, 2014.

27)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2005.

28) 이삼성, 「한반도의 평화에서 동아시아 공동 안보로: 동북아 비핵지대의 시대적 요청」, 『당대비평』 14, 2001, 151~152쪽.

29) 이철기,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의 가능성, 동남아 비핵지대와의 비교」, 『아세아연구』 49(1), 2006, 112쪽. 트라텔룰코조약과 라로통가조약은 외곽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펠리피노조약과 방콕조약은 영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리라고 본다.³⁰⁾ 하지만 우메바야시와 이삼성의 ‘3+3안’은 전자를 채용해 비핵국가인 한국·북한·일본의 3개국이 지리적 의미의 비핵지대를 구성하고 주변의 3개 핵무기국가인 미국·러시아·중국이 소극적 안전보장의 의무를 진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³¹⁾

둘째 쟁점은 통항과 기항·기착의 허용 문제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역외 핵무기국가의 함정과 항공기의 통항과 기항·기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철기는 외곽경계선에 따라 비핵지대를 설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통항과 기항·기착 문제는 핵무기국가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권리를 인정하고 기항·기착의 허용 문제는 해당 영토국가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³²⁾ 반면 우메바야시는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과 항공기의 비핵지대 내 기항과 영해 통과를 금지하지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의 비핵지대조약은 핵무기 탑재가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기항·기착과 영해 통과 문제를 개별 국가의 판단에 위임하는 경향이지만, 동북아비핵지대는 기항·기착과 영해 통과까지도 명확히 금지해 기존 조약들보다 진일보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IV. 제주비핵조례와 ‘평화의 섬’ 구상

1. 핵문제 시대를 맞이한 제주

한반도비핵화의 필요성과 난맥상 그리고 동북아비핵지대의 제약조건과 쟁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주도로 시각을 옮겨보자. 2017년 3월 25일, 휴전선에서 가장 먼 제주도로는 미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스테뎀(DDG-63)이 입항했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으로부터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어서 2017년 11월 22일,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입항했

30) 이철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 『통일시론』 9(3), 2000, 104쪽.

31)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서해문집, 2014, 211쪽.

32) 이철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 『통일시론』 9(3), 2000, 105쪽.

33)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서해문집, 2014, 216쪽.

다. 제주도는 핵무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미시시피를 포함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미 해군이 2010년대에 들어 취역시킨 최첨단 핵잠수함이다. 세계 주요 대륙의 연해 지역에서 공격적 작전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³⁴⁾ 제주도에서 발사하는 경우 베이징이 사거리 안으로 들어온다. 더욱이 미시시피가 일본 요코스카에서 들어와 그곳으로 빠져나갔으며, 미시시피의 제주 기항 전날에 요코스카에서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인 키웨스트(KeyWest)가 기항했다는 사실이 주목을 요한다. 요코스카에는 미 해군의 아시아태평양사령부가 있다. 두 핵잠수함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모항으로 하여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자관계 국가들의 항구를 순항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사실은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서태평양 담당 함대인 미국 7함대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전용(轉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2년 10월 17일,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입항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지스함 등 대형 함정 20척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 계류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었다. 더욱이 한국 해군이 운영하는 잠수함이라면 설계수심이 9.3미터면 충분한데도 12미터로 설계되어 미국 핵추진 잠수함(SSN-776급)에 맞추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³⁵⁾ 또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SOFA)을 고려한다면 미군이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³⁶⁾ 당시 해군 측은 이러한 의

34) Barbara Graves and Edward Whitman, "The VIRGINIA Class: America's Next Submarine", (http://www.public.navy.mil/subfor/underseawarfaremagazine/Issues/Archives/issue_02/virginia_class.htm), 이삼성, 「동아시아의 핵군비경쟁과 제주도의 미래」, 『4·3 항쟁 70주년,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 각주 20에서 재인용.

35) 「미 핵잠수함 입항 전제로 제주해군기지 설계했다」, 『한겨레』 2012년 10월 17일.

36)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군대를 한국 어디에도 주둔할 수 있다. 제4조는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10조를 보면 미국 선박과 항공기 기착의 경우에는 협정 체결이 필요 없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고를 하면 될 뿐이며, 필요에 따라 통고조차 면

혹과 문제제기를 모두 부정했지만, 완공이 되자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받아들였다.

나아가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제주해군기지가 편입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성산의 사드(THADD)기지가 지상 MD의 거점이 되고, 제주해군기지가 해상 MD의 중간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³⁷⁾ 이처럼 제주해군기지는 ‘해적 소탕’이라는 애초 명분에서 유리되어 미국 주도의 동북아 동맹체제의 중요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평화의 섬’ 구상과 비무장지대 모형

만일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기능하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양국간 협상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해제하더라도 제주도로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이 드나들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사안을 들여올 때가 되었다. ‘평화의 섬’ 구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 초반 제주 안팎의 학자들이 ‘평화의 섬’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래 ‘평화의 섬’ 지정 요구가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요구와 결합되어 특별법에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년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주도가 ‘평화의 섬’, 나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역할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단적으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었다. 제주도정은 국익이라는 명분과 개발주의의 논리로써 군사력에 의한 평화 유지의 논리와 ‘평화의 섬’ 구상을 통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평화의 섬’이 국제행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용 슬로건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 ‘평화의 섬’ 구상의 지향성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실 ‘평화의 섬’의 지향과 방향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

제된다.

37) 2010년대부터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73)호와 각종 신형 전함이 수색 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벌이고 해상미사일방어훈련인 ‘태평양의 용(Pacific Dragon)’ 훈련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가 갈랐다. 그 상이한 계열은 대체로 비무장평화지대 모형, 경제특별구역 모형, 국제교류협력거점 모형, 인권·생태평화 모형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³⁸⁾ 그렇다면 지금의 ‘평화의 섬’은 경제특별구역 모형을 기반으로 국제교류협력거점 모형을 가미해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사업으로 수렴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³⁹⁾ 즉 인권·생태평화 모형이나 특히 비무장평화지대 모형은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⁴⁰⁾ 특히 ‘평화의 섬’ 구상 초기에는 비무장평화지대의 문제의식이 강했다. 하나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평화의 섬은 가장 기본원칙과 전제에 있어서 비무장·비군사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군사기지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을 띤 군함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정박하거나 기착해서는 안 된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평화지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비무장, 비군사화에 기본적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⁴¹⁾ 동북아 국가 간의 이념적·군사적 대립구도와 역학관계 속에서 제주도가 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지역의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려면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가 중요 과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간의 추세를 보면 ‘평화의 섬’ 구상은 개발주의의 요구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현실화되었다.

3. 제주비핵조례와 세계의 비핵지자체 운동

한반도비핵화가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색해볼 한 가지 방향은 비핵조례 제정일 것이다. 동북아

38) 김부찬, 「제주 ‘평화의 섬’의 유형과 정책적 과제」, 『법과정책』8, 2002; 양길현·장원석,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18(4), 2002.

39) 김부찬,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의 설정 및 범·제도적 검토」, 『제주 평화의 섬 모델과 추진전략 모색』 워크숍 결과보고서, 1998.

40) 1991년 ‘평화의 섬’ 구상을 제시했던 문정인, 고성준, 양영철은 ‘평화의 섬’을 첫째 제주도의 비무장화, 둘째 평화와 질서를 위한 중심지화, 셋째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센터화와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 넷째 평화의 섬을 행동화하는 데 능동적이고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제주도민, 다섯째 평화의 개념과 일치하는 균형되고 분권화되며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장소로 개념화한 바 있다.

41) 현인택, 양길현, 문정인, 양영철, 「평화의 섬을 위한 제언」, 『평화와 변영의 제주』, 신라출판사, 1993, 225쪽.

비핵지대는 국제행위자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비핵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제정할 수 있다. 비핵조례는 ‘평화의 섬’의 애초 구상인 비무장지대화(de-militarized zone) 내지 평화지대화(zone of peace)를 현재의 비핵화 동향을 고려해 복원해내는 방법일 수 있다.

로컬 수준의 비핵조례라는 발상은 리저널 수준의 비핵지대 이상으로 생경할 수 있다. 하지만 비핵지대가 그러하듯 비핵지자체는 이상적 청사진이 아니라 실재하고 있다. 비핵자치체 운동은 세계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국 군사기지에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를 계기로 맨체스터시부터 시작해 1982년에 ‘비핵자치체회의’라는 전국조직이 결성된 바 있다. 2001년에는 요크셔 남부의 로잘람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반대하는 시의회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에서도 비핵선언을 한 지자체가 200여 개에 이른다. 다만 대체로 1980년대에 이루어졌고 이후로 별다른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비핵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의 80%를 상회하는 2천여 개에 이른다. 1984년 히로시마현에서 시작된 비핵선언 운동은 ‘일본비핵선언자치체협의회’라는 상설협의체를 낳았고 “2020년까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는 긴급행동계획 ‘2020비전’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비핵3원칙의 준수를 언급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⁴²⁾

이처럼 비핵지자체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제주비핵조례를 구상할 때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주비핵조례를 고안할 때는 지자체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비핵법, 비핵지대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몽골은 하나의 국가가 비핵지대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로서 참조의 가치가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비핵법을 통해 법률로 비핵화를 강제한 경우이다. 1984년 집권한 랑게(David Lange) 노동당 정부는 비핵원칙을 선언하며 핵에 기반한 동맹전략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1985년 미국 군함 부캐넌(Buchanan)의 기항을 거부한 데 이어 1987년 비핵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비핵법은 핵폭발 장치와 생물 무기를 획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 추진 선박이 내수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며, 선박이나 비행기가 핵폭발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상이 판단

42) 이준규, 「비핵자치제, 한국과 제주시회에서의 합의」, 『비핵화와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 (도민운동본부 2차 릴레이토론회 자료집)는 다양한 비핵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핵지대로 유지해야 할 법적 책임을 행정수반에게 지우는 뉴질랜드의 사례는 비핵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착목할 지점이다.⁴³⁾

특히 섬인 제주도에서는 비핵지대 설계에서도 쟁점임을 확인했던 항행의 자유 문제가 비핵조례를 구상할 때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공해의 자유,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을 인정하는데 제주비핵조례를 제정한다면 핵폭발장치를 탑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전통보’와 ‘사전협의’를 의무로서 명기하는 등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뉴질랜드의 비핵법만이 아니라 비핵지대안들도 참고할 수 있다. 가령 우메바야시는 동북아비핵지대안을 고안하며 “핵폭발장치를 탑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지대 내 국가에의 기항, 착륙, 영공통과 또는 무해통항권이나 통과통항권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해를 일시통과”하려는 경우는 “해당 지대 내 국가에 사전통고하고 허가를 요구하고서 협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내용을 지자체라는 조건에 맞게끔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아울러 방콕조약은 방사능 폐기물과 기타 방사능 물질의 해양투기 및 대기방출을 금지시키고 있는 데 이런 내용도 시야에 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주도가 비핵조례를 제정하고 비핵지대로 선포하더라도 비핵자치체의 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선포한 주권국 내의 비핵지대는 국제법상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국제조약을 통해 둘 이상의 주권국가의 영토를 포함하는 다국간 비핵지대만이 국제정치학적 고찰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제주비핵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소과 규정을 감안한다면 핵폭발장치를 탑재한 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제주도 입항을 막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런데 여기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일본 고베의 사례가 있다. 1975년 고베 시의회가 “핵무기의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의하고 외국 선박이

4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내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 관련 조항을 보면 제52조 3항에 “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4) 이 아이디어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에 부록으로 수록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을 차용한 것이다.

고베항에 입항할 때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비핵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이후 미국은 군함을 입항시키지 않았고 입항타진도 하지 않았다.⁴⁵⁾ 비핵증명서 제출은 군사 정보를 노출시키는 부담을 가중시켜 핵무기의 존재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미국의 방침과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베의 사례는 비핵조례가 내용에 따라 선언적 효과 이상을 갖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⁴⁶⁾ 다만 제주비핵조례를 구상하는 경우 고베의 사례로부터는 내용을 차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비핵조례가 성립하고 기능하려면 시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일본 본토에 진주한 미군은 고베항을 미군기지로 사용했으며 고베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미군의 중요 거점이었다. 이후 부분적인 철수와 기지 반환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 군함이 드나들었고, 거기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고베항의 항만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고베 시민들이 미군기지 반환과 ‘평화롭고 평온한 고베’를 염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고베시의 비핵 결의는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여론에 힘입어 채택될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비핵법 역시 아래로부터의 평화운동이 바탕이었다. 시민들의 비핵운동이 촉발해 데본포트로부터 번져나간 비핵지대 선언에 105개 지자체가 동참했기에 비핵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비핵법과 비핵 결의의 외국 사례로부터는 그 성과물만큼이나 그것을 일궈낸 시민사회의 역량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주비핵조례의 제정도 선언적 의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제정 과정이 도민의 평화역량 강화와 결부되어야 한다.

45) 이준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로 - 3+3안에 기초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 6월호, 2004.

46) 비핵고베방식은 지방자치법과 항만조례라는 법적 근거를 시의회의 결의를 통해 재해석하고 의미를 살려 행정조치로 이어간 결과이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로서 “지방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 및 체재자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보호, 유지”(제2조 제3항 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베시 항만시설조례는 고베시 시장이 항구 이용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항구 이용에 대해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V. 결론 : ‘평화의 섬’ 구상의 내실화를 위하여

동북아의 지역질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가 한창 운운되는 와중에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라는 공론장에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을 두고 어떤 논의를 축적했는가. 선거공약의 핵심을 담는다고 간주할 수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살펴보건대, 2018년 제주도의 지방선거에서 ‘평화의 섬’은 이슈가 아니었다. ‘평화의 섬’ 이전에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원희룡 후보의 『제주가 커지는 꿈』, 김방훈 후보의 『진심이 통하는 도지사』, 장성철 후보의 『일 잘하는 도지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문대림 후보의 『힘 있는 도지사』를 보면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이후의 실질적인 첫 면이 “한민족 평화번영시대 개막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해상실크로드가 시작됩니다”라는 문구로 장식되어 있지만 정책 과제는 ‘해상실크로드의 핵심공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 ‘남북정상회담 제주 유치’, ‘아시아 평화인권도시 허브 기반 구축’이라는 예의 국제교류협력 모델로 수렴되고 있다. 고은영 후보의 『제주를 지켜라』는 4면에 “평화의 섬 제주! 이제 동북아 평화 허브로!”라는 장에서 ‘강정해군기지 철수, 탈핵 평화의 섬 조례 제정’, ‘핵잠수함 들어오는 허울뿐인 평화의 섬 이제 그만!’이라며 핵잠수함의 입항을 문제제기하고 탈핵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지는 못 했다.

각 후보가 내놓은 공보물에 근거하건대 두 후보 이상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공항 문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형 임대주택 지원, 기본소득 내지 청년수당, 관광객 환경기여금 혹은 관광객 환경 부담금, 제주공항공사 설립, 대중교통체계 개선, 4·3특별법 개정, 동물복지 등이었다. 2018년 제주도의 지방선거는 로컬 이슈만을 갖고서 치러졌다.

이어서 ‘평화의 섬’ 사업의 핵심이라 할 제주포럼에서는 어떤 세션이 기획되었는지를 확인해보자. 올해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비핵화와 관련된 세션이 다수 마련되었다. ‘북핵과 한반도 통일 등 동북아정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반도 비핵화와 주변국 국제정치의 영향’,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한미특별대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시대가 열리는가?’, ‘비핵화와 신뢰구축’ 등 비핵화/평화체제 이슈가 대거 포진했다. 하지만 ‘비핵지대’나 ‘비핵조례’와 같은 제도화 과제가 세션 제목으로 구체화된 경우는 없었으며, 비핵화의 논제를 제주도와 연관시킨 세션도 존재하지 않았다. ‘평화’와 ‘제주’가 함께 등장한 ‘평화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주의 실천 전략’이라는 세션 하나가 눈에 띄는 따름이다. 이를 제외하고 ‘제주’가 세션 제목으로 등장한 경우는 ‘글로벌 관광과 제주의 미래’, ‘지속가능한 섬관광을 위한 정책이슈와 전략’, ‘아시아 국제교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JDC의 발전 방향’ 등으로 관광과 개발의 맥락이었다.⁴⁷⁾

동북아와 제주도의 평화라는 각도에서 올해 지방선거와 제주포럼을 바라보자면 첫째 동북아의 평화가 기로에 놓인 시점인데도 ‘평화의 섬’을 둘러싼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으며, 둘째 지방선거는 로컬적 이슈로만 치우치고 제주포럼은 제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임에도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국제정치학 이슈로만 채워졌다. 공히 제주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지니는 특수성과 그로 인해 맞닥뜨리는 문제성을 간과한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 내의 사안만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제주도의 평화는 국제회의의 유치로 일궈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다시 십여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 보자. 제주비핵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그때 이미 등장한 바 있다. 2005년 1월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 5월 방위사업청이 제주해군전략기지 건설을 공식화한 이후 시점인 2006년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위성곤 의원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핵화 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만식 국장은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비핵화와 남북교류 등 적극적인 평화실천 의지를 담은 평화의 섬 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7월 24일 국제자

47) 제주포럼에서는 2017년에야 ‘제주 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평화’이라는 4·3 관련 세션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18년에는 ‘국가폭력, 여성 그리고 제주 4·3’, ‘외신이 본 4·3’ 등 두 개로 늘었으나 4·3 70주년임을 감안하자면 무척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도시추진국 평화사업과는 ‘(가칭) 제주평화의섬 기본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 내 3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기본조례의 지향을 ‘민주적 자치’, ‘평화’, ‘삶의 질’로 설정하고, 7월 28일 릴레이토론회 ‘비핵화와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를 개최해 비핵조례의 공론화를 시도했다.⁴⁸⁾ 같은 시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본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비핵화 선언과 함께 핵물질의 지하, 지상, 상공 통과 및 반입, 저장, 생산을 거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핵 평화의 의의를 보급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개발, 홍보, 보급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⁴⁹⁾ 하지만 ‘비핵화 선언’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군사기지 신규설치와 확장 금지조항’ 등과 함께 기본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휴전선 지역이 평화지대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분단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는 오히려 앞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21세기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미일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짜인 상태에서 제주도는 그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⁵⁰⁾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일동맹의 대응과 압박도 강화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는 미일동맹의 대중국 해상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이 아닌 미국의 아시아군사정책의 주요 거점으로 간주할 공산이 크다.

지난 10월 10일부터 닷새간 논란 끝에 제주해군기지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10월 12일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원자로 2기를 갖춘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지난 2011년에 후쿠시마 해역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바 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입항 직전인 8~10일까지 오키나와 동쪽 동중국해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해군 연합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10일에는 괌에서 공중급유기와 함께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가 대만과 동중국해를 비행하며

48) 김동주, 『평화의 섬과 환경문제 - 비핵화와 환경안보를 중심으로』, 『비핵화와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 (도민운동본부 2차 릴레이토론회 자료집), 2006, 23~24쪽.

49) 김동주, 위 논문, 2006, 22~23쪽.

50) 20세기 동아시아의 체제변동과 제주도에 관해서는 정영신, 『동아시아 지평에서 바라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46, 2012를 참고하라.

무력시위를 했는데, 같은 날 중국 정부는 7100t급 구축함 정저우함의 해상사열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⁵¹⁾ 그리고 관함식 기간에 중문에서는 특별방산기획전이 열렸으며, 관함식 직후 SM-3 도입이 결정되었다. SM-3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맞춰 떨어뜨리는 미사일로서 땅 위에서 발사되는 THAAD와 달리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발사된다.⁵²⁾ SM-3 도입으로 미국 MD로의 편입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지난 9월 남북 군 당국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군비통제와 긴장완화 방안을 담은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한반도가 평화를 향한 노력에 있는 와중에 제주에서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이삼성은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핵무기 탑재 군함들이 제주해군기지를 빈번하게 드나들면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발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⁵³⁾ ‘평화의 섬’ 구상은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제주도를 동북아의 제네바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그리지만, 한반도비핵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역방향으로 갈 공산이 큰 것이다.

따라서 ‘평화의 섬’ 구상을 내실화해야 한다. 제주도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지난 ‘평화의 섬’ 사업의 추이에 대한 반성 속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위정치(high politics)를 위한 사업에 치우쳐 있었으며 지역사회에 착근하는 내부지향성이 약했다. 둘째, 국제회의나 평화 관련 학술활동을 유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보니 평화 관련 기구나 건축물의 설립과 건립처럼 인프라 구축과 토목사업이 많았다. 이러한 국제교류협력거점 모형은 앞으로도 유용하겠지만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이 논문은 ‘평화의 섬’ 구상을 내실화하는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제주비핵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제주비핵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제주해군기지 가동에 따라 연루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

51) 「美레이진호, 관함식 오기 전 日과 예정 없던 해군훈련 실시」, 『문화일보』 2018년 10월 12일.

52) 「군, SM-3 도입 결정 논란…한반도 효용 낮고 평화 ‘찬물’ 우려」, 『한겨레』 2018년 10월 14일.

53) 이삼성, 「비핵무기시대 건설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출발점」, 『프레시안』 2014년 10월 17일.

지만 제주비핵조례가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정만큼이나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고양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이다.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세계평화의 섬’은 자신의 고유한 조건과 역사에 입각해 세계의 다른 지역이 평화를 도모할 때 참고가 될 시민의 활동과 제도적 사례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주, 「평화의 섬과 환경문제 - 비핵화와 환경안보를 중심으로」, 『비핵화와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도민운동본부 2차 릴레이토론회 자료집), 2006.
- 김부찬,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의 설정 및 법·제도적 검토」, 『제주 평화의 섬 모델과 추진전략 모색』워크숍 결과보고서, 1998.
- _____, 「제주 ‘평화의 섬’의 유형과 정책적 과제」, 『법과정책』8, 2002.
- 문병철,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의 가능성과 안보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42(2), 2016.
- 방수옥, 김동찬, 「한반도의 안보와 중·미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 가능성 모색」, 『OUGHTOPIA』26(3), 2011.
- 양길현, 장원석,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한국과 국제정치』18(4), 2002.
-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2005.
-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서해문집, 2014.
- 윤여일,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 생산적 점점 마련을 위한 시론」, 『아세아연구』61(2), 2018.
- 이삼성, 「동아시아의 핵군비경쟁과 제주도의 미래」, 『4·3항쟁 70주년,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
- _____, 「비핵무기시대 건설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출발점」, 『프레시안』 2014년 10월 17일.
- _____, 「한반도의 평화에서 동아시아 공동 안보로: 동북아 비핵지대의 시대적 요청」, 『당대비평』14, 2001.
- 이준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로 - 3+3안에 기초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6월호, 2004.
- 이철기,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의 가능성, 동남아 비핵지대와의 비교」, 『아세아연구』 49(1), 2006.
- _____,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 『통일시론』 9(3), 2000.
- 임형주, 「동북아의 비핵지대화 논의경과와 우리의 대응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 정영신, 「동아시아 지평에서 바라 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46, 2012.

정철호, 『NPT 유효성 한계의 극복 방향』, 세종연구소, 2011.

조성윤, 「고난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역사비평』82,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 문제의 이해』, 통일교육원, 2016.

한인택,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JPI 정책포럼』117, 2013.

허문영,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통일연구원, 2005.

현인택, 양길현, 문정인, 양영철, 「평화의 섬을 위한 제언」, 『평화와 번영의 제주』, 신라출판사, 1993.

Endicott, John and Gorowitzm Alan, “Track II Cooperative Regional Security Efforts: Lessons from the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Pacifica Review 11(3), 1999.

Endicott, John,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s: the time has com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1), 2008.

_____, “The Impact of a Limited Nuclear Free Zone on Deployed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NAPSNet Special Reports, June 23, 1995,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the-impact-of-a-limited-nuclear-free-zone-on-deployed-nuclear-weapons-in-northeast-asia/>)

Peter Hayes, “Ending Nuclear Threat via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s-Free Zone”, NAPSNet Special Report January 6, 2015,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ending-a-nuclear-threat-via-a-northeast-asia-nuclear-weapons-free-zone/>)

Umeyabashi, Hiromichi.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NEA &NWFZ).” Peace Depot & 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Briefing Paper, 2004.

Zachary S. Davis, “The Spread of Nuclear-Weapon-Free Zones : Building a New Nuclear Bargain”, Arms Control Today 26(1),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and the Jeju Denuclearization Ordinance-For Substantiality of Peace Projects in Jeju Island

Yoon, Yea-Y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monstrating the need of the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and the Jeju Denuclearization Ordinance by associating three issue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Peace Projects in Jeju Islan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Naval Base. This study took the standpoint that the three issues, which have been in progress with varying influences in the last approximately two decades on level of peace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and Jeju Island, are entangled in Gangjeong Sea of Jeju Island since Jeju Island has encountered nuclear weapon issue after USS Mississippi (SSN-782) entered the Jeju Naval Base.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necessity of the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the possibility of nuclear threat has to be block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order to realize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the Cooperative Security in Northeast Asia. For this aim, not on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or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formation of regional nuclear weapon free zone must be actively sought. If the possibility of nuclear threat arising from inequality of nuclear authority in the region exists even after inducing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the political consensu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emptation toward nuclear development and possibility of nuclear proliferation will still prevail.

Meanwhile, from the viewpoint of Jeju Island, if North Korea or the Korean Peninsula is denuclearized, this will dramatically transform the environment conditions of the Jeju Island's Island of Peace projects and operation of the Jeju Naval Base. Nonetheless, if military confrontation escalates between the U.S. and China or the pressure of U.S.-Japan alliance is strengthened as the Chinese naval forces are reinforced, Jeju Island, which has the Jeju Naval Base, is likely to be embroiled in military disputes. Furthermore,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is unlikely to be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s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make preemptive response to the military risks which can arise from the operation of the Jeju Naval Base. Also, the Jeju Denuclearization Ordinance is one direction through which Jeju Island can play the role of Jeju Island of world peace and substantialize the Peace Projects in Jeju Island.

Key words :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Jeju Denuclearization Ordinance, Peace Projects in Jeju Island, Jeju Naval Base

교신 : 윤여일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102
 제주대학교 인문1관 8221호 SSK연구단
 (E-mail: ekswnrrjfl@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8. 16

심사완료일: 2018. 10. 19

게재확정일: 2018. 10. 20

일반논문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

李京燮

『聖德太子伝歴』에 반영된 新羅觀과 그 撰者

이주희

제주도 들불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

정순여·김대훈·양인하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방향 모색

양미경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

李京燮*

- I. 머리말
- II. 삼천당의 運用과 성격
- III. 삼천당의 推移 : 十停으로의 전환
- IV. 맺음말

국문요약

신라의 삼천당은 진흥왕 5년(544) 大幢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왕경지역에 설치되었던 군사조직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태종무열왕 때 인물인 취도 열전에서 확인되는데, 이 글에서는 삼천당의 운용 양상을 검토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려 하였다. 태종무열왕 5년에 벌어진 조청성 전투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에게 북쪽 변경의 33성을 빼앗긴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에 태종무열왕은 김흠운이 출전한 낭당이 포함된 군사를 일으켜 조천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취도의 삼천당을 출전시켰다. 이때 김유신의 부대가 함께 출전하여 조천성(도리천성)을 탈환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취도가 배속된 삼천당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긴급한 상황에 주력군단들을 예비적으로 지원하는 부대로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도처럼 승려였던 인물도 자원하여 배속될 수 있었던 병원 구성의 방식으로 보아 강력한 전투력을 보지한 군단은 아니었던 듯하며, 주력군단의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흥왕 5년에 대당과 함께 삼천당이 설치되었던 이유 또한 예비지원부대의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연구원

성격으로 대당에 대응하여 창설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태종무열왕대까지 이와 같이 성격으로 존재하던 삼천당은 통일 이후 신라의 왕경에 국왕권과 더욱 밀착된 대규모 군단인 9서당이 들어서게 되면서 왕경에서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마침 이 무렵 지방제도가 9주 체제로 정비되면서 지방의 군제 또한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는데 왕경의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을 지녔던 삼천당은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 계열의 군관조직을 근간으로 10정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10정은 대대감—소감—화척 계열의 기병부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예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삼천당의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 계열의 군관조직이 결합하여 새롭게 성립한 지방군 체제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이면의 역사적 사실 속에서 軍號 十停의 분주에 십정의 異稱으로 삼천당이 기록되었던 것이다.

왕경의 삼천당이 십정 조직으로 전환 배치되어 지방군 체제 속에 새롭게 정립된 시기는 외삼천이라고도 불렀던 신삼천당이 설치되던 문무왕 12·16년 무렵이 아니라 9주 체제가 완비되는 신문왕 5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신라, 삼천당, 취도, 김흠운, 십정

I. 머리말

『三國史記』 권47 驛徒 열전에는太宗武烈王대 승려였던 취도가 兵部에 나아가 三千幢에 배속되고 助川城 전투에서 전사하는 내용과 더불어 그 형인 부과와 동생 뽕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은 병부와 삼천당이 언급되어 신라 兵制史의 문제들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주목 받았다. 특히 취도 열전에서 구체적인 활동상을 보이는 삼천당은 통일기 신라의 군부대 실상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下 武官[이하 武官條1)] ‘凡軍號’ 항목의 23개 군호에는 보이지 않고, 다만 세 번째 軍號 十停을 설명하는 分註에서 “或云三千幢”이라고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무관조의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십정과 삼천당은 동일한 실체라고

1) 武官條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李文基, 「『三國史記』 職官志 武官條의 史料的檢討」, 『歷史教育論集』 15, 1990에 자세히 정리된 바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末松保和는 십정을 그 소재지로 볼 때 9州가 갖추어진 통일 이후의 군사조직으로 보았으며 십정 자체를 10개의 삼천당으로 이해하였다.²⁾ 그러나 앞서 언급한 취도 열전에서 삼천당의 활약상이 중고기 무열왕 때에 확인되기 때문에 삼천당은 통일 이전 신라 중고기의 군사조직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천당을 십정과 다른 중고기 신라 군사조직의 하나임을 최초로 지적한 연구자는 井上秀雄이다. 무관조에서 십정의 설치연대로 기록된 진흥왕 5년(544)은 기병부대였던 삼천당의 창립연대이며, 십정과 삼천당의 관계는 삼천당이 이미 실질적으로 붕괴된 것을 기병부대의 필요성에서 신설한 군단에 舊稱을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³⁾ 이것은 비록 신라의 각 군단조직을 언급하면서 이루어진 간단한 지적이지만 삼천당을 십정과 구분해 이해하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후 이인철은 신라 병제의全般을 다루면서 삼천당을 기병군단인 십정의 지원부대이며, ‘三千’이라는 군호와 승려였던 취도가 삼천당에 속하기를 청하였다는 것에서 僧兵으로 편성된 보병전투부대일 것으로 추측하였다.⁴⁾ 신라 중고기의 군사조직을 검토한 노근석은 삼천당을 기병으로 구성된 왕정의 중앙군단으로 생각하였다.⁵⁾ 이외에도 단편적으로 귀족의 군사 인솔 규모가 삼천 명으로 나타나는 사료를 이용하여 삼천당은 귀족 예하의 兵團이었으며 이러한 여러 삼천당을 통괄하는 중앙의 군사조직으로 大幢이 성립하였다는 견해,⁶⁾ 삼천당은 六停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제출되었다.⁷⁾

위의 견해들은 다른 논지의 전개 과정에서 삼천당을 언급하였는데 이문기는 專論으로 삼천당을 세밀하게 다룬 바 있다. 먼저 삼천당은 진흥왕 5년(544)에 설치되어 무열왕대에도 실체가 인정되는 중고기의 군단이라는 점, 군관직이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의 체계로 이루어진 보병부대인 점, 설립의

- 2) 末松保和, 「新羅幢停考」,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359~367쪽. 여기에서는 十停을 열 개의 三千幢으로 보아 동일하게 생각하였다.
- 3) 井上秀雄, 「新羅兵制考」,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 1974, 190~191쪽.
- 4) 李仁哲, 「新羅骨品體制社會의 兵制」, 『韓國學報』 54, 1989, 81~186쪽. 이후 씨는 『新羅政治制度史研究』(一志社, 1993, 335~340쪽)에 이 글을 수록하면서 舊稿의 貴幢 및 十停과 五州誓에 관한 견해 등을 수정하였다.
- 5) 盧瑾錫,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273쪽.
- 6) 姜鳳龍, 「新羅 中古期 州制의 形成과 運用」, 『韓國史論』 16, 1987, 74~75쪽.
- 7) 朱甫墩,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 1987, 34쪽.

배경은 국왕의 친위군사력의 보완을 위해 국왕에 의한 召募兵으로 구성된 점, 통일전쟁 후 문무왕대를 전후한 시기의 군제 개편 과정에서 십정 군단으로 확대·발전한 점, 이러한 삼천당의 확대·발전은 전통적인 신라사회의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동체에서 일탈한 인적 자원의 증대에 기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였다.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삼천당이 중대의 십정과 다른 중고기의 군사조직이라는 사실은 軍官조직 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⁹⁾ 그러나 이문기의 연구 이후 삼천당을 왕정에 두어진 중앙군사조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신라의 병제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¹⁰⁾ 이 경우 관련 사료의 해석이라던가 삼천당이 지방의 십정으로 재편되는 과정 등에 대한 서술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기도 한다. 결국 삼천당의 운용양상과 성격, 이후 십정과 관련된 문제 등은 아직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셈인데,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삼천당의 기원과 관련한 사료들을 검토하고, 취도 열전의 분석을 통하여 중고기 삼천당의 성격과 실체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삼천당과 六停·十停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삼천당의 역사적 추이 또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신라 병제의 문제는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가 제시된 분야이고 그 각각의 내용도 워낙 세밀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천당도 결국은 무관조의 사료적 성격부터 병제사의 제분야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울 수 없지만 최대한 선행의 연구성과를 계승 혹은 비판하면서 삼천당에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중고기 군사조직의 하나인 삼천당의 실체와 그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 추이가 분명해지기를 기대한다.

8)李文基, 「新羅 中古期の 三千幢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13·14, 1990; 『新羅 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122~148쪽에 채수록.

9) 이문기, 「新羅 中古期の 三千幢과 그 性格」 및 이인철, 「新羅骨品體制社會의 兵制」

10) 金鍾洙,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한국사연구』 126, 2004; 한준수, 「신라 신문왕대 10停의 설치와 체제정비」, 『한국고대사연구』 38, 2005.

II. 三千幢의 運用과 성격

『삼국사기』 권47 취도 열전에는 太宗武烈王대 승려였던 취도가 병부에 나아가 삼천당에 배속되고 助川城 전투에서 전사하는 내용과 더불어 그 형인 부과와 동생 뽕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삼천당의 존재와 運用 양상을 엿볼 수 있다.

- A. 취도(驪徒)는 사량(沙梁) 사람으로 나마(奈麻) 취복(聚福)의 아들이다. 기록에 그의 성이 전하지 않는다. 형제가 셋이었는데 맏이는 부과(夫果), 가운데가 취도, 막내는 뽕실(遍實)이었다. 취도는 일찍이 출가하여 도옥(道玉)이라는 이름으로 실제사(實際寺)에 머물고 있었다. 태종대왕 때 백제가 조천성(助川城)에 쳐들어 오자 대왕이 군사를 일으켜 출전하였으나 결판이 나지 않았다. 이에 도옥은 그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승려가 된 자로서 상등은 학업(道)에 정진하여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도를 실천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데, 나는 모습만 승려일 뿐이고 취할만한 한 가지 착한 일도 없으니 차라리 종군하여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함이 낫겠다!” 승복[法衣]을 벗어 던지고, 군복을 입고 이름을 취도로 고쳤다. 생각건대 이는 달려가서 보병[徒]이 되었다는 뜻인 듯하다. 이에 병부에 나아가 삼천당(三千幢)에 속하기를 청하여 드디어 군대를 따라 전선에 나갔다. 깃발과 북소리의 진격 명령에 따라 창과 긴 칼을 가지고 돌진하여 힘껏 싸워 적 몇 사람을 죽이고 죽었다. 그 후 함형 2년 신미(문무왕 11: 671)에 문무대왕이 군사를 출동하여 백제 변방의 버를 짓밟고 드디어 웅진의 남쪽에서 백제 사람과 싸웠는데 그때 부과가 당주로서 전사하니 논공서열이 제일 높았고, 문명(文明) 원년 갑신(신문왕 4: 684)에 고구려의 남은 적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문대왕이 장수에 명하여 이를 치도록 하였는데 뽕실을 귀당(貴幢) 제감(弟監)으로 삼았다. (중략) 적진에 맞서자 홀로 앞에 나가 용감히 싸워 수십 명을 목베고 죽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취도는 죽을 곳을 알았고 또 형과 동생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부과와 뽕실 또한 의리에 용감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니 장하지 않은가?” 세 형제 모두에게 사찬(沙飡)의 관등을 추증하였다.¹¹⁾

11) 『삼국사기』 권47 열전7 취도 · 驪徒 沙梁人 奈麻聚福之子 史失其姓 兄弟三人 長夫果 仲驪徒 季遍實 驪徒嘗出家 名道玉 居實際寺 太宗大王時 百濟來伐助川城 大王興師出戰 未決 於是 道玉語其徒曰 吾聞 爲僧者 上則精術業 以復性 次則起道用 以益他 我形似桑門而已 無一善可取 不如從軍殺身 以報國 脫法衣 著戎服 改名曰驪徒 意

위의 기사에 따르면 취도는 일찍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태종무열왕 대 백제의 침략으로 시작된 조천성 전투의 攻防이 이어지자 환속하였고, 스스로 병부에 나아가 삼천당에 배속되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삼천당은 무열왕대에 하나의 군사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운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신라의 군사조직들은 직관지 무관조의 범군호 항목으로 정리되었는데, 여기에서 삼천당은 직접적인 군호로 서술되지는 않았다. 무관조의 범군호 항목은 六停을 시작으로 모두 23개의 군호가 나열되어 있는데,¹²⁾ 삼천당은 독자적인 군호로 서술되지 않고 六停과 九誓幢에 뒤이어 등장하는 十停의 分註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B. 十停<혹은 三千幢이라고도 하였다.>은, 첫째는 音里火停이었다. 둘째는 古良夫里停이었다. 셋째는 居斯勿停이었다. 衿의 색깔은 청색이었다. 넷째는 三良火停이었다. 다섯째는 召三停이었다. 여섯째 未多夫里停이었다. 衿의 색깔은 흑색이었다. 일곱째는 南川停이었다. 여덟째는 骨乃斤停이었다. 衿의 색깔은 황색이었다. 아홉째는 伐力川停이었다. 열째는 伊火兮停이었다. 衿의 색깔은 녹색이었다. 모두 진흥왕 5년(544)에 설치하였다.¹³⁾

삼천당의 기원과 관련한 문제는 십정 군호 분주의 ‘或云三千幢’과 창설 시기를 언급한 ‘並眞興王五年置’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B에서처럼 10정이 진흥왕 5년(544)에 모두 설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軍號 10정이

謂馳驟而爲徒也 乃詣兵部 請屬三千幢 遂隨軍赴敵場 及旗鼓相當 持槍劒 突陣力鬪 殺賊數人而死 後咸亨二年辛未 文武大王發兵 使踐百濟邊地之禾 遂與百濟人 戰於熊津之南 時夫果以幢主戰死 論功第一 文明元年甲申 高句麗殘賊 據報德城而叛 神文大王命將討之 以逼實爲貴幢弟監 (중략) 斬殺數十人而死 大王聞之 流涕嘆曰 驟徒知死所 而激昆弟之心 夫果逼實 亦能勇於義 不顧其身 不其壯歟 皆追贈官沙浪”

12) 『삼국사기』 권40 志9 職官下 武官. “凡軍號 二十三 一曰六停 二曰九誓幢 三曰十幢 四曰五州誓 五曰三武幢 六曰闕衿幢 七曰急幢 八曰四千幢 九曰京五種幢 十曰二節末幢 十一曰萬步幢 十二曰大匠尺幢 十三曰軍師幢 十四曰仲幢 十五曰百官幢 十六曰四設幢 十七曰皆知戟幢 十八曰三十九餘甲幢 十九曰仇七幢 二十曰二闕 二十一曰二弓 二十二曰三邊守 二十三曰新三千幢”

13) 『삼국사기』 권40 志9 職官下 武官. “十停(或云三千幢) 一曰音里火停 二曰古良夫里停 三曰居斯勿停 衿色青 四曰參良火停 五曰召參停 六曰未多夫里停 衿色黑 七曰南川停 八曰骨乃斤停 衿色黃 九曰伐力川停 十曰伊火兮停 衿色綠 並眞興王五年置”

성립하기 위해서는 末松保和의 지적처럼 통일이 되고 9주 체제가 갖추어진 이후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⁴⁾ 결국 554년에 10정 가운데 일부가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10정과는 다른 성격의 군사조직인 삼천당이 설치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驟徒 열전에서 중고기 무열왕대에 이미 삼천당이 구체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544년은 십정이 아닌 삼천당이 설치된 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⁵⁾ 삼천당이 설치된 해인 진흥왕 5년에는 大幢이 함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¹⁶⁾ 대당은 중고기의 6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부대로서 기본적으로 왕경 수비의 임무를 맡은 것으로 생각되며,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신라의 가장 중요한 군단으로 활동하였다. 대당과 삼천당은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군사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진흥왕 5년에는 병부령 1인이 새롭게 증치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이 시기가 신라 兵制의 구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취도는 사랑부 사람으로 실제사에 머무르다가 승복을 벗고 병부에 나아가 삼천당에 배속되기를 청했다는 점에서 삼천당은 병부에 의해 관할되는 왕경에 배치된 군단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신라의 군사조직으로는 매우 이른 시기에 설치된 삼천당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도가 배속된 삼천당이 출정했던 조천성 전투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조천성 전투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신라사회에서 널리 회자될 만큼 인상적이고 중요한 전투였던 듯하다.

C-1. 영휘(永徽) 6년(태종무열왕 2 : 655) 태종대왕이 백제가 고구려와 더불어 변방을 막자 이를 치고자 하여 군사를 출동할 때에 흠운을 낭당(郎幢) 대감으로 삼았다. 이에 그는 집안에서 자지 않고 비바람을 맞으며, 병졸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였다. 백제 땅 양산(陽山) 아래에 군영을 설치하여 조천성(助川城)을 공격하고자 하였는데 백제인들이 밤을 틈타서 민첩하게 달려와 새벽녘에 성루를 따라 들어오니 우리 군사가 놀라 엎어지고 자빠져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적들이 혼란을 타서 급하게 공격하니 날으는 화살이 비오듯 모여졌다. 흠운이 말을 비껴타고 창을 잡고 대적하니 대사(大舍) 전

14) 末松保和, 「新羅幢停考」, 앞의 책, 359~367쪽.

15) 井上秀雄, 「新羅兵制考」, 앞의 책, 191~192쪽

16) 이러한 대당과 더불어 삼천당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삼천당의 성격을 유추할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지(詮知)가 달려어 말하였다. “지금 적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지척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공이 비록 죽는다고 하여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은 신라의 귀한 신분[貴骨]으로서 대왕의 사위[半子]인데 만약 적군의 손에 죽으면 백제의 자랑하는 바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깊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흠운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하였으면 사람이 알아주고 모르고는 한가지이다. 어찌 감히 이름을 구하랴?” 하고는 곳곳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따르던 자들이 말고삐를 잡고 돌아가기를 권하였으나 흠운이 칼을 뽑아 휘드르며 적과 싸워 몇 사람을 죽이고 그도 죽었다. 이에 **대감 예파(穢破)와 소감(少監) 적득(狄得)**이 서로 더불어 함께 전사하였다. **보기(步騎) 당주 보용나(寶用那)**가 흠운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그는 귀한 신분에 영화로운 자리에 있어 사람들이 아끼는 바인데도 오히려 절조를 지켜 죽었으니 하물며 나 보용나는 살아 있더라도 별 이익이 되지 않고 죽어도 별 손해가 되지 않는 존재이다.” 드디어 적에게 덤벼들어 서너 명을 죽이고 그도 죽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고 흠운과 예파에게는 일길찬, 보용나와 적득에게는 대나마의 관등을 추증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 [전투상황]을 듣고 양산가를 지어 애도하였다.¹⁷⁾

C-2. 태종무열왕 2년(655) 봄 정월 (중략) 고구려가 백제·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우리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으므로**, 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¹⁸⁾

C-3. 보장왕 14년(655) **봄 정월, 이에 앞서 우리가 백제·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33성을 빼앗았으므로**, 신라 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사

17) 『삼국사기』 권 47 열전 7 김흠운. “金歆運 奈密王八世孫也 父達福迺浪 歆運少遊花郎文努之門 時 徒衆言及某戰死 留名至今 歆運慨然流涕 有激勵思齊之貌 同門僧轉密曰 ‘此人若赴敵 必不還也’ 永徽六年 太宗大王愼百濟與高句麗梗邊 謀伐之 及出師以歆運爲郎幢大監 於是 不宿於家 風梳雨沐 與士卒同甘苦 抵百濟之地 營陽山下 欲進攻助川城 百濟人乘夜疾驅 黎明緣壘而入 我軍驚駭顛沛 不能定 賊因亂急擊 飛矢雨集 歆運橫馬握槊待敵 大舍詮知說曰 ‘今賊起暗中 咫尺不相辨 公雖死 人無識者 況公新羅之貴骨 大王之半子 若死賊人手 則百濟所誇詡 而吾人之所深羞者矣’ 歆運曰 ‘大丈夫既以身許國 人知之與不知一也 豈敢求名乎’ 強立不動 從者 握轡勸還 歆運拔劍揮之 與賊鬪 殺數人而死 於是 大監穢破·少監狄得相與戰死 步騎幢主寶用那聞歆運死曰 ‘彼骨貴而勢榮 人所愛惜 而猶守節以死 況寶用那生而無益 死而無損乎’ 遂赴敵 殺三數人而死 大王聞之傷慟 贈歆運·穢破位一吉浪 寶用那·狄得位大奈麻 時人聞之作陽山歌 以傷之”

18) 『삼국사기』 권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2년. “春正月 … 高句麗與百濟·靺鞨連兵 侵軼我北境 取三十三城 王遣使入唐求援”

신을 보내 원조를 구하였다.¹⁹⁾

C-4. 의자왕 15년(655) 8월에 왕은 고구려와 말갈과 더불어 신라의 30여 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신라 왕 김춘추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표를 올려 『백제가 고구려와 말갈과 함께 우리의 북쪽 경계를 쳐들어 와서 30여 성을 함락시켰다.』고 하였다.²⁰⁾

C-5. 영회 6년 을묘(655) 가을 9월에 유신이 백제 땅에 들어가 도비천성(刀比川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²¹⁾

조천성 전투와 관련해서는 신라·고구려·백제본기에 모두 그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취도 열전 외에도 김흠운과 김유신 열전에서 전투의 추이가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신라인들이 전사자들을 애도하는 양산가를 지었다는 사실이 전하는 것에서 당시 조천성 전투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단일 전투로는 특이하리만치 전투의 양상이 자세히 전한다. 앞서의 취도 열전에는 조천성 전투가 정확한 연대의 기록 없이 태종무열왕대로 기록되었는데, 김흠운 열전과 삼국의 본기 그리고 김유신 열전을 통하여 655년(태종무열왕 2)의 사실로 확인된다. 이 전투의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고구려·백제·말갈 등이 침략하여 신라의 30여 성(조천성 포함) 탈취(655년 1월경)



태종무열왕이 군사를 일으켰으나 결판을 짓지 못함

김흠운의 낭당 출전(?)



취도의 삼천당 출전

김유신의 백제 도비천성(=조천성) 공취(655년 9월)

조천성을 둘러싼 공방은 655년 1월경 고구려·백제·말갈 등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조천성을 포함한 33성을 탈취하면서 시작되었다. 백제본기에는 8월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나, 고구려와 신라본기에는 1월경으로 확인

19)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하 14년. “十四年 春正月 先是 我與百濟·靺鞨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 遣使於唐求援”

20) 『삼국사기』 권 28 백제본기 6 의자왕 15년. “十五年 八月 王與高句麗·靺鞨攻破新羅三十餘城 新羅王金春秋遣使朝唐 表稱 ‘百濟與高句麗·靺鞨侵我北界 沒三十餘城’”

21) 『삼국사기』 권 42 열전 2 김유신 중. “永徽六年乙卯秋九月 庾信入百濟 攻刀比川城克之”

되는데²²⁾ 33성이라는 구체적인 성의 수까지 언급한 점에서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의 기록이 보다 정확한 듯하다. 더구나 조천성 전투의 귀결이었던 김유신의 도비천성 함락이 9월이었던 점에서 조천성을 둘러싼 공방이 8월에 시작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월 이후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김흠운의 낭당은 陽山 아래에 군영을 설치하여 조천성을 공격하려 했는데, 이 양산은 통일 신라의 尙州 永同郡(영동군 영동읍) 양산현이며 그 옛 지명이 助比川縣이었다. 이로 보아 조비천과 조천은 같은 지명이었을 알 수 있으며, 조비천·조천과 더불어 도비천도 같은 지명²³⁾이라고 생각된다. 조천성 지역은 원래 백제 영역권에 가까운 지역이었으나 진흥왕대 신라의 한강 진출 이후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지역이었다. 특히 이 곳은 신라의 감문지역에서 추풍령을 넘어 백제의 웅진과 사비도성과 연결되는 도로상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백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반면 신라의 입장에서는 조천성을 빼앗겼을 경우 추풍령로와 감문-일선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는 물론 한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듯 전략적 요충지였던 조천성의 입지적 특징으로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취도 열전에 따르면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하자 태종무열왕은 군사를 일으켜 출전하였으나 결판이 나지 않았다(大王興師出戰 未決)고 한다. 이에 취도는 병부에 나아가 삼천당에 배속되기를 청하고 출전하여 전사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에서 조천성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김흠운의 낭당 부대의 출전이 취도 열전의 ‘大王興師出戰’했던 첫 번째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김흠운 열전의 “태종대왕이 백제가 고구려와 더불어 변방을 막자 이를 치고자 하여 군사를 출동할 때에 흠운을 낭당 대감으로 삼았다”는 내용과 취도 열전의 ‘大王興師出戰’이 부합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취도의 삼천

22) 신라본기의 해당 기사는 정월에 이어져 3월 기사 앞에 위치하는 점에서 정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3)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223쪽; 成周鐸, 「助川城의 位置에 對하여」, 『百濟研究』 4, 1973. 이와 달리 도비천성을 조천성으로 비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견해도 있다(鄭永鎬, 「百濟 助川城考」, 『百濟研究』 3, 1972).

당은 조천성 탈환이 실패하여 교착상태에 빠지자 신라 왕경에서 다시 출전하는 부대였던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천당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엿볼 수 있다. 삼천당이 왕경에 주둔하는 군사조직으로 나름의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했던 부대라면 조천성 탈환과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통일 이후 십정으로 군관조직이 편입된 형태이지만, 삼천당의 조직 구성²⁴⁾을 보면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먼저 조천성 전투에 투입된 낭당의 경우 郎幢 大監 金欽運, 大監 穢破, 少監 狄得, 大舍 詮知, 步騎幢主 寶用那 등의 존재에서 최소한 대감 2인-소감 1인-監舍知 1인-보기당주 1인의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러한 군관 구성이나 조천성 탈환에 먼저 투입되었던 정황으로 보아 낭당이 삼천당에 비하여 우월한 군사조직으로서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천당의 군사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신라 왕경의 주요 군사력이라기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지원부대로서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삼천당의 예비지원부대로서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은 이 부대의 구성이 일부 召募와 自願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도는 원래 승려였지만 조천성의 전황을 듣고 병부에 나아가 삼천당에 배속되기를 스스로 청하였는데, 이는 취도 스스로가 삼천당이 일부 소모 및 자원병으로 구성되며 예비지원부대로서 조만간 조천성 전투에 투입되리라는 사실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다. 이처럼 병부를 매개로 한 소모병적인 부대 구성 방식에서 삼천당을 왕권에 복무하는 국왕의 친위 군사력을 목표로 하는 성격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²⁶⁾ 그러나 취도 열전의 삼천당 관련 내용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여겨진다. 태종무열왕대의 병부는 軍政을 주관하는 국가기구로서 예비지원부대라는 삼천당의 성격대로 자원병을 모집하는 당연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 모습을 왕권과 결부시킬 근거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대당과 삼천당이 진흥

24) III장의 <표 1> 十停의 軍官조직 참고

25) 김흥운 열전의 내용을 토대로 낭당의 군관조직을 재구성한 것은 이문기,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1997, 203~204쪽 참조

26)李文基, 「新羅 中古期の 三千幢과 그 性格」, 앞의 책, 1997, 137~140쪽.

왕 5년에 함께 설치되었던 점도 주력군인 대당을 보완하는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으로 삼천당을 창설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⁷⁾

취도는 일찍이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하던 중 깨우친 바가 있어 삼천당에 투신하고 바로 조천성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그는 일반 병졸로서 배속되었을 테지만 일상화된 군령체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담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삼천당 조직 전체에도 해당된다. 현대의 예비군 체제를 상정하더라도 군관 조직을 중심으로 일부 훈련된 군인과 취도와 같은 자원병 혼종의 부대가 실질적인 군대의 전투력을 발휘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삼천당은 진흥왕 5년 대당과 함께 설치된 왕경의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을 지닌 군사조직이었다. 이는 태종무열왕대의 사실을 전하는 취도 열전의 내용 속에서 유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삼천당은 조천성 전투와 같은 국가적 비상 시국에 일부 군관조직을 중심으로 소모와 자원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Ⅲ. 三千幢의 推移：十停으로의 전환

삼천당은 진흥왕 5년(544) 대당과 함께 창설된 왕경의 예비지원부대로서 존재하였지만 중고기 동안 그 활동의 양상이 보이지 않다가 태종무열왕 2년(655) 조천성 전투에 참여한 취도의 열전에서야 그 실체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고기 삼천당의 활약이 기록상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신라의 군사활동이 대당을 포함한 6정 군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아가 대당과 삼천당의 창설 이후 중고기 신라가 대외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군사조직들을 왕경과 지방에 설치하면서 적극적

27) 이와 관련하여 삼천당을 진흥왕 5년에 함께 설치된 보병 중심의 대당을 보완하는 기병 부대로 본 井上秀雄의 견해가 참고된다(앞의 책, 1974, 190~191쪽). 다만 삼천당을 기병부대로 이해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 대당을 보완하는 성격이었다고 유추한 점은 흥미롭다. 삼천당은 유사시 대당의 활동을 예비적으로 지원하는 부대로서 구상되었기 때문이다.

으로 운용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왕경의 군사조직으로 주목되는 것이 진평왕 5년(583)의 誓幢과 진평왕 47년(625)의 郎幢 설치라고 할 수 있다. 낭당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 장에서 살펴본 김흠운 열전이다. 삼국사기의 찬자는 화랑과 관련하여 김대문의 말을 인용하면서 “임금을 보좌하는 어진 인물과 충신이 이로부터 나왔고, 좋은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부터 생겨났다”고 하였다. 낭당은 화랑과 낭도들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던 일종의 특수군제이자 명망군²⁸⁾제의 형식으로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기 신라의 軍制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誓幢이라고 판단된다.

D. 9서당(誓幢)은, 첫째는 녹금서당(綠衿誓幢)이었다. 진평왕 5년(583)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는데 다만 서당(誓幢)이라고만 하였다가, 35년(613)에 녹금서당으로 고쳤다. 금(衿)의 색깔은 녹자(綠紫)였다. 둘째는 자금서당(紫衿誓幢)이었다. 진평왕 47년(625)에 처음으로 낭당(郎幢)을 설치하였다가 문무왕 17년(677)에 자금서당으로 고쳤다. 금(衿)의 색깔은 자록(紫綠)이었다. 셋째는 백금서당(白衿誓幢)이었다. 문무왕 12년(672)에 백제민(百濟民)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금(衿)의 색깔은 백청(白靑)이었다. 넷째는 비금서당(緋衿誓幢)이었다. 문무왕 12년(672)에 처음으로 장창당(長槍幢)을 설치하였다가 효소왕(孝昭王) 2년(693)에 비금서당으로 고쳤다. 다섯째는 황금서당(黃衿誓幢)이었다. 신문왕 3년(683)에 고구려민(高句麗民)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금(衿)의 색깔은 황적(黃赤)이었다. 여섯째는 흑금서당(黑衿誓幢)이었다. 신문왕 3년(682)에 말갈국민(靺鞨國民)으로 당을 만들었다. 금(衿)의 색깔은 적흑(赤黑)이었다. 일곱째는 벽금서당(碧衿誓幢)이었다. 신문왕 6년(686)에 보덕성민(報德城民)으로 당을 만들었다. 금(衿)의 색깔은 벽황(碧黃)이었다. 여덟째는 적금서당(赤衿誓幢)이었다. 신문왕 6년(686)에 또 보덕성민으로 당을 만들었다. 금(衿)의 색깔은 적흑(赤黑)이었다. 아홉째는 청금서당(靑衿誓幢)이었다. 신문왕 7년(687)에 백제잔민(百濟殘民)으로 당(幢)을 만들었다. 금(衿)의 색깔은 청백(靑白)이었다.²⁹⁾

대체로 9서당은 통일기 신라의 핵심적인 중앙군단으로서 국왕에 직속하여 왕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대로 파악하여 왔다.³⁰⁾ 통일기 9서당은 신라민으

28) 신라사회의 명망군에 대해서는 李基白,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참조

29) 『삼국사기』 권40 잡지 9 직관하.

로 구성된 것이 3개, 백제민으로 구성된 것이 1개, 백제잔민으로 구성된 것이 1개, 고구려민으로 구성된 것이 1개, 말갈민으로 구성된 것이 1개, 보덕성민으로 구성된 것이 2개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원래 신라의 군단으로 9서당에 편제된 것은 서당과 낭당, 長槍幢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서당과 낭당은 진평왕대에 설치되었고, 장창당은 문무왕 12년(672) 나당전쟁의 과정에서 창설되었다. 통일 이후 왕경의 중앙군단으로 편성한 부대명을 아홉 개의 서당이라는 의미인 9서당이라고 이름한 것은 서당의 성격을 확대조직한 9서당에 덧씌우기 위해서였다. 서당은 ‘誓’의 글자 그대로 ‘맹서하다’, ‘호령을 선언하다’라는 뜻에서 ‘맹세를 받은 군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³¹⁾ 국왕 직속 부대의 성격을 지닌다. 낭당은 원래 화랑과 낭도라는 兵員의 구성으로 신라 사회의 특수성과 연계된 부대였지만,³²⁾ 통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왕권에 밀착하는 부대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여겨진다. 결국 9서당은 문무왕대에 기존의 서당을 典範으로 衿色에 따라 구별되는 서당 부대를 증설하기 시작해 신문왕대를 거쳐 효소왕 2년(693) 장창당을 비금서당으로 고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신라는 왕경에 소모병 중심의 9서당을 새롭게 배치하면서 중앙 군단을 정비하였다.³³⁾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왕경에 존재하던 삼천당의 향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앞의 사료 B를 살펴보면 언급했듯이 삼천당은 지방에 설치되는 십정으로 전환되었다. 군호 십정의 분주에 기록되었던 ‘십정, 혹은 삼천당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아래의 <표 1>에서처럼 십정의 군관조직 구성을 통해서도 삼천당이 십정 조직으로 전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0) 末松保和,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1) 末松保和, 위의 책, 1954, 349쪽.

32) 신라사회에서의 화랑과 낭도 집단의 군사활동에 대한 조명은 이기동, 「신라 화랑도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한국연구원, 1980, 322~327쪽 참조

33) 이문기, 「7세기 후반 신라의 군제개편과 그 성격에 대한 일시론」, 『한국고대사연구』 16, 1999. 기존 신라의 중앙 군제의 핵심 군단은 대당이었다. 대당은 왕경인 군역의무자를 징발하여 편성한 군사조직으로 이해되는데 9서당 정비 이후 대당의 추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면에서 다루고 싶다.

〈표 1〉十停의 軍官조직

	隊大監	少監	火尺	三千幢主	三千監	三千卒
음리화정	1	2	2	6	6	15
고량부리정	1	2	2	6	6	15
거사물정	1	2	2	6	6	15
삼랑화정	1	2	2	6	6	15
소 삼 정	1	2	2	6	6	15
미다부리정	1	2	2	6	6	15
남 천 정	1	2	2	6	6	15
골내근정	1	2	2	6	6	15
벌력천정	1	2	2	6	6	15
이화혜정	1	2	2	6	6	15
관등	⑥阿浪	⑫大舍	⑬舍知	⑧沙浪	⑩大奈麻	⑩大奈麻
	~ ⑪奈麻	~ ⑰造位	~ ⑰造位	~ ⑬舍知	~ ⑬舍知	~ ⑰造位
비고	領馬兵 着衿	領騎兵 着衿	領騎兵 —	— 着衿	— 着衿	— —

이 표는 『삼국사기』 직관지 武官조의 諸軍官 항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문기는 10정 軍官들의 관등규정 혼란에 착목하여 10정의 군관조직이 대대감—소감—화척 계열과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 계열의 두 계열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곧 확실적인 10정 군관조직이 설치될 때 기존 삼천당 시기의 군관조직(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이 문무왕대에 분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대대감³⁴⁾ 계열의 군관조직과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여 삼천당의 군관조직은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로 구성되었음을 논단하였다.³⁵⁾

이는 매우 경청할만한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군관조직으로 볼 때 기존 삼천당의 군관조직과 기병을 통솔하는 대대감 계열의 군관조직이 합쳐지면서 10정으로 조직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삼천당은 10정의 前身으로 진흥왕 5년(544)에 설치되어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 계열의 군관조직으로 이루어졌었고, 이후 어느 시기에 대대감 계열의 군관조직이 통합되어 10

34) 井上秀雄, 「新羅兵制考」, 앞의 책, 1974, 142~147쪽.

35) 이문기, 「삼천당의 성립과 그 성격」, 앞의 책, 1997, 130~132쪽.

정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문기는 삼천당의 향방을 新三千幢³⁶⁾이라는 새로운 부대의 창설을 매개로 문무왕 12년(672)경에는 적어도 소멸되거나 다른 군사조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³⁷⁾ 그러나 삼천당이 어떤 형태로든 십정 조직의 완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를 기존 삼천당의 소멸 혹은 변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10정의 완성을 9州制가 완비되는 신문왕 5년(685) 이후로 보는 견해가 주류였다.³⁸⁾ 물론 신라의 9주제는 문무왕대부터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신문왕대에 이르러 완성되므로 지방의 주에 배치되는 모든 10정이 한번에 일괄적으로 두어진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문무왕에서 신문왕대 사이에 순차적으로 설치되는 주에 배치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삼천당을 신삼천당이 새로 설치되던 문무왕 12년, 16년에 소멸하거나 변화했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牛首州와 奈吐郡, 奈生郡에 새로 설치하면서 지명을 관칭한 삼천당을 新三千幢 혹은 外三千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당시까지 왕경에 內삼천당에 해당하는 기존의 삼천당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어찌됐건 기존의 왕경에 존재하면서 유사시의 예비지원부대로 활동하던 삼천당은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면서 새롭게 창설되는 왕경부대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점점 상실해간다. 취도 열전에서 삼천당이 조천성 전투에 바로 투입되지 못했던 모습이 이 사실을 방증한다고 보아도 좋다. 통일 이후에는 국왕권에 밀착된 대규모의 부대인 9서당이 왕경에 배치되자 삼천당은 더더욱 왕경에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던 듯하다. 이 와중에 지방제도와 군사제도가 연동하여 정비되면서 삼천당은 지방에 새롭게 설치되는 십정의 군관조직 내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천당 자체가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10정 내부에서도 예비지원부대의 위상을 지닌 삼천당주 — 삼천감 — 삼천졸 계열로 자리매김했

36) 『삼국사기』 권40 잡지 9 직관하. “新三千幢 (一云外三千) 一曰牛首州三千幢 二曰奈吐郡三千幢 文武王十二年置 三曰奈生郡三千幢 十六年置 衿色未詳”

37) 이문기, 「삼천당의 성립과 그 성격」, 앞의 책, 1997, 140~142쪽.

38)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366~367쪽. 최근까지도 신문왕대 전반에 10정이 완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한준수, 「신라 신문왕대 10정의 설치와 체제정비」, 『한국고대사연구』 38, 2005).

다고 여겨진다. 대대감 — 소감 — 화척 계열은 馬兵과 騎兵을 통할하면서 기동력을 보지한 주력부대의 역할을 맡았으며, 보병부대인 삼천당 계열은 왕정에 주둔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력부대를 지원하는 보병부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어쩌면 牛首州와 奈吐郡, 奈生郡에 두어진 신삼천당도 해당 州와 郡 내부의 군단 및 부대의 예비지원부대적 성격으로 창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IV. 맺음말

신라의 삼천당은 진흥왕 5년(544) 大幢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왕경지역에 설치되었던 군사조직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태종무열왕 때 인물인 취도 열전에서 확인되는데, 이 글에서는 삼천당의 운용 양상을 검토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려 하였다. 태종무열왕 5년에 벌어진 조천성 전투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에게 북쪽 변경의 33성을 빼앗긴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에 태종무열왕은 김흠운이 출전한 낭당이 포함된 군사를 일으켜 조천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취도의 삼천당을 출전시켰다. 이때 김유신의 부대가 함께 출전하여 조천성(도리천성)을 탈환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취도가 배속된 삼천당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긴급한 상황에 주력군단들을 예비적으로 지원하는 부대로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도처럼 승려였던 인물도 자원하여 배속될 수 있었던 병원 구성의 방식으로 보아 강력한 전투력을 보지한 군단은 아니었던 듯하며, 주력군단의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진흥왕 5년에 대당과 함께 삼천당이 설치되었던 이유 또한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으로 대당에 대응하여 창설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태종무열왕대까지 이와 같이 성격으로 존재하던 삼천당은 통일 이후 신라의 왕정에 국왕권과 더욱 밀착된 대규모 군단인 9서당이 들어서게 되면서 왕경에서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마침 이 무렵 지방제도가 9주체제로 정비되면서 지방의 군제 또한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는데 왕정의 예비지원부대의 성격을 지녔던 삼천당은 삼천당주 — 삼천감 — 삼천졸 계열의 군관조직을 근간으로 10정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10정은 대대감

—소감— 화척 계열의 기병부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예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삼천당의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 계열의 군관조직이 결합하여 새롭게 성립한 지방군 체제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이면의 역사적 사실 속에서 軍號 十停의 분주에 십정의 異稱으로 삼천당이 기록되었던 것이다.

왕경의 삼천당이 십정 조직으로 전환 배치되어 지방군 체제 속에 새롭게 정립된 시기는 외삼천이라고도 불렸던 신삼천당이 설치되던 문무왕 12·16년 무렵이 아니라 9주 체제가 완비되는 신문왕 5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姜鳳龍, 「新羅 中古期 州制의 形成과 運營」, 『韓國史論』 16, 1987
- 金侁禹, 「新羅十停과 所在地名 變遷考」, 『慶州史學』 7, 1988
- 盧瑾錫,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 노중국, 「신라 통일기 구서당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론』 40·41, 서울대 국사학과, 1999
- 末松保和,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서영교, 「구서당 완성 배경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8, 2009
- 成周鐸, 「助川城의 位置에 對하여」, 『百濟研究』 4, 1973
- 이기동,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한국연구원, 1980
- 李基白,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 李文基,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對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李文基, 「新羅 6停軍團의 運用」, 『大丘史學』 29, 1986
- 李文基, 「신라 시위부의 성립과 성격」, 『歷史教育論集』 9, 1986
- 이문기, 「신라 중고기 삼천당과 그 성격」,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 李文基,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對한 一試論」, 『한국고대사연구』 16, 1999
- 이문기, 「신라 문무왕대 군사정책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32, 2004
- 李成市, 「新羅六停의再檢討」, 『朝鮮學報』 92, 1979
- 井上秀雄, 「新羅兵制考」,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鄭永鎬, 「百濟 助川城考」, 『百濟研究』 3, 1972
- 정요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 王京과 州治·小京 간 연결을 중심으로 - 」,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 朱甫墩, 「新羅 中古期 6停에 對한 몇가지 問題」, 『新羅文化』 3·4합집, 1987
-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한준수, 「신라 신문왕대 10停의 설치와 체제정비」, 『韓國古代史研究』 38,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Nature and Progress of Samcheondang(三千幢) in Silla(新羅)

Lee, Kyoung-Sup*

Silla's Samcheondang(三千幢) was installed in the fifth year of King Jinheung(眞興王)'s reign(544), and its specific activities were introduced in the biography of Chuido(騾徒) in Samguksagi(三國史記) as the unit to which he was assigned. Furthermore, it was recorded as "Or call it Samcheondang [或云三千幢]" in the Bunju(分註) to explain the Sipjeong(十停) of Mugwan(武官) in Jikgwanji(職官志). As for the origin of Samcheondang during the middle ancient period(中古期) of Silla, it was estimated to have been run as an independent unit based in the Capital as a preliminary backup forces unit against Tang. Reflecting the corp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 the old Tang-Samcheondang relations, Sipjeong installed after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was comprised of cavalry in the Daedaegam(隊大監) line and infantry in the Samcheondangju(三千幢主) lin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Silla's Samcheondang was present in the military system of early Silla and had certain impacts on the complete military system of Unified Silla.

Key Words : Samcheondang, Silla, Sipjeong, Chuido, Mugwan in Jikgwanji

* Researcher,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교신 : 이경섭 1291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45
2204동 2203호
(E-mail: ahistory@daum.net)

논문투고일: 2018. 04. 19

심사완료일: 2018. 04. 25

게재확정일: 2018. 06. 07

『聖德太子伝歴』에 반영된 新羅觀과 그 撰者

이주희 *

- I. 머 리 말
- II. 任那문제와 豺狼, 新羅
- III. 虎狼之國, 新羅
- IV. 寬平 新羅海賊과 藤原兼輔
- V. 맺 음 말

국문요약

893년 4월 宇多天皇이 다스리던 平安시대, 日本 京都 궁전이다. 천황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敦仁親王이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황태자는 자신을 위해 마련된 春宮에 들어갔다. 황태자의 外祖父인 藤原高藤의 조카 藤原兼輔가 황태자 보좌 자리인 春宮展上에 임명되었다. 외척의 일원이었던 藤原兼輔는 청운의 꿈을 품은 시기였다.

그런데 春宮 근무 한 달이 된 5월 22일부터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신라 해적이 침입해 왔다는 것이다. 그 소식이 태자궁에 계속 전해졌다. 지난 5월 11일 “新羅賊이 肥前國 松浦郡에 왔다고 합니다.” 윤5월 3일 “新羅賊이 肥後國 飽田郡에 들어닥쳐서 집들을 불 지르고 또 肥前國 松浦郡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해를 넘겨서도 신라 해적의 노략질은 계속되었다. 894년 3월 13일 “新羅賊이 損侵하여 邊島를 약탈했습니다.” 4월 14일 “新羅賊이 對馬島에 來著했습니다.” 4월 16일 “신라 해적(兇賊)을 토벌했습니다.” 4월 30일 “신라 해적 20인을 사살했습니다.” 9월 19일 “신라 해적 200여 인을 사살했습니다.” 10월 6일에는 新羅 賊船이 退去한 연유를 알려왔다.

* 中源大學校 韓國語教育文化學科 教授

태자를 보좌했던 藤原兼輔는 신라해적 활동에 대해 東宮에 보고했거나 황태자와 함께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宇多天皇에 이어 보위에 오를 황태자와 신라 해적의 활동에 대해 무심한 태도일 리 만무하다.

917년 4位로서 藏人頭에 임명된 藤原兼輔는 『聖德太子伝暦』의 저술을 시작했다. 『伝暦』에서 新羅國은 豺狼이 交接하는 땅이며, 약한 나라(任那)를 괴롭히는 虎狼之國으로 묘사되어 있다. 신라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은 그가 황태자궁에서 일하고 있던 시기(893~4)의 신라해적에 대한 기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주제어 : 藤原兼輔, 聖德太子, 新羅賊, 豺狼, 虎狼.

I. 머리말

『聖德太子伝暦』(이하『伝暦』)은 平安時代에 찬술된 聖德太子伝이다. 통칭, 『伝暦』이라고 한다. 聖德太子伝承·伝記가 『伝暦』에 집대성된 후 여러 형태로 유포되어 갔다. 따라서, 성덕태자전승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헌이다.¹⁾

『伝暦』의 원형은 10세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성립기의 모습을 복원한 藤原猶雪(1891~1958)은 管家本 『伝暦』의 太子伝傍註에 인용된 爲長²⁾ 書寫의 奥書에서 延喜 17년(917) 9월 ‘藏人頭 藤原兼輔가 著述’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³⁾

그러나 그 귀중한 실마리는 1923년 9월 1일 東京을 강타한 關東大地震의 재앙에서 燒失되고 말았다.⁴⁾ 때문에 藤原猶雪 說의 正否를 논하는 것 자체

- 1) 松本眞輔, 「니치라(日羅) 설화의 변천 - 『일본서기(日本書紀)』를 일탈하는 쇼토쿠(聖德) 태자 전 - 」 『일본학연구』 제3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년 9월, 271쪽 참조.
- 2) 菅原爲長(1158-1246) 大學頭 菅原長守의 아들로 태어나 正2位까지 올라갔고, 최종관직은 大藏卿으로서 勘解由長官을 兼任했다.
- 3) 藤原猶雪, 『復元聖德太子伝暦』 東京 聖德太子奉讃會, 1927(昭和 2年); 「聖德太子伝暦復元の研究」 『日本佛教史研究』 1권, 大同出版社 1938(昭和 13年) 226-230쪽 (현 서울대 도서관 소장).
- 4) 藤原猶雪, 「聖德太子伝暦復元の研究」 『日本佛教史研究』 1권, 大同出版社 1938(昭和 13年) 230쪽.

가 쉽지 않게 되었다. 그 후 太田晶二郎씨와 飯田瑞穂가 『伝暦』의 찬자가 藤原兼輔임을 알려주는 菅原爲長の 奥書を 『壺中鈔』와 天理大學圖書館架藏 『伝暦』의 寫本에서 찾아냈다.⁵⁾

그리하여 『伝暦』의 撰者が 藤原兼輔이며 그 성립 연대가 延喜 17년(917) 9월이라는 藤原猶雪 說이 다시 부각되었다. 하지만 藤原猶雪 說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⁶⁾ 阿部隆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藤原猶雪의 校勘의 방법은 諸本을 비교하는 周到한 準備 위에 추론된 것도 아니고, 校勘資料로서도 不確實한 여러 자료를 기초로 연구한 것이어서 문헌학상 심히 不備粗漏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藤原猶雪의 『伝暦』 復元 本은 다른 古書에 인용된 『伝暦』의 逸文과 합치되지 않고 流布本과 합치되고 있어서 藤原兼輔(877~933)가 『伝暦』의 撰者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⁷⁾ 또한 藤原兼輔가 歌人으로서 명성이 높았지만 불교신앙이나 太子信仰에 造詣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伝暦』의 撰者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현 일본 학계 일부의 주장이다.⁸⁾

무엇보다 『伝暦』은 『聖德太子平氏伝』, 『平氏太子傳』, 『平氏傳』이라 불리여진다. 때문에 오늘날 전해지는 『伝暦』이 平氏와 무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사라질 수 없다.

『伝暦』이 어느 한사람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최초로 집대성한 인물은 있었다고 본다. 『伝暦』에 반영된 新羅觀을 통해서 그 찬자를 찾아보자. 먼저 본문 2장·3장에서 『伝暦』에 보이는 新羅觀에

위의 논고는 『復元聖德太子伝暦』과 아래 두 논문을 합쳐서 종합한 논고이다.

藤原猶雪, 「聖德太子伝暦正本の研究」 『仏教研究』 2-3 大谷大學仏教研究會 1921(大正10年) 22-61쪽.

藤原猶雪, 「誤られたる太子伝暦」 『東方佛教』 1권 1호 東方仏教協會 1926(大正15年)

- 5) 太田晶二郎, 「太子伝暦の藤原兼輔撰述說」 『日本歴史』 123, 吉川弘文館 1958-9, 53-55쪽.

飯田瑞穂, 「菅原爲長本聖德太子伝暦の奥書」 『日本歴史』 124, 吉川弘文館 1958-10. 64-65쪽.

- 6) 田中嗣人, 『聖德太子信仰の成立』 吉川弘文館, 1983(昭和 58년), 59-73쪽.

- 7) 阿部隆一, 「室町以前成立聖德太子伝記類書誌」 『聖德太子論集』 聖德太子研究會 平樂社書店, 1971, 523-532쪽.

- 8) 坂本太郎, 「日本書紀と聖德太子伝暦」 『南都佛教』 29, 東大寺教學部內 南都佛教研究會 1972, 1쪽.

대해 『日本書紀』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⁹⁾ 『伝暦』의 찬자가 살았던 시대의 사실이 차이점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4장에서는 『伝暦』의 찬자가 젊은 시절 인지했을 신라 관련 사건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伝暦』을 최초로 집대성한 찬자를 알 수 있을 것이다.¹⁰⁾

II. 任那 문제와 豺狼, 新羅

『伝暦』에는 신라가 일본에 불교문화를 전달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성덕 태자(574~622)를 숭상하는 나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임나문제가 나오면 신라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伝暦』의 내용과 『日本書紀』의 기록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崇峻天皇 4년(591) 20세,

- ① 가을 8월에 군신들에게 이르기를 :“짐이 임나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니 군신들이 모두 詔旨에 뜻을 같이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 ② 태자가 홀로 아뢰기를 :“신라는 豺狼과 같은 무리여서 貪婪함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외형상 부합하며 따르는 듯해도 내면적 실상은 배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군대를 일으키더라도, 濟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③ 게다가 또 궁정 부근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것(宮廷近有血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은 馬子が 임금을 시해한다는 징조임을 예언한 것이다.”¹¹⁾

9) 본고의 제목과 목차를 작성하는데 다음의 연구가 참고 되었다. 榊原小葉子, 「『聖德太子伝暦』にみえる中國觀」『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 15, 2005-3, 1-10쪽.

10) 찬자는 典故를 사용하여 당시 시대적 분위기나 정서를 표출하였다(조지형, 「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 『국어문학』 60, 국어국문학회 2015. 169-195쪽 참조). 전고는 전례(典例)와 고사(故事)를 지칭하는 말로서, 선행 텍스트의 어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수사법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낯선 어휘들의 경우 사전류를 찾으면 되지만, 전고의 경우 문 의(文意)만으로는 추정하기 힘든 별도의 내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11) 『聖德太子伝暦』 崇峻天皇 4년(591) 20세, “辛亥, ①秋八月, 詔群臣曰:「朕思欲建任

①에 대응하는 『日本書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승준천황 4년(591)

8월에 천황이 군신들에게 이르기를 “짐이 임나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경들은 어떠한가? 하니 여러 신하가 “임나에 官家를 세우는 것은, 모두 폐하의 명하신 바와 뜻을 같이 합니다.”라고 아뢰었다.¹²⁾

591년 8월 승준천황이 신하들에게 임나 재건의 의사를 전달하자 모든 신하가 이에 찬성했다. ①은 위의 기록과 내용상 동일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紀男麻呂宿禰 등을 대장군으로 하는 신라 원정군 2만여 명이 筑紫에 주둔하며 신라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¹³⁾

그렇지만 ②의 기록은 『日本書紀』에는 보이지 않고, 『伝歴』에만 존재하는 기록이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상론하겠다.

③과 비교할 만한 기록이 『日本書紀』에 있다. 그러나 『伝歴』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며 발생 년도도 그 이듬해이다.

승준천황 5년(592)

“(10월 4일) 멧돼지를 바친 일이 있었다. 천황이 멧돼지를 가리키며 “언제가 이 멧돼지의 목을 자르는 것처럼, 짐이 싫어하는 사람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많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평상시와 달랐다.

(10월 10일) 蘇我馬子宿禰가 천황이 한 말을 듣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무리를 불러 천황을 죽이고자 하였다.

(11월 3일) 馬子宿禰는 여러 신하를 속여 “오늘 東國의 調를 올린다.”라고 말하고 곧 東漢直駒로 하여금 천황을 죽이게 하였다[동한직구는 東漢直磐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¹⁴⁾

那. 卿等如何?」群臣奏曰：「皆同詔旨」 ②太子獨奏曰：「新羅豺狼，貪婪難量。外稱相隨，內實相叛。今雖興軍，不得濟成。③況亦宮廷近有血臭乎。是預言馬子弑君之兆。」

12) 『日本書紀』 권21 崇峻天皇 4년(591) 8월, 天皇詔群臣曰. 朕思欲建任那. 卿等何如. 群臣奏言, 可建任那官家, 皆同陛下所詔.

13) 『日本書紀』 권21 崇峻天皇 4년(591) 11월, 己卯朔壬午, 差紀男麻呂宿禰·巨勢猿臣·大伴嚙連·葛城烏奈良臣, 爲大將軍. 率氏臣連, 爲裨將部隊, 領二萬餘軍, 出居筑紫. 遣吉士金於新羅, 遣吉士木蓮子於任那, 問任那事.

14) 『日本書紀』 권21 崇峻天皇 5년 (592) 10월, 癸酉朔丙子, 有獻山猪. 天皇指猪詔曰, 何時如斷此猪之頸, 斷朕所嫌之人. 多設兵杖, 有異於常.

위에서 보듯이 『日本書紀』에서는 승준천황 5년(592)에 천황이 받쳐진 멧돼지를 통해 피비린내를 예고했고, 바로 그 대상인 소아마자가 천황보다 앞서 사람을 시켜 천황을 시해했다.

그런데 『伝曆』에서는 승준천황 4년(591)에 성덕태자가 궁정 근처에 피냄새가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蘇我馬子 대신이 천황을 시해하는 전조임을 태자가 예측한 것이다.

『日本書紀』에서 ‘如斷此猪之頸, 斷朕所嫌之人. 多設兵杖, 有異於常’ 조에서 느껴지는 이상 기류를 『伝曆』에서는 ‘宮廷近有血臭’라고 환치하며, 찬자는 태자를 임금 시해의 징후를 느끼는 능력자, 예언가로 만들었다.

②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신하가 천황의 임나 재건 군사행동에 찬동했지만, 태자만이 그것이 실패할 것임을 예언했다. ‘신라는 豺狼과 같아, 그 탐욕스러움을 헤아리기 어려워서, 밖으로는 따른다고 외치지만, 내적으로는 모반하고 있으니 비록 공격한다고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부분 또한 태자의 존재성을 부각하는 대목이다.

591년 11월 왜국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筑紫에 2만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협박을 했다. 592년 11월 蘇我馬子は 승준천황을 피살한 직후 筑紫에 사신을 보내 장군들에게 내란 때문에 국외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¹⁵⁾ 그 명령에 따라 일본군은 筑紫에서 4년 이상 주둔했지만 결국 현해탄을 건너지 못하고 철수했다.¹⁶⁾ 이 부분에서도 『伝曆』의 작자는 태자를 왜의 실패를 예견한 신이한 존재로 만들었다.

한편 필자는 이 부분에서 성덕태자가 신라를 승냥·이리(豺狼) 같다고 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伝曆』의 찬자가 읽었던 『日本書紀』에 그 용례로 두가지가 보인다. 『日本書紀』 雄略天皇 5년(461) 2월 조와 『日本書紀』 欽明天皇 23년(561) 7월 조를 살펴보자.

『日本書紀』권21 崇峻天皇 5년(592) 10월, 壬午, 蘇我馬子宿禰, 聞天皇所詔, 恐嫌於己. 招聚黨者, 謀殺天皇.

『日本書紀』권21, 崇峻天皇 5년(592) 11월, “馬子宿禰, 詐於群臣曰, 今日進東國之調. 乃使東漢直駒, 弑于天皇[或本云, 東漢直駒, 東漢直磐井之子也]. 是日, 葬天皇于倉梯岡陵[或本云, 大伴嬪小手子, 恨寵之衰, 使人於蘇我馬子宿禰曰, 頃者有獻山猪. 天皇指猪而詔曰, 如斷猪頸, 何時斷朕思人. 且於內裏, 大作兵仗. 於是, 馬子宿禰, 聽而驚之].”

15) 『日本書紀』 권21, 崇峻天皇 5년(592)11월, “遣驛使於筑紫將軍所曰, 依於內亂, 莫怠外事.”

16)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3년(595)7월, “將軍等至自筑紫.”

461년 雄略天皇대 천황이 葛城山 사냥터에서 겪은 일이다. 성난 멧돼지가 난폭하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舍人이 천황을 지키지 않고 나무로 올라가 피한 사건이 일어났다. 직전에 천황이 舍人에게 “맹수도 사람을 만나면 멈추게 된다. 가로막고 활을 쏘아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겁을 먹고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다. 천황은 멧돼지를 직접 죽인 후, 사인을 베어 죽이려 했다. 그때 황후가 슬퍼하며 급히 조언했다.

“백성들은 모두 폐하가 사냥을 즐기시고 짐승을 좋아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도리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폐하는 지금 성난 멧돼지 때문에 노여워서 舍人을 베려고 하십니다. 폐하를 비유하면 豺狼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¹⁷⁾

豺狼이에 빗대어 힐책을 들은 천황은 舍人을 죽이지 않고 “남들은 모두 짐승을 사냥하였으나, 짐은 사냥 와서 훌륭한 이야기를 얻어서 돌아간다.”라고 했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562년 7월 왜국은 임나를 재건하기 위해 대장군 紀男麻呂宿禰가 이끄는 군대를 현지에 파견하였다. 紀男麻呂宿禰가 신라군을 격파하고 백제 군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부하들에게 연설했다.

“무릇 승리할 때도 패할 때를 잊지 않아야 하고, 편안할 때도 반드시 위급할 때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유익한 교훈이다. 지금 너희들은 변방에 있고, 豺狼이 같은 놈들과 접한 곳이다. 그런데 경솔하게 여겨 변란(사변)이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⁸⁾

17) 『日本書紀』 권14, 雄略天皇 5년 (461) 2월, “天皇校獵于葛城山. 靈鳥忽來. 其大如雀. 尾長曳地. 而且鳴曰, 努力努力. 俄而見逐嘖猪, 從草中暴出逐人. 獵徒緣樹大懼. 天皇詔舍人曰, 猛獸逢人則止. 宜逆射而且刺. 舍人性懦弱, 緣樹失色, 五情無主. 嘖猪直來, 欲噬天皇. 天皇用弓刺止, 舉腳踏殺. 於是, 田罷, 欲斬舍人. 舍人臨刑, 而作歌曰, 野須彌彌志, 倭我飢袁枳彌能, 阿蘇麼斯志, 斯斯能, 字拖枳阿斯固彌, 倭我尼号能褒利志, 阿理鳴能字倍能, 婆利我曳陀, 阿西鳴. 皇后聞悲, 興感止之. 詔曰, 皇后不與天皇, 而顧舍人. 對曰, 國人皆謂陛下, 安野而好獸. 無乃不可乎. 今陛下以嘖猪故, 而斬舍人. 陛下譬無異於豺狼也. 天皇乃與皇后上車歸. 呼萬歲曰, 樂哉. 人皆獵禽獸. 朕獵得善言而歸.”

18)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23년(561) 7월, “是月, 遣大將軍紀男麻呂宿禰, 將兵出哆

신라군과 전쟁터가 된 임나의 어느 변방 지역을豺狼과 서로交接하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신라군을豺狼이라 표현했다.豺狼과豺狼은 같은 의미이다. 현재豺狼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으로豺狼은 ‘탐욕이 많고 無慈悲한 사람’과 ‘잔혹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비유한다.’¹⁹⁾

豺狼交接이라는 표현은 『三國志』 권47, 吳書2 吳主(孫權)傳 黃初 2년(221年)8월조에 등장한다.

“무릇 생존할 때는 멸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하며, 편안할 때 반드시 위험이 있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고대의 유익한 교훈이다. 옛날 雋不疑는 한나라의 명신인데, 태평스러운 세상에서도 칼을 몸에서 떼어놓지를 않았다. 대개 군자가 무기를 갖추에 있어서 이러할 진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변방에 있고,豺狼과 같은 이들과 접하고 있는데, 경솔하게 변란이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⁰⁾

손권은 강동의 맹주였던 형 孫策(175년~200년)이 죽자 그 뒤를 이어 강남의 경영에 힘썼다. 219년 전후 손권은 조조와 유비의 군대를 격파하고 공략했으며, 그 결과 魏·蜀·吳 3국의 영토가 거의 확정되었다. 221년 삼국이 각각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守成의 명장 손권이 武昌城을 수축하고 장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손권은 漢代 安平之世와 魏·蜀·吳 삼국분립 당시를 ‘豺狼交接’ 시대라고 하였다. 이처럼 豺狼交接은 전란으로 위험한 시대와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

이상 『伝曆』 태자 20세 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伝曆』

㉠ 副將河邊臣瓊岳, 出居曾山. 而欲問新羅攻任那之狀. 遂到任那, 以薦集部首登弭, 遣於百濟, 約束軍計. 登弭仍宿妻家. 落印書弓箭於路. 新羅具知軍計. 卒起大兵, 尋屬敗亡. 乞降歸附. 紀男麻呂宿禰, 取勝旋師, 入百濟營. 令軍中曰, 夫勝不忘敗, 安必慮危, 古之善教也. 今處疆畔, 豺狼交接. 而可輕忽, 不思變難哉. 況復平安之世, 刀劍不離於身. 蓋君子之武備, 不可以已. 宜深警戒, 務崇斯令…”

19) 『大辭林』 제3판 ① やまいぬとおおかみ. ② 貪欲で無慈悲な人.

『デジタル大辞泉』 ① やまいぬとおおかみ. ② 残酷で欲深い人. むごたらしいことをする人.

20) 『三國志』 권47, 吳書2 吳主傳 黃初 二年 四月, “…權自公安都鄂, 改名武昌, 以武昌, 下雒, 尋陽, 陽新, 柴桑, 沙羨六縣爲武昌郡. …八月, 城武昌, 下令諸將曰: 「夫存不忘亡, 安必慮危, 古之善教. 昔雋不疑漢之名臣, 於安平之世而刀劍不離於身, 蓋君子之於武備, 不可以已. 況今處身疆畔, 豺狼交接, 而可輕忽不思變難哉.”

에서는 신라를 豺狼에 빗대었다. 그리고 성덕태자는 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자로 부각되었다. 이것은 『日本書紀』에 없는 기록으로 『伝歴』 저자의 신라관과 시대관을 압축한다고 할 수 있다.

Ⅲ. 虎狼之國, 新羅

推古天皇 8년(600) 가야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이 상황에 대하여 『日本書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우자 천황이 임나를 구하려고 하였다.²¹⁾” 그런데 『伝歴』에서는 천황이 아닌 성덕태자가 참전을 주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

推古天皇 8년(600) 29세

“天皇께서 하문하길 : “신라와 임나 간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태자가 아뢰기를 : “신라는 虎狼之國입니다. 제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오히려 임나를 범할 것이며, 멸망시키지 않으면, 저들이 오히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요청하오니, 저들을 토벌하여 항복하게 하기를 명하시옵소서.” 천황은 그리하라고 명했다. 이에 阿倍臣을 대장군으로 삼고, 穗積臣을 부장군으로 삼았다. 장수 2만여 명과 함께 임나가 신라를 정벌하게 하여 신라의 五城을 급습하여 무찔렀다. 신라왕이 놀라서 백기를 들고 회하에 이르렀다. 신라가 六城을 나누어 주며 항복하였다. 장군 등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 그들을 놓아주고, 신라에서 돌아왔다. 신라가 다시 임나를 침략하였다. 태자가 이를 듣고, 좌우에 일러 : 「이것은 참으로 의논할 바이다.」라고 하였다.²²⁾

천황은 성덕태자의 의견을 듣고 신라 침공을 결정했다. 왜군 2만이 임나를 위해 신라를 공격하여 5개 성을 함락시켰고, 신라왕이 이에 놀라 6개 성을 들고 항복했다. 그러자 천황은 용서하여 그것을 받아들였고, 왜군은 철수

21)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8년(600) 2월, “新羅與任那相攻. 天皇欲救任那.”

22) 『聖德太子伝歴』 推古天皇 8년(600) 29세, “庚申, 春正月, 天皇敕曰 : 「新羅, 任那相攻如何?」 太子奏曰 : 「新羅者, 虎狼之國也. 不承我命, 猶犯任那. 不致滅亡, 彼猶不輟. 臣乞, 命將加討令服.」 天皇然之. 於是, 以阿倍臣爲大將軍, 穗積臣爲副將軍, 將二萬餘衆, 爲任那伐新羅. 急攻五城而拔之. 新羅王惶, 舉白旗到於麾下. 割六城而請降. 將軍等奉詔免之, 至自新羅. 新羅亦侵任那. 太子聞之, 謂左右曰 : 寔如所議矣.”

했다.

『日本書紀』推古天皇 8년(600)2월 조에 『伝曆』의 내용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

이 해에 境部臣을 대장군으로 삼고 穗積臣을 부장군으로 삼아 (모두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任那를 도와 신라를 치도록 명하였다. 이에 곧바로 신라를 향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마침내 신라에 이르러 5城을 공략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두려워하며 백기를 들고 장군의 휘하에 섰다. 그리고 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迦羅·阿羅羅 6개의 城을 할양하며 항복을 청하였다. 그때 장군들이 함께 의논하여, “신라가 죄를 알고 항복하니 구태여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 하고, 곧 (천황에게) 아뢰었다. 천황이 다시 難波吉師神을 신라에 파견하고, 또 難波吉士木蓮子를 任那에 보내어 주변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신라·임나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調를 바치고, 表를 올려 “하늘에는 神이 있고 땅에는 天皇이 있으니, 이 두 신 말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으로 이후로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또 배와 노가 마를 사이 없이 해마다 반드시 조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곧 사신을 보내어 장군을 소환했다. 장군들이 신라에서 돌아오자, 신라는 또 任那를 침공하였다.²³⁾

위 『日本書紀』의 기록을 『伝曆』과 비교하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伝曆』에 보이는 성덕 태자의 권위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둘째, 『伝曆』에서 성덕태자가 신라를 ‘虎狼之國’으로 표현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셋째, 『伝曆』에서 신라에 출전한 대장군이 ‘阿倍臣’이라고 하였지만 『日本書紀』에는 ‘境部臣’으로 나온다.

우선 출정 장군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자. 小墾田天皇이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죽자 여러 신하가 후계자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에서

23) 『日本書紀』권22, 推古天皇 8년(600)2월, 新羅與任那相攻. 天皇欲救任那. …是歲,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並闕名]. 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直指新羅, 以泛海往之. 乃到于新羅, 攻五城而拔. 於是新羅王惶之舉白旗, 到于將軍之麾下而立, 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加羅·阿羅羅六城. 以請服. 時將軍共議曰, 新羅知罪服之. 強擊不可. 則奏上. 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 復遣難波吉士木蓮子於任那. 並檢校事狀. 爰新羅·任那王, 二國遣使貢調. 仍奏表之曰, 天上有神. 地有天皇. 除是二神, 何亦有畏乎. 自今以後, 不有相攻. 且不乾般柁, 每歲必朝. 則遣使以召還將軍. 將軍等至自新羅. 卽新羅亦侵任那.

境部臣이 등장한다. 『伝歴』의 찬자는 境部臣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舒明天皇 35대 원년 정월 조를 보자.

애초 小墾田天皇 36년 3월에 천황이 죽었는데,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田村皇子와 山背大兄王이 있을 뿐이다. 大兄王은 상궁왕가로서 聖德태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蘇我馬子 대신의 딸이다. 그녀의 시아버지인 毛人臣 또한 대신이었다. ‘백성들은 대를 이어 대형왕이 왕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大臣(蘇我蝦夷臣; 소아마자의 아들)은 황위 계승자를 정하고자 했으나, 군신들이 협조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회의를 크게 열어 조회 신하들에게 “누구를 후계자로 세움이 마땅합니까?”라고 물으니 군신들은 감히 선뜻 답할 수 없었다. 이날, 太部-鯨子連 만이 진언하기를: ‘천황의 유언을 받들어 시행합니다. 田村皇子를 세우고 더 이상 의논하지 맙시다.’ 이에 의거하여 大臣과 군신들이 결의하고, 마침내 정책을 마련하였고, 드디어 (田村皇子를) 天皇으로 올립했다. 大臣은 叔父인 蘇我境部臣인 絜瀬가 군신의 논의를 따르지 않고 山背大兄王을 세우고자 하자 결국 서로 음해하며 원수가 되었다. 大臣은 군대를 일으켜, 신하 絜瀬와 그의 두 아들을 함께 죽였다. 바로 천황(田村皇子)에게 옥새를 받쳤다. 천황은 고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하의 간절한 바람을 이길 수는 없었고, 곧 황위에 올랐다.²⁴⁾

위의 기록은 626년 舒明天皇(田村皇子) 즉위 시의 일이다. 故 蘇我馬子の 아들이자 大臣을 계승한 蘇我蝦夷의 추대로 田村皇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정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蘇我蝦夷와 달리 성덕태자의 아들인 山背大兄王을 추대하고자 했던 境部臣이 바로 蘇我蝦夷 大臣의 叔父인 蘇我境部臣-絜瀬라고 하였다. 『伝歴』의 찬자는 境部臣과 蘇我蝦夷가 숙질관계라고 최초로 밝힌 장본인이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자가 600년 신라 침공의 대장군을 ‘境部臣’이라 하

24) 『聖德太子伝歴』 舒明天皇 원년 정월, 即位. 初小墾田天皇三十六年三月崩, 嗣位未定. 當此時, 唯有田村皇子及山背大兄王. 大兄王是上宮聖德之子, 母蘇我馬子大臣之女也. 其舅-毛人臣, 見亦爲大臣. 民望所係, 唯在此王. 大臣欲令嗣帝位, 恐群臣不協. 大會朝臣, 問曰:「誰可嗣位?」群臣無敢先答. 是日, 太部-鯨子連, 獨進曰:「試以奉順遺詔, 立田村皇子. 不可更議.」依此, 大臣及群臣決, 竟定策, 遂立天皇. 於是, 大臣叔父-蘇我境部臣-絜瀬, 欲立山背大兄王, 而不從群議. 遂構相怨矣. 大臣興兵, 殺絜瀬臣并二子. 卽獻神璽天皇. 天皇固辭不受. 然不勝群臣至願, 乃卽皇位矣.

25) 『書紀集解』 卷下, (東京:國民精神文化文獻 5, 國民精神文化研究所 1937), 28쪽 참조.

지 않고 ‘阿倍臣’이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600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蘇我馬子이고 그에게 버금가는 권력자는 境部臣이었다. 『일본서기』에 정통한 『伝暦』의 찬자는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聖德太子라는 직분이라 하더라도 境部臣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때문에 600년 왜국의 신라 침공을 성덕태자가 주도했다면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것이 『伝暦』의 찬자가 『日本書紀』 기록을 보고 성덕태자를 삼입시키는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에 境部臣을 阿倍臣으로 바뀌어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伝暦』의 찬자가 신라를 ‘虎狼之國’이라고한 것은 『史記』를 읽고 典故로 사용한 것 같다. 『史記』 권84, 「屈原賈生列伝」을 보자.

이때 秦의 昭王이 楚와 혼사를 하고자 懷王과 만나려고 하였다. 굴평이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와 같은 나라여서 믿을 수 없으니 가지 마십시오.” 하였다. 懷王의 어린 아들 子蘭은 왕이 가기를 권하며 “秦의 환대를 어찌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니 懷王은 결국 진나라로 갔다. 武關에 들어서니, 秦의 복병들이 그 후면을 끊어서, 懷王을 유괴하고, 땅을 분할할 것을 요구하였다. 懷王은 노하여 듣지 않고 趙나라로 도망갔다. 그러나, 趙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진나라에 간 초 회왕은 결국 그곳에서 붙잡혀 죽고 말았다.²⁶⁾

주지하다시피 戰國時代는 秦나라를 비롯하여 齊·楚·燕·魏·韓·趙의 7개국 이 패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다. 진나라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나머지 6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초나라 역시 그 위협을 피할 수는 없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진나라에 기만당했으며, 싸움에서 패배하였다. 그 후 진의 昭王은 거짓으로 초나라와 통혼을 청하며 초 懷王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다. 회왕은 어리석게도 이를 끝이듣고 진나라로 가려고 하였고, 이미 상황을 파악한 屈平은 함정임을 주장하며 ‘秦은 虎狼之國이어서 믿을 수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하였다. 결국 굴원의 충언을 무시한 회왕은 진나라에 갔고 그곳에서 붙잡혀 죽고 말았다.²⁷⁾ 이로부터 ‘虎狼之國’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

26) 『史記』 권84, 「屈原賈生列傳」, “時秦昭王與楚婚, 欲與懷王會. 懷王欲行, 屈平曰: 秦虎狼之國, 不可信, 不如毋行. 懷王稚子子蘭勸王行: 奈何絕秦歡! 懷王卒行. 入武關, 秦伏兵絕其後, 因留懷王, 以求割地. 懷王怒, 不聽. 亡走趙, 趙不內. 復之秦, 竟死於秦而歸葬.”

는 포악한 나라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伝歴』의 찬자는 『日本書紀』의 기록 중에 ‘왜군의 침공을 받고 항복한 신라왕이 왜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임나를 다시 공격한 기록’을 보고,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포악한 ‘虎狼之國’으로 신라를 지목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고의 수사법을 통해 편찬자가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고 그의 시대 의식을 극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 신라에 대해 지극히 적대적·비하적인 문구가 『日本書紀』의 기록 보다 『伝歴』에서 많이 덧붙여졌다.

그뿐만 아니라 601~603년 사이에 九州 筑紫 부근에서 활동하던 신라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601년에서 603년에 일어난 왜국의 筑紫 출병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일본서기』와 『伝歴』을 비교해보자.

『日本書紀』 추고천황 9년(601),

“(9월 辛巳 朔 戊子) 신라 간첩 迦摩多가 대마도에 도착했다. 즉시 잡아서 바쳤다. 上野에 유배했다.

(11월 庚辰 朔 甲申) 신라를 정벌할 것을 논의했다.”²⁸⁾

『伝歴』 추고천황 9년(601) 30세,

“(9월) 신라 간첩, 迦摩多라는 자가 對馬에 도착했다. 즉시 잡아서 바쳤다. 天皇이 장차 가혹한 법을 적용할까 太子가 상주하여 上野國에 유배하였다.

(11월) 신라를 공격할 것을 논의하였다.”²⁹⁾

601년 신라 간첩 迦摩多가 對馬島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고 上野에 유배되었다. 『伝歴』에서는 성덕태자가 아뢰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감경하여 유배형에 처했다고 하고 있다. 신라를 공격할 것을 의논한 내용은 같다. 다시 이어지는 기록들을 비교해 보자.

『日本書紀』 권22 추고천황 10년(602)

27) 『史記』「蘇秦列傳」에도 소진이 초나라에 가서 '무릇 잔나라는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사나운 나라로서 천하를 삼키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천하의 원수' “夫秦虎狼之國也。有吞天下之心，秦天下之仇讐也。”라고 유세했다.

28)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9年(601) 9月 조 “辛巳朔戊子。新羅之間諜者迦摩多到對馬。則捕以貢之。流于上野” 冬十一月 “庚辰朔甲申。議政新羅。”

29) 『聖德太子伝歴』 推古天皇 9年(601) 30세 “秋九月，新羅簡牒者，名曰 - 迦摩多。到對馬。卽捕而進。天皇將加酷法。太子奏之，流于上野國。冬十一月，庚辰，議攻新羅。”

“(2월) 來目皇子를 신라를 공격하는 장군으로 삼았다. 여러 神部 및 國造와 伴造 등과 軍衆 2만 5천 명을 내렸다.”...

“(6월) 大伴連囁와 坂本臣糖手が 백제에서 왔다. 이때 來目皇子가 병에 걸려서 정벌할 수 없었다.³⁰⁾

『伝暦』 推古天皇10년(602) 31세,

(1월) 태자가 아뢰기를 : 「수만의 정벌군을 일으켜 신라를 정벌하러 보내겠습니다.」 천황이 그리하라고 했다.

(2월) 來目皇子를 대장군으로 삼았다. 2만 5천의 병사를 이끌고 신라를 정벌하도록 했다.

(4월) 來目皇子가 筑紫에 도착했는데, 병이 들어 진군할 수 없었다. 太子가 이를 듣고, 좌우에게 일러 「新羅의 奴들에게 장군이 저주를 받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³¹⁾

『日本書紀』 602년 2월의 상황은 천황이 來目皇子를 대장군으로 삼고 2만 5천 명의 병사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筑紫로 출발하여 4월에 도착했다. 그러나 대장군이 병에 걸려 나아가지 못했다. 『伝暦』에서는 태자가 상주하여 신라를 정벌하게 되었고, 태자의 동생이기도 한 來目皇子가 병에 걸린 것을 듣고 좌우에 이르기를 新羅奴等이 將軍을 저주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한 번 『伝暦』 찬술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왜국 내부에 신라인들의 그림자가 어둡게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시 이어지는 기록들을 비교해 보자.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1년(603)

“(2월 癸酉朔 丙子)에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죽었다. 驛使를 시켜 이를 천황에게 알렸다. 천황이 듣고 크게 놀랐다. 황태자와 蘇我大臣을 불러 이르기를 “征新羅大將軍인 來目皇子가 죽었다. 그가 큰일을 맡았는데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실

30)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0年(602) 2월 “己酉朔 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 授諸神部及國造. 伴造等. 并軍衆二萬五千人.” “六月丁未朔己酉. 大伴連囁. 坂本臣糖手. 共至自百濟. 是時, 來目皇子臥病以不果征討.”

31) 『聖德太子伝暦』 推古天皇 10年(602) 31세, “壬戌, 春正月, 太子奏曰 : 「興數萬征軍, 遣伐新羅.」 天皇然之. 二月, 以來目皇子, 爲大將軍. 領二萬五千衆, 遣征新羅. 夏四月, 來目皇子, 到筑紫, 臥病不進. 太子聞之, 謂左右曰 : 「新羅奴等, 厭魅將軍. 疑不果度.”

로 슬프도다.”³²⁾

『伝歴』(추고천황)11년 (603) 32세

(2월) 대장군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죽었다. 太子가 수행원들에게: 「新羅奴等이 결국 장군을 죽였구나」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군사들의 복귀를 명했다.³³⁾

『日本書紀』에서는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천황이 듣고 매우 놀라 성덕태자와 蘇我大臣을 불러 슬퍼하며 來目皇子에게 큰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반면 『伝歴』에서는 태자가 來目皇子의 주검을 듣고 陪從들에게 말하기를 신라 놈들(新羅奴等)이 장군을 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찬자에게 있어 태자는 신라 간첩 迦摩多를 잔인하게 죽이지 않고 유배로 끝내는 유덕자이다. 반면 신라는 왜에서 토벌해야 할 虎狼之國이며 성덕태자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놈(奴)들이 사는 곳이다. 이러한 신라관은 『伝歴』의 찬술자가 살던 당시에 신라인들에 대한 왜국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IV. 寬平 新羅海賊과 藤原兼輔

藤原猶雪은 「聖德太子伝歴復元の研究」 『日本佛教史研究』 1권 228쪽에서 東京大學附屬圖書館架藏 管家本 『伝歴』 太子伝傍註에 인용된 奥書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古本奥書云延喜十七年九月藏人頭兼輔撰 又云此書平(本[猶雪])兼輔卿貫首之時所撰也云云. 按兼輔者光孝天皇曾孫篤行賜平姓, 其子兼輔也, 延喜十七八二十八補藏人

32)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1년(603) “春二月癸酉朔丙子, 來目皇子薨於筑紫. 仍驛使以奏上. 爰天皇聞之大驚, 則召皇太子·蘇我大臣, 謂之曰, 征新羅大將軍來目皇子薨之. 其臨大事而不遂矣. 甚悲乎. 仍殯於周芳娑婆. 乃遣土師連猪手, 令掌殯事. 故猪手連之孫曰娑婆連, 其是之緣也. 後葬於河內埴生山岡上.

33) 『聖德太子伝歴』 推古天皇 11년(603) 32세, “癸亥, 春二月, 大將軍 - 來目皇子, 薨于筑紫. 太子謂陪從曰: 「新羅奴等, 遂弑將軍」. 即敕還軍.”

頭 任中納言右衛門督 承平三二十八薨. 世號提黃門是也, 今度應尹宮所望清書此傳文加愚點者也. 寛元(1245)三年八月 爲長.”

撰者인 兼輔의 官歴과 사망 시점, 世號, 奥書의 작성자 이름 爲長이 여기에 보인다. 藤原兼輔와 平兼盛이 구분 되고 있지 않다. 이점을 藤原猶雪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위의 “又云此書平”이라고 하는 기록에서 ‘平’을 ‘本’으로 보았다. “此書本兼輔卿貫首之時所撰也”이라는 것이다. 필사의 과정에서 ‘本’이 ‘平’으로 바뀌었고, 平兼輔로 된 것은 오류라고 보았던 것 같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이는 太田晶二郎이 찾아 낸 東京大圖書館 소장 『壺中鈔』에 인용된 奥書에서 확인된다.

“又曰, 此書本兼輔卿貫首之時所撰也.”

太田晶二郎은 藤原猶雪도 東京大 圖書館 소장 『壺中鈔』에 인용된 奥書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此書, 堤中納言藤原兼輔紙廿丁計書編殘書. 平兼盛續之, 以爲太子伝. 題平中納言太子伝者, 以桓武帝後胤平中納言以所持本, 爲長寫之,...

『壺中鈔』에 인용된 奥書인 위의 기록을 보면 『傳曆』의 찬자들과 筆寫者가 소개되어 있다. 『傳曆』은 堤中納言인 藤原兼輔가 편찬한 紙廿丁計(斗)書編의 殘書를 平兼盛이 이어받아 찬술하여 太子伝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題平中納言太子伝’은 桓武天皇(50대)의 후예(後胤)인 平中納言이 所持했던 책으로써 菅原爲長이 필사하였다고 한다.³⁴⁾

본장의 맨 앞에 언급한 藤原猶雪이 찾아냈던 奥書에서는 兼盛의 姓 ‘平’과 兼輔의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兼盛의 姓 ‘平’과 兼輔의 관직 中納言이 함께 공존한다.

다시 말해 문장 상 提平中納言이 平兼盛을 지칭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그는 桓武天皇에서 光孝天皇으로 이어지는 직계후손이지만 中納言까지 승진하지 못했고, 最終官位 從 5位上으로 前駿河守(977년)로 재임

34) 太田晶二郎 「太子伝曆の藤原兼輔撰述說」 『日本歴史』 123, 吉川弘文館 1958-9, 53- 55쪽.

했고, 15년 후 사망했다. 提平中納言이라 명칭은 提中納言이라는 兼輔의 그것에 ‘平’이 삽입된 형태이다. 아무튼 이러한 혼칭은 『傳暦』의 찬술에 두 사람이 간여했던 흔적으로 보인다. 앞서 太田晶二郎이 지적한 바와 같이 『傳暦』의 편찬에 平兼盛도 간여했지만 兼輔가 편찬한 母本을 이어 받았다.³⁵⁾

林幹彌은 源爲憲이 平安中期의 佛教說話集인 『三寶繪』를 찬술할 때 『伝暦』의 祖本人 「平氏撰聖德太子伝」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추측하고, 『伝暦』 古寫本 諸書와 치밀하게 비교하였다. 그리고 太子가 49歲에 入滅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伝暦』의 성립 시기를 延喜 연간(901~923)이라 추정하였다.³⁶⁾ 飯田瑞穂도 朱雀天皇(930-946)대에 찬술된 『本朝月令』에 『伝暦』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醍醐天皇(897-930) 시대와 맞아떨어진다고 했다.³⁷⁾

그렇다면 『伝暦』에 보이는 극심한 嫌新羅的 기록은 『傳暦』의 최초 편찬자가 살았던 시기의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寬平 신라해적사건(893~894)에 주목하고 싶다. 이 시기는 藤原兼輔가 16세가 되던 해이고, 平兼盛(?~991)은 그의 사망 시점을 고려할 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해적은 寬平(5년~6년)시기 즉 宇多天皇 대 893~894년 사이 2년간 크게 3회에 걸쳐 肥後國 飽田郡(히고노쿠니 아키타), 肥前國 松浦郡(히젠노쿠니

35) 東京大 圖書館 소장 『壺中鈔』에 인용된 奥書: “「太子平氏伝 作者之事, 古來不知. 管原爲長自筆平氏伝奥書曰, 是堤中納言兼輔卿之選也. 秘藏之事也. (○以下原注) 此太子伝, 今高辻家有之.」 「平中納言太子伝 古本奥書曰, 延喜十七年九月, 藏人頭兼輔撰. 又曰, 此書本兼輔卿貫首之時所撰也. 按兼盛者, 光孝天皇曾孫篤行賜平姓, 其子兼盛也. 兼輔者, 延喜十八年八月, 補藏人頭. 後任中納言・右衛門督. 承平三二八年薨. 世号堤黃門是也. 今度応尹宮所望, 清書此伝文加愚点者也. 寛元二年八月 爲長, (「爲長」下) 此書, 堤中納言藤原兼輔紙廿丁計書編殘書. 平兼盛續之, 以爲太子伝. 題平中納言太子伝者, 以桓武帝後胤平中納言以所持本, 爲長寫之, 故爲不忌. 其本, 書平中納言太子伝暦.”(太田晶二郎 앞의 글에서 재인용). 飯田瑞穂이 찾은 기록도 위와 거의 같다(飯田瑞穂, 「管原爲長本聖德太子伝暦の奥書」『日本歴史』 124, 吉川弘文館 1958-10. 64-65쪽).

36) 林幹彌, 『太子信仰の研究』 吉川弘文館 1980(昭和55年) 120쪽, 136쪽.

37) 飯田瑞穂, 「明一撰『聖德太子伝』(明一伝)の逸文 - 奈良時代末期の一太子伝の検討 - 」『中央大學文學部紀要・史學科』 通号 49, 1968, 27-51쪽.

飯田瑞穂 「聖德太子伝の推移 - 『伝暦』成立以前の諸太子伝」『國語と國文學』 50-10, 東京大學 國語國文學會編 1973, 90-103쪽.

마쓰라), 對馬郡(쓰시마군)을 노렸다. 신라해적이九州와 그 부근이 물자의 집적지라 판단하여 표적으로 침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⁸⁾

藤原兼輔는 元慶 원년(877년)에 태어나 承平 3년 2월 18일(933년)에 세상을 떠난 平安時代 중기의 公家·歌人이다. 藤原北家の 左大臣 冬嗣公의 증손이며, 內舍人 良門의 손자이다. 右中將 利基 6남으로 어머니는 伴氏이다.³⁹⁾

그의 관력을 살펴보자. 寬平 9年(897)에 醍醐天皇이 卽位하면서 昇殿이 허락되었다.⁴⁰⁾

연호		나이	藤原兼輔의 관위
寬平	10년(898) 정월 29일 4월 8일	22세	讃岐權掾(殿上勞)가 되었다. 如故昇殿하였다.
	昌泰 4년(901) 2월 19일	25세	右衛門少尉가 되었다.
延喜	2년(902) 정월 7일 2월 21일	26세	從五位下로서 醍醐天皇에 非藏人으로 임명되었다. 昇殿하였다.
	3년(903) 2월 26일	27세	內藏助에 발탁되어 內藏寮를 보좌했다.
	7년(907) 2월 29일	31세	右兵衛佐로서 內藏助如元이 되었다.
	9년(909) 정월 27일	33세	五位藏人이 되었다.
	10년(910) 정월 7일	34세	從五位上 右衛門佐로서 助如元이 되었다.
	13년(913) 정월 21일	37세	左近衛少將을 겸임하게 되었다.
	14년(914) 정월 12일	38세	近江介를 겸하였다.
	15년(915) 정월 7일	39세	正五位下로 진급하였다.
	16년(916) 3월 20일 11월 14일	40세	內藏權頭가 되었다. 從四位下로 진급하였다.
	17년(917) 8월 28일	41세	藏人頭가 되었다.
	19년(919) 정월 28일	43세	備前守, 左近衛權中將을 겸임하게 되었다.

38) 정순일 「마쓰라·아키타·쓰시마에 출현한 寬平新羅海賊」 『韓國古代史探究』 14, 2013. 115-122쪽.
 39)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年(1938) 171쪽 “左大臣 冬嗣公曾孫. 內舍人良門孫. 右中將利基六男. 母伴氏.”
 『尊卑分脉』 제2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9, 吉川弘文館 昭和34年(1959) 28쪽.
 40)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年(1938) 17쪽. 寬平九七七昇殿(元春宮殿上. 今月三日踐祚).

	21년(921) 정월 30일 2월 7일	45세	參議에 임명되었고, 從四位下로 승진하였다. 近衛權中將如元이 되었다. ⁴¹⁾
	22년(922) 정월 7일	46세	從四位上으로 승진하였다. ⁴²⁾
延長	2년(924) 2월 1일	48세	近江守를 겸임하였다. ⁴³⁾
	5년(927) 정월 12일	51세	左權中將. 權中納言으로 임명되었다.. ⁴⁴⁾
	6년(928)	52세	從三位로 승진하였다.
	8년(931) 12월 17일	54세	中納言兼右衛門督이 되었다. ⁴⁵⁾

藤原兼輔는 承平3년(933) 2월 18일 향년 57세로 薨去하였다. 최종 官位는 從3位·中納言이었다.⁴⁶⁾

언급한 바와 같이 藤原猶雪은 東京大學附屬圖書館架藏 『太子伝傍註』에 인용된 菅原爲長本 『伝歴』 奥書에서 “延喜 17년(917) 9월 藏人頭 藤原兼輔가 著

41)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년(1938) 171쪽 “同十正十九讚岐權掾(殿上勞)四月八如故昇殿. 昌泰4年二月十九右衛門少尉. 延喜二正七從五下(殿上非藏人勞). 二月廿一日昇殿. 同三二廿六內藏助. 同七二廿九左兵衛佐(助如元). 同九正廿七五位藏人. 同十五七從五上. 同月右衛門佐(助如元). 同十三正廿一兼左近衛少將. 同十四正十二兼近江介. 同十五正七從五下. 同十六三廿十內藏權頭. 同十正廿九轉頭. 同十六十一十四從四位下. 同十七八月廿八藏人頭. 同十九正廿八兼備前守. 同日兼左權中將.”

42)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년(1938) 171쪽 “延喜21年(辛巳) 從四位下 藤兼輔(45세) 正月卅日任參議. 二月七日左近衛權中將如元. “延喜22年(922)(壬午) 同兼輔(46세) 左中將. 備前守. 正月七日從四位上.”

43)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년(1938) 173쪽 “同兼輔(47세) 左近權中將. 延長2년(甲申)同兼輔 左權中將. 二月一日兼近江守.”

44)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년(1938) 174쪽 “延長5년(丁亥)同兼輔(51세) 正月十二日任. 卽三品. 超五人. 中將勞九年. 同兼輔 左權中將. 任權中納言.”

45)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년(1938) 175-176쪽 “延長6년(戊子)權中納言從三位 同兼輔(52세) 延長7년(己丑) 權中納言從三位 同兼輔(53세) “延長8년(庚寅) 同兼輔(54세) 十二月十七日[任脫力] 兼右衛門督.”

46) 『日本紀略』 후편 제2 朱雀院 (承平3年 2月) “十八日甲子, 中納言 - 從三位 - 兼行右衛門督 - 藤原朝臣 - 兼輔, 薨, 年五十七.”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年(1938) 178쪽 “承平3年(癸巳)從三位 同兼輔(五十七) 右衛門督. 二月十八日薨. 生年元慶元年丁酉. [頭午年. 參木中將七年. 中納言七年.]”

述했다.”라고 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藏人頭의 자리에 올랐던 바로 그때 藤原兼輔는 신라해적과 관련된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日本紀略』 後篇 第1 醍醐天皇 延喜 17년(917) 9월 8일 조를 보자.

(延喜17년:917) 9월 8일 甲寅에 太宰府에서 이르기를:「對馬島 下縣郡 碁子濱에서 고래가 갑자기 출몰하여 이는 장차 기이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그 후 9월 상순에, 이웃 해적(鄰賊)이 수척의 배를 이끌고 장차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⁴⁷⁾

917년 藤原兼輔(41세)가 ‘藏人頭’에 임명될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9월 8일에 對馬島의 下縣郡 碁子濱에서 고래가 갑자기 나타나니 그달 上旬에, 신라해적 여러 척의 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자가 있었다. 이러한 추문 하나 때문에 『伝曆』의 찬자가 신라를 적대시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寬平시대를 살았기에 鄰賊數舶은 과거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新羅海賊 사건들을 연상시키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公卿補任』 第1編 新訂增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 13년(1938) 171쪽에 보이는 다음의 짧은 기록은 寬平 5~6년(893~894)에 新羅海賊이 창궐할 때 藤原兼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준다.

“寬平九年七月七日昇殿(元春宮殿上. 今月三日踐祚)

寬平 9년(897) 7월 7일 昇殿하였는데. 본래 그는 春宮殿上이었다고 한다. 『日本紀略』 前編 20, 宇多天皇 寬平 5년(893) 4월 2일조를 보면,

敦仁親王을 皇太子로 삼는다고 조칙을 내렸다. 곧 坊官 등이 책임을 맡았다. 太子 나이 9세였다. 혹 이르기를 14일 壬午에 책봉하였다.⁴⁸⁾

敦仁親王을 皇太子로 삼았다고 하고 있다. 바로 그가 宇多天皇을 이은 醍

47) 『日本紀略』 후편 제1 醍醐天皇 延喜17년(917) 9월 8일 조 “九月…八日甲寅, 太宰府言: 對馬島下縣郡碁子濱, 鯨乍生將寄. 其後九月上旬, 鄰賊數舶將發來者.”

48) 『日本紀略』 前編20, 宇多天皇 寬平 五年(893) 4월 2일 조 “庚午, 詔敦仁親王爲皇太子. 卽任坊官等. 太子年始九歲. 或云, 十四日壬午, 冊立.”

醐天皇이었다. 藤原兼輔는 醍醐天皇이 태자시절에 春(東)宮에서 근무했다. 그가 春宮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叔父 藤原高藤이 皇室 외척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寬平) 甲寅 六年(894), 정월 3일, 천황이 남전에 어거하였다. 卯杖의 일을 집전하였고, 皇太子가 觀見의 절을 드리고 연회를 여는 등의 일을 하였다. 황태자 외조부이며 正四位下자리인 藤原朝臣 高藤에게 從三位를 내렸다.⁴⁹⁾

894년 正月 3일 황태자의 외조부인 藤原高藤이 從3位에 올랐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것은 3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승진이었다.⁵⁰⁾ 高藤은 良文의 차남으로 위로 장남인 형 利基를 두고 있었다. 藤原兼輔는 利基의 6男이며, 兼輔는 高藤에게兄의 아들, 조카가 된다.⁵¹⁾ 『公卿補任』 第1編 新訂增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 13年(1938) 156면에 있는 昌泰 2년(899) 조를 보면 다음의 기록이 보인다.

從4位上 藤原定國…寬平 5年 4月 2日에 兼春宮少進, 寬平 7年 3月 20日에 兼春宮大進이 되었다.⁵²⁾

春(東)宮에는 叔父 高藤의 아들 藤原定國도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藤原兼輔와 4촌 관계이다. 寬平 5년(893) 4월 2일 定國의 甥姪인 敦仁親王이 태자에 임명되자 곧장 春宮少進이 되었고, 寬平 7년(895) 3월 20일에 가서 春宮大進으로 승진했다. 직전인 寬平 7년(895) 2월 11일에는 定國의 친동생인 藤原定方(高藤의 차남)이 春宮御給이 되었고, 이듬해 正月 7일에 從5位下로 진

49)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6年(894) 正月 3日 조 “丁卯, 天皇御南殿, 有御卯杖事. 皇太子拜觀見謙飲云云. 授皇太子外祖父 - 正四位下 - 藤原朝臣 - 高藤, 從三位”

50)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增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年(1938) 151쪽, “[寬平六年]非參議 從三位 藤(原)高藤五十七 正月三日叙[越三階]”

51)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增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年(1938) 151-152쪽, 『尊卑分脉』 第2篇 新訂增補國史大系 59, 吉川弘文館 昭和34年(1959) 55쪽.

52)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增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年(1938) 15쪽면에 있는 昌泰 2年(899) 조 “從四位上 藤(原)定國 …同(寬平)五(年)四(月)二(日)兼春宮少進 …同(寬平)七(年)三(月)二十(日)兼春宮大進”

급했다.⁵³⁾ 春宮에 태자의 外叔들이 포진해 있었고, 藤原兼輔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平安시대를 대표하는 36歌仙 가운데 하나였던 藤原兼輔는 4촌이자 장인이기도 한⁵⁴⁾ 藤原定方과 함께 歌壇의 핵심 인물이었다.⁵⁵⁾ 叔父 高藤이 兼輔를 春宮殿上에 발탁했다면 사촌인 右大臣 定方은 평생 그와 교류하고 뒤를 봐주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893년 4월 26일 다음의 기록은 藤原兼輔의 東宮 근무 시작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廿六日甲午, 皇太子始御於東宮.⁵⁶⁾

황태자가 된 敦仁親王이 동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春(東)宮의 殿上이었던 藤原兼輔는 태자와 함께 공식 근무에 들어갔을 것이다. 바로 다음 달인 5월 22일부터 신라해적이 침입해 왔다는 소식이 계속 들렸다.

5월…22일 庚申, 大宰府의 飛驒使가 와서 문서를 올려 보고하기를 : 「5월 11일에, 신라 해적들이 왔다고 하며, 肥前國의 松浦郡을 가리켰다.」 이날 바로, 大宰帥-是忠親王, 大貳-安倍興行朝臣 등에게 쫓아가 토벌할 것을 명하였다.⁵⁷⁾

윤5월 3일과 다음 달 6월 20일에 또 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윤5월…3일 庚午, 大宰 飛驒使가 와서 보고하기를 : 「신라 해적들이 肥後國 飽田郡에 침입하여, 인명과 가옥을 불 지르고, 다시 肥前國 松浦郡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즉시 敕符를 내려 그들을 토벌토록 하였다.⁵⁸⁾

53) 『公卿補任』 제1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3, 吉川弘文館 昭和13年(1938) 163쪽.

54) 『尊卑分脉』 제2편 新訂増補國史大系 59, 吉川弘文館 昭和34年(1959) 58쪽. “(定方) 女子中納言兼輔卿室”

55) 新藤協三, 『三十六歌仙叢考』 新典社研究叢書160 2004. 참조

56)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5年(893) 4월 26일 조

57)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5年(893) 5월 22일 조 “庚申, 大宰府飛驒使來. 奏狀稱: 今月十一日, 新羅賊來, 指肥前國松浦郡. 即日, 賜敕符於大宰帥-是忠親王, 大貳-安倍興行朝臣等, 令追討者.”

58)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五年(893) 윤5월 3일 조 “庚午, 大宰飛驒使來稱: 新羅賊於肥後國飽田郡, 燒亡人宅. 又於肥前國松浦郡逃去. 即賜敕符, 令追討之.”

6월…20일 丙辰, 大宰의 飛驒使가 와서, 新羅賊事를 아뢰니. 敕符를 주어 보냈다.⁵⁹⁾

다음 달인 6월 20일에도 大宰府의 飛驒使가 와서 新羅賊의 일을 상주하니 敕符를 보냈다. 해를 넘겨서도 신라해적의 노략질은 계속되었다.

이듬해 894년 2월 20일 大宰府의 飛驒使가 와서 新羅賊의 일을 말했고, 같은 날 추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⁶⁰⁾ 다음 달인 3월 13일에도 大宰府의 飛驒使가 와서 新羅賊이 損侵하여 邊島를 약탈했다고 보고 했다. 즉시 敕符를 大宰府에 내려 追討하라고 했다.⁶¹⁾

4월 14일 大宰府의 飛驒使가 와서 新羅賊 이 對馬島에 來著했다는 보고를 했고, 같은 날 敕符를 大宰府에 내렸다. 이틀 후인 16일 大宰府에서 사람을 보내 신라해적(兇賊)을 토벌했다고 보고했고, 같은 날 參議 藤原國經으로서 權帥를 삼았다. 다음날인 17일에 太宰府에 敕符를 내려 新羅賊을 討平한 것을 치하했고, 北陸, 山陰, 山陽道 諸國에 명령을 내려 武具를 준비하고 精兵을 뽑게 하였다. 또한, 살피고 방비할 것을 명하였다. 그다음 날인 18일에 東山, 東海道에 勇士를 소모할 것을 명하였다. 19일에 신라해적 토벌을 위해 伊勢太神宮에 奉幣했다.⁶²⁾

5월 1일 日蝕이 있어 諸司가 廢務하였고, 5월 7일 大宰府에서 신라해적이 도주하여 못 잡은 이유를 보고 하니 敕符를 내려 굳게 지키라고 명하였다.⁶³⁾

894년 9월 19일 大宰府가 신라해적 200여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했다. 그러

59)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五年(893) 6월 20일 조

60)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6年(894) 2월 20일 조, “乙酉, 大宰府飛驒使來, 申新羅賊. 同日, 賜敕符令彼府. 應追討也.”

61)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6年(894) 3월 13일 조, “三月…十三日丙子, 申尅, 大宰府飛驒使來, 申新羅賊損侵, 寇邊島之由. 卽賜敕符於彼府, 令追討.”

62)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6年(894) 4월 14일~19일 조 “四月…十四日丙午, 大宰府飛驒使上奏新羅賊來著對馬島之由. 著對馬島之由. 同日 賜敕符於彼府…十六日戊申, 太宰府飛驒使來敕上奏. 彼給將軍討平兇賊. 卽日, 以參議藤原國經爲權帥…十七日己酉, 賜敕符於太宰府. 應討平新羅賊也. 又下知北陸山陰山陽道諸國, 備武具, 選精兵, 令勤警固. 十八日…今日, 東山, 東海道召勇士. 十九日辛亥, 爲討新羅賊. 奉幣伊勢太神宮.”

63)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6年(894) 5월 1일, 7일 조 “五月, 一日壬戌, 日有蝕之. 諸司廢務. 七日, 大宰府飛驒使來. 上奏賊等逃去不獲之由. 翌日, 賜敕符於彼守令固守.”

자 諸國에 명을 내려 軍士警固等を 중지하게 했다. 같은 달 30일 신라해적 20인 사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⁶⁴⁾ 10월 6일에 新羅賊船이 퇴거한 연유를 알려왔다.⁶⁵⁾

『扶桑略記』 권22, 宇多天皇 紀 寬平 6年(894) 9월 5일 조는 신라해적의 大尾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해준다.

『汝等若箭立背者, 以軍法將科罪. 立額者, 可被賞之.』由言上者. 仰訖, 卽率列郡司士卒, 以前守田村高良令反問, 卽鳴分寺上座僧面均, 上縣郡副大領下今主爲押領使, 百人軍各結廿番, 遣絶賊移要害道. 豐圓春竹卒弱軍四十人, 度賊前. 凶城見之, 各銳兵而來向守善友前, 善友立楯令調弩, 亦令亂聲. 時凶賊隨亦亂聲, 卽射戰. 其箭如雨. 見賊等被射并逃歸, 將軍追射. 賊人迷惑, 或入海中, 或登山上, 合計射殺三百二人. 就中大將軍三人, 副將軍十一人. 所取雜物, 大將軍縫物, 甲冑, 貫革袴, 銀作太刀, 纏弓革, 胡錄, 宛夾, 保呂, 各一具. 已上附脚力多米常繼進上. 又奪取船十一艘, 太刀五十柄, 杵千基, 弓百十張, 胡錄百十, 房楯三百十二枚. 僅生獲賊一人, 其名賢春. 卽申云: 『彼國年穀不登, 人民飢苦, 倉庫悉空, 王城不安.』然王仰爲取穀絹, 飛帆參來. 但所在大小船百艘, 乘人二千五百人, 被射殺賊其數甚多. 但遣賊中, 有最敏將軍三人, 就中有大唐一人.」

【已上日記】

『扶桑略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자. 寬平6년(894) 9월 5일, 對馬島司는 ‘新羅賊徒’의 도착을 大宰府에 보고한다. 9월 9일, 大宰府는 飛驒使를 통해 중앙에 보고한다. 9월 17일의 ‘記’에 따르면, ‘同日(5일)’ 卯時 무렵, 對馬島 守文室善友가 이끄는 郡司·士卒 등과 ‘賊徒’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어, 그 결과 일본 측의 관군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한다.

對馬島에 나타난 신라 배는 45艘이었다. 일본 측과의 전투에서 신라인이 302인이 사살되었다. 신라인 포로 賢春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의 본거지에는 크고 작은 배 100艘가 있으며, 승원은 2500명이나 있다고 한다. 또 일본 측이 올린 戰果를 참조하면, 신라해적은 대장군·부장군과 같은 체계적인 조직

64)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6年(894) 9월 19일, 30일 조 “九月, …十九日戊寅, 大宰府飛驒使言上, 打煞新羅賊二百餘人. 仍仰諸國令停止軍士警固等.” “卅日己丑, 大宰府飛驒使來, 言上打煞新羅賊廿人之由. 賜敕符於彼國, 令警固.”

65) 『日本紀略』 전편20, 宇多天皇 寬平 6年(894) 10월 6일 조 “十月…六日己未, 大宰府飛驒使奏新羅賊船 退去之由. 同日, 給敕符於彼府.”

은 물론, 전문 전투 집단을 연상하게 하는 무기·무구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단순한 ‘무장 상인단’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것이다.

신라해적은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대항할 수 있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군을 통솔하였던 文室善友는 元慶7년(883)에 일어난 俘囚의 반란 시에도 승전한 유능한 군사 관료였다. 자국 내에서 무제한 내전을 경험한 寬平 新羅海賊은 싸움에 능하였다. 해적집단은 寬平 5(893)년~6년(894)에 이미 수십艘 내지 100艘 정도의 선박 및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는 무장 세력이었다.

포로 賢春의 진술로부터, 같은 시기 신라의 국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특히 ‘然王仰爲取穀絹，飛帆參來’라고 하는 부분은, 신라의 무정부적인 내란(농민반란)과 해적집단의 출현이 연동된 정황을 알 수 있게 한다.⁶⁶⁾

宇多天皇을 이어 보위에 오를 황태자(醍醐天皇)가 신라해적의 활동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는 힘들며, 春宮에서 태자를 보좌했던 藤原兼輔는 신라해적 활동을 보고 했거나 함께 그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伝暦』에 뚜렷이 나타나는 신라에 대한 적대감은 藤原兼輔의 新羅海賊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V. 맺음말

『日本書紀』와 『伝暦』을 비교해 보았을 때 『伝暦』은 신라에 대해 지극히 敵對的·卑下的인 문구와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다. 『伝暦』 591년 조에서 왜국의 모든 신하가 천황의 임나재건 군사행동 찬동했지만 성덕태자만이 홀로 그것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 新羅는 豺狼과 같아 그 貪婪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伝暦』 600년 조에서 왜군의 침공을 받고 항복한 신라왕이 왜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任那를 다시 공격한 기록을 보고 신라가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믿을 수 없는 虎狼之國으로 지목했다. 『伝暦』 편찬자는 新羅를 豺狼·虎狼之國이라 표현하고 있다.

66) 정순일, 앞의 책, 140쪽.

그뿐만 아니라 『伝曆』의 601~603년 조 기록에는 신라정벌 장군 來目皇子를 저주하여 죽인 신라인들이 보인다. 바다를 건너와 九州 筑紫에 잠입하여 음모를 꾸미던 신라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편찬자가 살았던 시대의 신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편찬연대를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특히 왜국 내에서 신라인들의 악의적인 활동은 『伝曆』의 찬술자가 살았던 시기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寬平 신라해적사건(893-894)에 주목했다.

寬平 5~6년(893~894년) 宇多天皇대 2년 간 신라해적이 九州와 그 부근의 물자의 집적지라 판단되는 히고노쿠니 아키타군, 히젠노쿠니 마쓰라군, 쓰시마지역을 목표로 하여 노략질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

『公卿補任』 제1편 71면을 보면 893~894년 新羅海賊이 창궐할 때 藤原兼輔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宇多天皇을 이어 보위에 오를 皇太子(醍醐天皇)가 거처하던 春宮의 殿上이었다고 한다. 그를 추천한 사람은 叔父 藤原高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태자의 외조부이기도 한 高藤은 그의 두 아들도 그곳에 근무하게 했다. 장남인 藤原定國은 春宮大進, 藤原定方は 春宮御給이었다. 그들은 藤原兼輔와 4촌 관계이다.

893년 4월 26일 황태자는 春宮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때부터 藤原兼輔의 春宮 근무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신라해적이 침입해 왔다는 소식이 계속 있었다.

5월 11일에, 신라 해적들이 肥前國의 松浦郡에 나타났고, 윤5월 3일에 신라 해적들이 肥後國 飽田郡에 침입하여, 인명과 가옥을 불을 지르고, 또 肥前國 松浦郡으로 도주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6월 20일에도 新羅賊의 일이 보고되었고, 해를 넘겨서도 신라해적의 노략질은 계속되었다. 894년 2월 20일 新羅賊을 추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3월 13일에도 新羅賊이 損侵하여 邊島를 약탈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다음 달인 4월 14일 新羅賊 이 對馬島에 來著했다는 보고를 했고, 이틀 후인 16일 신라해적(兇賊)을 토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5월 7일 신라해적이 도주하여 못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9월 19일 大宰府가 신라해적 200여인을 사살했고, 같은 달 30일에도 신라해적 20인 사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며, 10월 6일에 新羅賊船이 退去한 연유를 알려왔다.

『扶桑略記』 寬平6년(894) 9월 조를 보면, 17일 卯時 무렵, 對馬島 守文室 善友가 이끄는 郡司·士卒 등이 對馬島에 출몰한 45척의 賊徒(신라해적)와 싸워 302인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한다. 신라인 포로 賢春의 진술을 보면, 신라해적집단은 寬平5(893)년~6년(894)에 이미 수십艘 내지 100艘 정도의 선박 및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는 무장 세력이었고, 당시 신라는 무정부적인 내란(농민반란)으로 해적집단의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宇多天皇을 이어 보위에 오를 황태자(醍醐天皇)가 신라해적의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들며, 寬平 5~6년(893~894) 春宮에서 태자를 모시고 있었던 藤原兼輔도 신라해적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伝暦』에 나타나는 신라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의식은 그의 新羅海賊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917년 9월 8일 藤原兼輔가 藏人頭에 그때 對馬島에서 鄰賊(신라해적)에 대한 우려의 보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寬平시대를 살았던 그에게 과거 新羅海賊 사건들을 연상시키기에는 충분했을 수도 있다.

893~894년 寬平 신라해적사건 시기는 藤原兼輔가 16세가 되던 해이다. 예민한 청소년기의 기억은 평생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다. 그리고 平兼盛(?~991)의 임종 시기를 보았을 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기이기에 노골적인 신라에 대한 적대관이 형성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伝暦』과 平兼盛이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伝暦』 최초 원형의 찬자는 藤原兼輔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豺狼・虎狼之國”의典故로 표현되는 『伝暦』의 신라에 대한 그의 적대감은 그의 시대적 경험에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사료

『史記』, 『三國志』, 『日本書紀』 『日本紀略』, 『扶桑略記』, 『聖德太子伝暦』,
『公卿補任』, 『尊卑分脉』, 『書紀集解』

2. 저서 및 논문

- 藤原猶雪, 「聖德太子伝暦正本の研究」 『仏教研究』 2-3 (大谷大學仏教研究會, 1921)
- 藤原猶雪, 「誤られたる太子伝暦」 『東方佛教』 1卷 1号 (東方仏教協會, 1926)
- 藤原猶雪, 『復元聖德太子伝暦』 (東京聖德太子奉讃會, 1927)
- 藤原猶雪, 「聖德太子伝暦復元の研究」 『日本佛教史研究』 1권, (大同出版社, 1938)
- 飯田瑞穂, 「菅原爲長本聖德太子伝暦の奥書」 『日本歴史』 124, (吉川弘文館 1958),
- 飯田瑞穂, 「明一撰『聖德太子伝』(明一伝)の逸文 - 奈良時代末期の一太子伝の検討 - 」
中央大學文學部紀要史學科 通号 49, 1968.
- 飯田瑞穂, 「聖德太子伝の推移 - 『伝暦』成立以前の諸太子伝」 『國語と國文學』50-10, (東
京大學國語國文學會編, 1973)
- 阿部隆一, 「室町以前成立聖德太子伝記類書誌」 『聖德太子論集』 聖德太子研究會 (平樂
社書店, 1971)
- 坂本太郎, 「日本書紀と聖德太子伝暦」 『南都佛教』 29, (東大寺 南都佛教研究會, 1972)
- 林幹彌, 『太子信仰の研究』 (吉川弘文館, 1980)
- 田中嗣人, 『聖德太子信仰の成立』 (吉川弘文館, 1983).
- 新藤協三, 『三十六歌仙叢考』 新典社研究叢書 2004.
- 榊原小葉子, 『聖德太子伝暦』にみえる中國觀』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 15, 2005-3.
- 松本眞輔, 「니치라(日羅)설화의 변천 - 『일본서기(日本書紀)』를 일탈하는 쇼토쿠(聖德)
태자전 - 」 『일본학연구』 37,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년 9월.
- 정순일, 「마쯔라·아키타·쓰시마에 출현한 寬平新羅海賊」 『韓國古代史探究』 14, 2013.
- 조지형, 「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 『국어문학』 60, 국어국문학회, 2015.

Abstract

Fujiwara Kanesuke's hostility toward Silla expressed in his writing

Lee, Ju-Heu

It was during the Heian era when the emperor Uda ruled Japan. Donin, one of the emperor's sons, was proclaimed the Crown Prince in 843 April. The crown prince entered the "East Palace" which is designed for him. Fujiwara Kanesuke supported him from his close quarters.

Kanesuke have heard terrible news since May 22, 893. It is said that Silla pirates had invaded. On May 11, "Silla pirate have arrived in our country."

"Pirates of SillaIt has been shut down and burned up and fled again." Over the years, the looting of the pirates of Silla continued. On March 13, 894, "pirates of Silla plundered the island." "We killed 20 Silla pirates." "We killed 200 Silla pirates on September 19. "The Silla ship's resignation was announced on October 6."

In 917, Kanesuke was appointed Minister of Finance. And he began to write a book about The crown prince Showtoku's life(574~622). In the book, Silla is described as a country where evil wolves and foxes live, and as a country like an animal that torments a weak country. The hostility to Silla is believed to have been the memory of the Silla pirate of the period(893~894) when he was working in the East Palace.

Key words : Fujiwara Kanesuke, Prince Syotoku, The pirates of Silla, An evil beast, A hideous monster.

집필 : 이주희 28024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E-mail : bog2duru@jwu.ac.kr)

논문투고일: 2018. 08. 31

심사완료일: 2018. 10. 04

게재확정일: 2018. 10. 13

제주도 들불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

정순여**·김대훈***·양인하****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축제와 제주들불축제
2.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와 관광 및 축제 분야에서의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대상 및 수집
2.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2. 키워드 중앙성 분석 결과
3. 의미 연결망 구조(CONCOR) 분석결과
4. 요약과 토론

V. 결론 : 정책적 제안과 연구의 한계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제1저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교신저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인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 카페를 분석채널로 선정하였으며, 빅데이터 자료검색을 위해 ‘들불축제’를 주제로 연도별 상위 키워드 50단어를 추출했다. 자료 분석 기간은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의 기간으로 한정했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 소셜 메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2.5를 통해 키워드 빈도분석 및 메트릭스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유시넷(Ucinet)6.0을 사용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시행했다. 관계도 계량화를 위해 단어들 간 연결 구조와 위세 중앙성을 분석했고, 키워드 단어들 사이의 네트워크 시각화는 유시넷(Ucinet)6.0의 넷드로(NetDraw)기능을 이용했다. 유사성을 가진 단어들이 형성하는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 컨코(CONCOR)분석을 통해 의미연결망분석을 시행했다. 분석결과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3월축제, 정월대보름 등 관람객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키워드가 추출됐고,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 대중들은 제주들불축제를 “3월 정월대보름에 제주에 위치한 새별오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위세 중앙성 분석결과는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주요어 : 지역축제, 빅데이터, 사회연결망분석, 의미연결망분석

이외에도 컨코(CONCOR)분석을 통해 4개의 유사성 군집을 구분했으며, 새별오름, 애월읍, 봉성리 등 들불축제 개최장소에 집중하다가 개최 장소에서의 행위와 경관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대중들이 들불축제가 3월에 개최되는 축제라는 점과 들불놀이 메인 프로그램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들불축제가 제주관광객 유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변화의 진단은 지역축제 발전방안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서론

모든 관광지들은 경쟁적인 관광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매력물을 개발하고 있다. 축제는 프로그램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시장에서 관광 매력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축제를 지역브랜드 가치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는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특산물 판촉 등 축제를 홍보·마케팅의 계기로 활용하여 지역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경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축제가 기획·개최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역축제 수가 증가하는데 반해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경제파급 효과 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 동안의 관광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방법론이나 분석구조로는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는 관광객 성향이나 행태들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예산 등의 한계가 있었다.¹⁾ 향후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축제 방문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트렌드 변화를 읽고 이에 대한 방안수립이 필요하다.²⁾ 미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장기적인 전략방향 제시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역축제 패러다임 해결책이 필요하다.

최근의 관광객들은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적인 관심이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의 확산 속도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 모바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산되는 텍스트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이터로서 단순 소통의 수단을 넘어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정보의 창고가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소통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날씨, 일정, 장소, 관심, 의견표명

1) 오익근·이태숙·전태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9(10), 2015, 107~126쪽.

2) 고미영·오창현·정철, 「추구편익을 활용한 지역축제 방문객 시장 세분화:제주올레걷기 축제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36(5), 2012, 99-113쪽.

등 다양하기 때문에 축제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한 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키워드들이 연관되며, 소셜미디어 대중의 관심사에는 어떠한 이슈로 표현되는지를 알 수 있어 지역축제를 찾는 소셜미디어 대중의 감성에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주들불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들불축제는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경칩에 이르는 기간에 목야지에 불을 놓아 양질의 새풀이 돋아나도록 불을 놓는 방에라는 제주 전통 문화적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21년의 역사와 최근 3년간의 누적관람객수 백만명을 넘어선, 문화관광축제의 대표축제이며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제주지역 축제이다. 지역축제인 제주들불축제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소통되고 있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향후 관광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제주들불축제의 방향 제시와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제주들불축제 활성화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의 근간이 되며, 나아가 온라인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는 제주들불축제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와 유용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축제와 제주들불축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표현하고 공동체의식을 일깨우는 행사로 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잘 표출하는 문화행사라 하였고³⁾, 지

역축제는 공동체의식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거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문화전략 및 공공관계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⁴⁾

지역축제 이미지는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과 축제현장에서의 실제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참가자 각자의 주관적인 심상이다.⁵⁾ 이벤트 개최가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며,⁶⁾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의 소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⁷⁾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의 여건조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지역주민의 단합 등을 목적으로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⁸⁾

제주들불축제는 가축 방목을 위해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매년 겨울철 목야지 들판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불농기)’를 모티브화 하였으며,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빌기 의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승화 발전시킨 축제이다. 제주들불축제는 오름 하나를 다 태우는 거대한 축제로, 불을 토해내는 화산산처럼 웅장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불의 향연을 펼치며, 불(火)과 삼다(三多)의 향토적 자원을 극대화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한 연구들은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이벤트 영향 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⁹⁾과 제주들불축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

-
- 3) 이승권, 「축제성(festivity)과 지역축제」, 『한국프랑스학논집』 57집, 2007, 363-384쪽.
 - 4) 백선휘, 「도시문화전략으로서 지역문화축제의 지향점과 구성요소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일본 지역문화축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0(1) 2006, 107-125쪽.
 - 5) 서정무, 「지역축제 이미지가 방문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6) 이정록·남기범·지상현, 「대형 이벤트 개최가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3 순천만정원국제박람회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9(1), 2014, 101-115쪽.
 - 7) 이용기·이덕우·이충기, 「지각된 환경단서가 방문객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수안보 온천축제의 경우」, 『관광학연구』 27(1), 2003, 85-104쪽.
 - 8) 안경모·이광우, 「지역축제의 관광가치추정:이천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4(2), 2005, 225-237쪽.
 - 9) 김의근·강숙영, 「지역축제·이벤트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7호, 2010.

의 특성화 발전방안,¹⁰⁾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발전방안¹¹⁾ 등이 있었다.

제1회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 어음리 서부산업 도로변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부터 개최장소가 새별오름 일대로 고정화되었으며, 정월대보름 기간에 개최하던 일정을 새봄이 움트는 경칩을 맞는 날이 속한 주말로 개최기간을 옮겼다. 2013년 제16회부터는 명칭도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서 ‘제주들불축제’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축제일정을 3일에서 4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년 3.2억원, 17년 1.3억원, 18년 1.1억원 예산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

<표 1> 문화관광축제명과 연도별 축제예산(예산기준은 국·시도비 기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60여개 이상의 많은 축제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는 2016년 29개 축제, 2017년 29개 축제, 2018년은 1개의 축제가 줄어든 28개 축제가 있다. 2016년 이후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 예산 중 25% 이상의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축제는 탐라문화제와 제주들불축제 두 개뿐이다. 따라서 2개의 축제가 제주지역 전체 문화관광축제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제주도 문화관광축제명과 연도별 예산(비중) (단위:천원(%))

제주도 문화관광축제명	2016년		2017		2018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산지천축제	40,000	(0.9)	50,000	(1.2)	50,000	(0.9)
도두오래물축제	30,000	(0.7)	20,000	(0.5)	20,000	(0.4)
제주해녀축제	300,000	(7.1)	330,000	(7.8)	250,000	(4.6)
탐라문화제	1,220,000	(28.7)	1,200,000	(28.5)	1,500,000	(27.5)
서사라문화거리축제	10,000	(0.2)	10,000	(0.2)	20,000	(0.4)
삼양김은모래해변축제	20,000	(0.5)	20,000	(0.5)	20,000	(0.4)
한라산정정고사리축제	45,000	(1.1)	45,000	(1.1)	45,000	(0.8)
한여름밤숨바친	25,000	(0.6)	20,000	(0.5)	25,000	(0.5)

10) 김의근, 「지역축제의 특성화 발전방안 연구 - 제주들불축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제21집, 2016.

11) 우기남,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발전방안 - 2010 축제를 중심으로 -」, 『제주관광학연구』 14집,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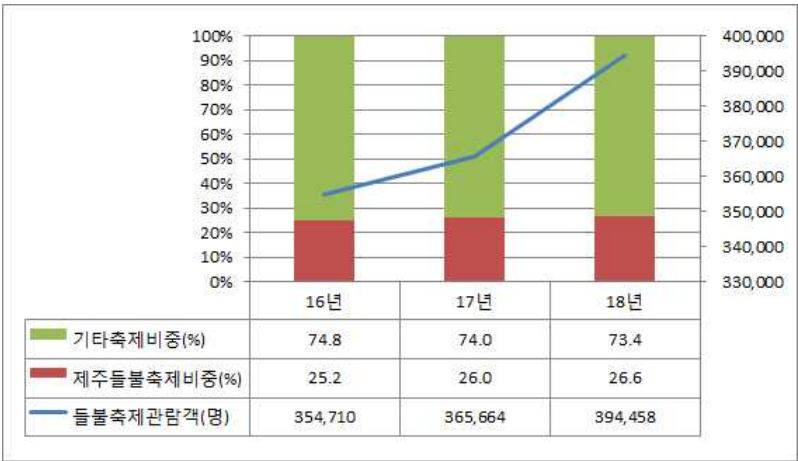
청소년영상문화축제						
성산일출축제	190,000	(4.5)	235,000	(5.6)	400,000	(7.3)
보목자리돔축제	25,000	(0.6)	25,000	(0.6)	25,000	(0.5)
덕수리전통민속축제	40,000	(0.9)	40,000	(1.0)	40,000	(0.7)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28,000	(0.7)	28,000	(0.7)	35,000	(0.6)
방선문축제	30,000	(0.7)	20,000	(0.5)	20,000	(0.4)
제주왕벚꽃축제	280,000	(6.6)	221,000	(5.3)	271,000	(5.0)
우도 소라 축제	30,000	(0.7)	30,000	(0.7)	20,000	(0.4)
제주들불축제(우수축제)	1,068,680	(25.2)	1,095,000	(26.0)	1,451,000	(26.6)
제주마축제	20,000	(0.5)	20,000	(0.5)	20,000	(0.4)
탐라국 입춘굿	100,000	(2.4)	100,000	(2.4)	160,000	(2.9)
추자도참굴비축제	85,000	(2.0)	55,000	(1.3)	45,000	(0.8)
금능원담축제	5,000	(0.1)	15,000	(0.4)	20,000	(0.4)
쇠소깍축제	20,000	(0.5)	20,000	(0.5)	20,000	(0.4)
제주유채꽃축제	100,000	(2.4)	70,000	(1.7)	200,000	(3.7)
표선해비치해변하얀모래축제	40,000	(0.9)	40,000	(1.0)	50,000	(0.9)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50,000	(1.2)	50,000	(1.2)	50,000	(0.9)
이호태우축제	30,000	(0.7)	30,000	(0.7)	20,000	(0.4)
가파도청보리축제	15,000	(0.4)	-		15,000	(0.3)
최남단방어축제	110,000	(2.6)	110,000	(2.6)	210,000	(3.8)
서귀포칠십리축제	270,000	(6.4)	288,000	(6.8)	458,000	(8.4)
혼인지축제	20,000	(0.5)	20,000	(0.5)		

* 자료출처: 문화관광체육부 연도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¹²⁾

특히 2015년부터 우수축제로 지정 된 제주들불축제는 <그림 1>과 같이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 2017년에는 전년대비 2.46% 증가한 1,095백만원이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32.51% 증가한 1,451백만원이다. 2017년 들불축제 참가인원은 전년대비 3.09% 늘어난 365,664명이며, 2018년에는 7.87% 증가한 394,458명이다.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문화광장 지역축제 연도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정보」, 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2018. 8. 21. 접속.

<그림 1> 2016년~2018년 축제예산비중 및 들불축제 관람객 증감율



* 자료출처: 문화관광체육부 연도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제주시 들불축제 평가보고서¹³⁾

2.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와 관광 및 축제 분야에서의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소셜미디어는 첨단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융합의 결과로서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이용자의 생각과 의견, 경험,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된 플랫폼인 블로그, 유튜브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트위터를 의미한다.¹⁴⁾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의해 콘텐츠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다대다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콘텐츠 전송이 가능하며, 콘텐츠 생산을 위한 기술적 접근성이 높다.¹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소셜미디어는 접근성이 높고,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13) 제주시, 『2016년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7년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8년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14) 삼성경제연구소, 「확산되는 소셜미디어와 기업의 新소통 전략」, 『CEO 인포메이션』 764호, 2010.

15) 김남이·이수범, 「공중의 라이프스타일이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3(2), 2011, 306-341쪽.

적게 발생하며, 효율성과 즉시성, 이동성의 강점이 있고,¹⁶⁾ 참여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지향 미디어다.¹⁷⁾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다양화와 보급증가로 많은 형태의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이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¹⁸⁾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이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빅데이터 자료의 분석·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텍스트마이닝과 정보는 특정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어떠한 요소, 요인이 활성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화 자료로 나타낼 수 있다. 이같이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¹⁹⁾

한편, 관광 및 축제 분야에서 점차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분석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철도관광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철도 관광 서비스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²⁰⁾ 세계인터넷전문가 총회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마이스(MICE) 목적지 마케팅 활용방안 등도 제시됐다.²¹⁾

16) 설진아, 「소셜미디어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2009, 35-57쪽.

17) 최영·박성현,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011, 241-276쪽.

18)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

19)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

20) 정명재·노학래·박민식,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도 관광 이용객들의 반응 조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456-461쪽.

21) 이미경·박지원·박한우·Mark Smith,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제 회의의 네트워크분석: 세계인터넷전문가총회(IR15) 트위터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0(3), 2015, 223-246쪽.

국내관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관광마케팅 방안을 위해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²²⁾ 부산발전연구원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개별관광객의 부산관광 인식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했고,²³⁾ 한국관광공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지방 문화관광축제의 개최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²⁴⁾ 이외 웹사이트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인식 변화를 파악 후 이를 이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²⁵⁾ 또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축제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 비엔날레’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했고,²⁶⁾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국내외의 관광객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였다.²⁷⁾

특히 관광객의 취향을 반영한 제주 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셜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 키워드 및 트렌드 분석 서비스를 설계, 구현하였고,²⁸⁾ 관광마케팅 도구로 서울과 제주도 페이스북 팬페이지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 소셜 빅데이터 활용방안이 제시가 되었다.²⁹⁾ 또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주도 관광객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실무적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³⁰⁾ 그러나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관련한

22) 오익근·이태숙·전태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9(10), 2015, 107~126쪽.

23) 부산발전연구원,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썬커의 부산관광 인식 분석과 대응방안」, 『BDI 정책 포커스』 318호, 2017, 1-12쪽.

24)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활용 관광사업 성과 시범분석 - 2013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 2013.

25) 박상훈·이희정, 「사회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 7(2), 2017, 109-125쪽.

26) 정성문·주여운·오치옥, 「축제의 속성으로 본 광주비엔날레 분석」, 『관광연구논총』 29(4), 2017, 125-151쪽.

27) 류시영·유선옥(2017),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강원도 관광에 대한 인식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2), 2017, 63-81쪽.

28) 김휴찬·김미정·신형정, 「소셜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한 제주관광 트렌드 서비스 설계 및 구현」, 『e - 비즈니스 연구』 15(3), 2014, 173-193쪽.

29) 박득희·김태구·이계희,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정보 네트워크 분석」, 『관광연구저널』 30(8), 2016, 195-208쪽.

30) 이수희·박득희·김맹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제주도 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문화관광축제 전체 예산 중 25% 이상의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축제는 탐라문화제와 제주들불축제 두 개뿐인데, 이 중 제주 유일 우수축제인 제주들불축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대상 및 수집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3년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들불축제에 대한 국내관광객들의 인식변화에 대하여 조사를 했다. 빅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는 대중들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매체이다.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사이트는 블로그(blog),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톡, 트위터(twitter) 등이 있다. 관광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할 수 없는 뉴스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네이버(블로그, 카페), 다음(블로그, 카페)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들불축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된 상위 5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2016년도 들불축제 조사기간은 제주시가 일정을 확정된 이후 축제를 마친 3월 15일 기점인 2015년 5월1일부터 2016년 3월15일까지 11개월로 하였으며, 2017년 들불축제와 2018년 들불축제 분석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에서 키워드인 ‘들불축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정월’, ‘대보름’은 ‘정월대보름’으로 통일하였다.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들을 삭제했으며, 분석에 활용하지 않는 조사인 ‘가’, ‘것’, ‘오’, ‘주’, ‘없’, ‘놓’, ‘들’ 등을 삭제하였다. 자료수집은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트(Textom)³¹⁾을 활용했다.

- 한한령 이전과 이후 비교, 『관광레저연구』 30(2), 2018, 55-75쪽.

31)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트(TEXTOM: Text to Metrix)은 웹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채널별로 자동 수집하여 정제, 매트릭스 생산까지 일괄 처리해 주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으로 크롤링 방식을 이용한다. 포털 검색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구글, 트위터,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검색키워드로 선정한 ‘들불축제’로 텍스트롬(textom)2.5에서 수집된 들불축제와 관련한 키워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사용빈도와 키워드 간 연결망을 보기 위해 유시넷(UCINET)6.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원 모드(1-mode)행렬 데이터를 통해 중앙성분석과 의미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실시했다. 시각화는 유시넷(UCINET)6.0프로그램의 넷드로(NetDraw)기능을 활용했다.

<그림 2> 분석 프로세스 도식화



본 연구는 들불축제라는 키워드로 소셜미디어에 남긴 텍스트 자료로부터 구조화된 형태의 정보를 추출하여 패턴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의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작성된 텍스트를 수집-정제-분석-시각화의 과정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도출했다. 분석에는 유시넷(Ucinet)6.0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네트워크 중앙성과 컨코(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진행했다. 유시넷(Ucinet)6.0과 함께 패키지화된 넷드로(NetDraw)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시각화함으로써 텍스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컨코(ConCor)분석은 단어 간의 동시 출현 매트릭스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드들의 블록을 식별해내고 블록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로 복잡한 네트워크

유튜브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데이터 및 연관 키워드 순위를 제공하고 검색 키워드의 공출현 빈도에 따른 매트릭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네트워크분석 시 유용하며(김보경, 2015), 아울러 연관성과 정확도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감성분석이 가능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GS(Good Software)인증 획득한 소프트웨어이다.

집단의 숨겨진 하위집단들 관계의 구조적 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방법은 사회 연결망분석에서 파생된 의미연결망 구조분석이다. 의미 연결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드를 찾아주는 방법으로 중앙성 분석을 시행했다.³²⁾ 중앙성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위세 중앙성’ 지표이다.³³⁾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와 노드 상관관계에 대해서 대부분이 고정되기보다는 외부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으로 변해서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³⁴⁾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됐다.

IV. 분석결과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들불축제와 관련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는 <표 2> 들불축제 키워드 네트워크 상위 50단어에서 보듯이 2016년도 출현빈도가 가장 많은 키워드는 ‘새별오름’이었으며, 이어 ‘제주들불축제’, ‘축제’, ‘3월축제’, ‘정월대보름’, ‘오름’, ‘억새’, ‘들불’의 출현빈도가 높았다.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축제’, ‘3월축제’와 ‘정월대보름’의 언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들불축제하면 “3월 정월대보름에 제주에 위치한 새별오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소셜미디어 대중들은 인식한다고 판단됐다. 그리고 비, 바람, 눈, 가을, 봄, 겨울 등 날씨와 계절에 대

32) 중앙성이란 네트워크의 중심에 놓인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학급 네트워크를 예로 든다면, 대부분의 급우들과 연결된 ‘스타’가 중앙성이 높은 사람이고, ‘왕따’는 중앙성이 극히 낮은 사람을 의미한다.

33) 위세중앙성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찾아주는데, 연결된 상대 단어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준다(Bonacich, 1987, 2007; Ruhna, 2000). ‘호가호위’하듯 한명의 강자와 연결되는 것이 여러 약자들과 연결되는 것보다 위세 중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노드(단어)의 중심성을 측정하여 위세가 높은 단어를 많이 접할수록 위세중앙성은 높아지며, 중요한 노드가 된다.

34) 김학용, 「대소셜 토지 등장인물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2012.

한 단어들이 도출되었고, 희망, 소원, 불, 억새, 전체, 태우기, 장관, 하이라이트 등 기복과 불 놓기 등 관련행사에 대한 단어들도 부각됐다³⁵⁾.

들불축제를 경험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형용사 키워드를 살펴보면 2016년 ‘타오르는’, ‘아름답다’, ‘태우는’, ‘즐거다’, ‘번지는’의 단어가 도출되었고, 2017년에는 ‘멋지다’, ‘새롭다’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2018년에는 불길이 힘차게 타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활활’이라는 단어와 함께 긍정적 단어들이 도출됐다. 반면 2017년에만 출현한 ‘촛불’ 키워드는 2017년 사회운동인 촛불혁명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며, 2018년 출현한 한국관광공사는 작품명 제주들불축제가 한국관광공사 우수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반영되었다고 파악된다. 또한 2016년 이후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축제, 3월축제, 오름, 억새, 들불, 애월읍 등 키워드 네트워크 상위 단어들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주들불축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2〉 들불축제 키워드 네트워크 상위 50단어 빈도 (단위:횟수)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새별오름	1685	새별오름	1829	새별오름	2686
2	제주들불축제	932	제주들불축제	1255	제주들불축제	1526
3	축제	593	축제	798	축제	898
4	3월축제	502	3월축제	596	3월축제	884
5	정월대보름	367	오름	421	오름	682
6	오름	355	행사	356	억새	652
7	억새	276	억새	335	소원	510
8	들불	255	정월대보름	334	정월대보름	509
9	행사	236	들불	276	들불	486
10	비	231	애월읍	249	행사	391
11	애월읍	216	여행	228	하늘	372
12	희망	208	전체	211	애월읍	368

35) 한편, 제주여행, 사진, 추천,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휴애리 등 여행과 더불어 3월에 있는 다른 축제명도 부각되었다. 2017년과 2018년도 출현빈도를 보면 2016년 들불축제 때와 유사하게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축제, 3월축제, 정월대보름이 언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13	가을	174	봄	207	여행	352
14	여행	167	가을	206	봄	264
15	봉성리	165	희망	182	가을	245
16	세계	165	봉성리	176	사진	204
17	봄	157	개최	165	봉성리	197
18	전체	154	세계	150	추천	186
19	개최	148	날씨	138	하이라이트	185
20	날씨	132	장관	134	장관	182
21	말	129	장소	133	전체	181
22	겨울	112	말	130	활활	175
23	제주여행	106	사진	130	불꽃	168
24	사진	105	추천	117	개최	165
25	추천	98	아름답다	109	말	155
26	모습	90	타오르는	107	제주여행	152
27	장관	89	타다	107	날씨	149
28	장소	86	제주여행	97	가볼만한곳	144
29	바람	85	소원	91	모습	138
30	준비	83	바람	89	겨울	137
31	유채꽃	80	모습	85	타다	136
32	타오르는	79	정상	83	대표	136
33	눈	77	한라산	83	한국관광공사	133
34	타다	77	대표	83	바람	130
35	아름답다	75	기원	82	아름답다	128
36	생각	72	촛불	78	비	121
37	주차장	71	거리	77	주차장	116
38	소원	71	풍경	77	성취	115
39	태우는	69	멋지다	77	타올라	115
40	국제걷기대회	67	겨울	74	장소	114
41	하이라이트	66	즐기다	73	멋지다	107
42	공연	65	생각	73	올라가	107
43	주제	63	명소	71	소개	105
44	안개	62	태우는	70	풍경	103
45	구경	62	주차장	68	불씨	102
46	제주도여행	59	가볼만한곳	67	생각	99
47	휴애리	59	구경	66	공연	99
48	달집	58	유채꽃	65	안녕	95
49	즐기다	56	불꽃	62	구경	93
50	새봄	55	새롭다	60	즐기다	93

로 진입했다. 2018년 들불축제에는 억새, 하이라이트에 대한 단어가 상대적으로 중앙성 지수가 높았으며, 하늘, 활활, 타올라, 안녕 등이 50위권에 새로 진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들불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 대중들의 인식이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3월축제와 함께 가볼만한 멋지고 새로운 대표 명소와 하늘까지 활활 타올라, 안녕을 소원하는 하이라이트 행사처럼 들불축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 했다.

〈표 3〉 키워드 위세중앙성 순위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단어	위세중앙성	단어	위세중앙성	단어	위세중앙성
1	새별오름	0.509	새별오름	0.527	새별오름	0.525
2	제주들불축제	0.426	제주들불축제	0.434	제주들불축제	0.373
3	축제	0.309	축제	0.334	억새	0.293
4	3월축제	0.287	3월축제	0.282	3월축제	0.262
5	오름	0.219	억새	0.224	축제	0.261
6	들불	0.196	오름	0.203	오름	0.261
7	애월읍	0.188	정월대보름	0.165	들불	0.19
8	억새	0.186	들불	0.161	소원	0.176
9	희망	0.169	애월읍	0.151	애월읍	0.166
10	봉성리	0.163	행사	0.150	정월대보름	0.161
11	정월대보름	0.156	가을	0.130	하늘	0.160
12	세계	0.135	전체	0.126	가을	0.129
13	행사	0.134	희망	0.122	여행	0.119
14	가을	0.128	봉성리	0.112	행사	0.117
15	전체	0.101	봄	0.099	봄	0.093
16	여행	0.097	세계	0.092	전체	0.092
17	개최	0.094	여행	0.088	봉성리	0.086
18	추천	0.081	개최	0.088	하이라이트	0.086
19	말	0.070	장관	0.076	활활	0.083
20	봄	0.067	장소	0.067	장관	0.079
21	비	0.063	아름답다	0.063	불꽃	0.073
22	주제	0.063	대표	0.061	추천	0.068
23	장관	0.057	말	0.058	대표	0.065
24	아름답다	0.055	타오르는	0.054	개최	0.062
25	겨울	0.053	추천	0.053	타올라	0.059

26	태우는	0.052	사진	0.051	성취	0.057
27	장소	0.049	제주여행	0.050	제주여행	0.056
28	타오르는	0.048	태우는	0.050	가볼만한곳	0.055
29	모습	0.047	풍경	0.049	사진	0.051
30	주차장	0.047	모습	0.044	겨울	0.051
31	날씨	0.046	겨울	0.042	아름답다	0.051
32	하이라이트	0.042	명소	0.042	모습	0.048
33	사진	0.041	날씨	0.039	멋지다	0.047
34	타다	0.039	기원	0.039	말	0.046
35	달집	0.038	타다	0.038	주차장	0.042
36	소원	0.035	가볼만한곳	0.038	장소	0.039
37	제주여행	0.034	정상	0.037	바람	0.038
38	유채꽃	0.034	멋지다	0.036	올라가	0.035
39	구경	0.034	주차장	0.032	풍경	0.034
40	즐기다	0.034	바람	0.031	날씨	0.032
41	생각	0.033	구경	0.027	타다	0.032
42	눈	0.032	소원	0.026	공연	0.028
43	준비	0.031	한라산	0.025	즐기다	0.028
44	공연	0.028	거리	0.025	구경	0.025
45	바람	0.025	유채꽃	0.024	소개	0.022
46	제주도여행	0.022	생각	0.023	안녕	0.022
47	안개	0.018	불꽃	0.023	생각	0.020
48	새봄	0.017	새롭다	0.019	불씨	0.019
49	국제걷기대회	0.012	즐기다	0.016	비	0.014
50	휴애리	0.008	춧불	0.001	한국관광공사	0.013

3. 의미 연결망 구조(CONCOR) 분석결과

상위 50개 단어 사이의 네트워크는 너무 조밀하게 얽혀 있어서 시각적으로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코(CONCOR) 분석을 했다. 이 분석을 통해 의미연결망 내에서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그룹화하고, 그룹들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이 4개의 군집으로 나뉘었고, 3년간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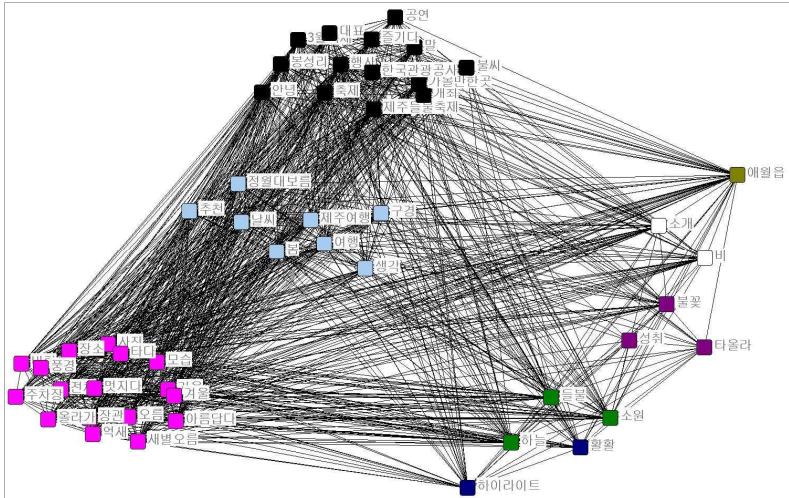
〈표 4〉 컨코(CONCOR) 분석결과

군집	2016년	2017년	2018년
군집1	개최장소 (새별오름, 애월읍, 봉성리 등)	개최장소 및 기복 (애월읍, 봉성리, 소원, 기원 등)	개최장소 및 풍광 (새별오름, 장소, 모습, 사진, 장관, 풍경 등)
군집2	3월 개최되는 축제및행사 (행사, 하이라이트, 3월축제, 제주들불축제 등)	3월 개최되는 축제및행사 (제주들불축제, 유채꽃, 3월축제, 개최 등)	3월 개최되는 축제및행사 (제주들불축제, 축제, 3월축제, 즐기다, 공연 등)
군집3	제주관광 (제주여행, 추천, 오름, 역새, 여행 등)	제주관광 (제주여행, 풍경, 추천, 아름답다, 오름, 구경 등)	제주관광 (제주여행, 날씨, 여행, 생각, 추천 등)
군집4	들불놀이 메인행사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는, 타오르는 등)	들불놀이 메인행사 (전체, 장관, 태우는, 타오르는, 정월 등)	들불놀이 메인행사 (들불, 활활, 하이라이트, 소원 등)

<그림 6>과 같이 2016년 들불축제 의미연결망 안에 있는 단어들은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군집은 새별오름, 애월읍, 봉성리, 장소, 공연, 사진 등 들불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군집은 제주들불축제, 3월축제, 하이라이트, 행사 등 3월에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한 단어들이 포함됐다. 그리고 세 번째 군집은 제주여행, 아름답다, 추천, 오름, 역새 등 제주관광과 관련된 단어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네 번째 군집은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는, 타오르는 등 들불놀이 메인행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됐다.

아름답다, 멋지다, 장관, 오름 등 개최장소 및 풍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군집은 제주들불축제, 축제, 대표, 3월축제, 가볼만한곳, 즐기다, 공연 등 3월에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한 단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군집은 제주여행, 날씨, 여행, 생각, 추천 등 제주 관광과 관련된 단어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네 번째 군집은 들불, 활활, 하이라이트, 소원, 하늘 등 들불놀이 메인행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됐다.

<그림 8> 2018년 들불축제 컨코(CONCOR) 네트워크 분석



결과적으로 현재 들불축제를 언급하는 키워드 군집들을 살펴본 결과, 군집1은 들불축제가 열리는 개최 장소에 집중하다가 개최 장소에서의 행위와 경관으로 관심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2와 군집4는 3월에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와 들불축제 메인행사인 들불놀이는 3년 내내 거의 동일한 키워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들불축제가 3월에 개최되는 축제라는 점과 메인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군집3인 제주관광에서 도출된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들불축제와 제주관광객 유치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4. 요약과 토론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개최한 들불축제에 대한 국내 소셜미디어 대중들의 인식변화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들불축제 관련 키워드 빈도수를 통해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대중들은 들불축제를 “3월 정월대보름에 제주에 위치한 새별오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형용사 키워드로 타 오르는, 아름답다, 태우는, 즐기다, 멋지다, 새롭다, 활활 이라는 단어들이 나타났다 이는 제주들불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는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축제, 3월축제, 오름, 억새, 들불, 애월읍 등 키워드 네트워크 상위 단어들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주들불축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인지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들불축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키워드 위세중앙성을 살펴본 결과, 새별오름과 제주들불축제는 3년 기간 내내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한바와 같이 주요 키워드 빈도 결과와 유사했다. 2016년, 2017년, 2018년 들불축제에 대한 비교 관점에서 보면, 2016년 들불축제에 비해 2017년 들불축제에는 장관, 행사에 대한 키워드들이 상대적으로 위세중앙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표, 풍광, 명소, 가볼만한곳, 멋지다, 새롭다 등이 50 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2018년 들불축제에는 억새, 하이라이트에 대한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중앙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하늘, 활활, 타올라, 안녕 등이 50위권에 새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들불축제에 대한 인식이 새별오름, 제주들불축제, 3월축제와 함께 가볼만한 멋지고 새로운 대표 명소와 하늘까지 활활 타올라, 안녕을 소원하는 하이라이트 행사처럼 들불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 대중들의 인식체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미연결망 내에 존재하는 단어들에 대해 유사성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컨코(ConCor)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군집은 들불축제 개최장소와 관련됐으며, 두 번째 군집은 3월에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였으며 세 번째 군집은 제주관광 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군집

은 들불농기 메인행사로 나타났다. 특히 첫 번째 군집인 들불축제 개최장소와 관련해서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에 집중하다가 개최 장소에서의 행위와 경관으로 관심이 좀 더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모두 거의 유사한 키워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들불축제에 대한 관심사는 개최장소, 행사, 제주관광에 집중한다고 판단 할 수 있었다.

V. 결론: 정책적 제안과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대중들 사이에서 들불축제에 대한 구전 활동은 “정월대보름 시점에 제주 새별오름에서 역새를 태우는 아름다운 3월 축제”라고 지인들과 정보를 나누며 상호작용하고 들불축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날씨와 축제행사 그리고 사진전과 같은 이벤트와 관련된 정보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나눔에서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3월 대표축제, 아름다운 풍광 등과 같은 생각이 기존 구전활동에 덧붙여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날씨와 구체적인 축제 행사 그리고 들불축제와 관련된 이벤트 등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들불축제 개최장소인 새별오름은 3년 내내 위세중양성 지수가 가장 높다. 위세 중양성이 높은 새별오름은 다른 오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들불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새별오름을 찾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며, 새별오름을 방문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축제장 부지를 연중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일련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전 국민의 참여 속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명품 글로벌축제로 도약코자 많은 예산을 들여 들불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여 축제 목적에 부합한 들불축제가 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들불축제 개최 현장에서의 단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들불축제 관련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향후에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바탕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 블로그와 카페의 데이터만을 수집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성향, 계층,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또다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들불축제 소셜미디어 대중들의 인식 조사 시 한국어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져 외국인들에 대한 의견은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는 들불축제에 대한 세계 각국 소셜미디어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아가 축제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별 인식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서 들불축제 기획운영에 유용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불축제 인식 조사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타 방법론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으며 빅데이터 세상인 현 시점에 좀 더 유용하며 정확한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축제와 지역문화에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모바일 시대에 변화하는 인식 및 동향 조사 패러다임을 반영하며 관광분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통계분석에서 융·복합적 측면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제고하는 논의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연구 결과는 추후 들불축제 관련 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미영·오창현·정철, 「추구편익을 활용한 지역축제 방문객 시장 세분화:제주올레걷기 축제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36(5), 2012.
- 김경희, 「축제 서비스품질이 축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벤트·국제회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남이·이수범, 「공중의 라이프스타일이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3(2), 2011.
- 김의근·강숙영, 「지역축제·이벤트 영향인식이 참가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7호, 2010.
- 김의근, 「지역축제의 특성과 발전방안 연구 - 제주들불축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학연구』 제21집, 2016.
- 김학용, 「대하소설 토지 등장인물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11), 2012.
- 김휴찬·김미정·신형정, 「소셜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한 제주관광 트렌드 서비스 설계 및 구현」, 『e-비즈니스 연구』 15(3), 2014.
- 류용걸·양성국·문성주, 「제주도 방어축제의 영향인식이 지역사회 애착 및 축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연구』 24(3), 2012.
- 류정아, 「제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축제문화 개선방안」,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주최한 2017년 하반기 지역경제세미나, 2017.
- 류시영·유선욱(2017),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강원도 관광에 대한 인식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2), 2017.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문화광장 지역축제 연도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정보」, 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2018. 8. 21. 접속.
- 박득희·김태구·이계희,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정보 네트워크 분석」, 『관광연구저널』 30(8), 2016.
- 박상훈·이희정, 「사회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연구』 7(2), 2017.
- 박홍식, 「정부 이벤트 마케팅의 이해: 2002년 월드컵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

계학술발표 논문집』 2001권, 2001.

변수정, 「지역축제의 장소성과 장소마케팅이 축제이미지와 축제성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부산발전연구원,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썬커의 부산관광 인식 분석과 대응방안」, 『BDI 정책 포커스』 318호, 2017.

백선희, 「도시문화전략으로서 지역문화축제의 지향점과 구성요소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일본 지역문화축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0(1) 2006.

삼성경제연구소, 「확산되는 소셜미디어와 기업의 新소통 전략」, 『CEO 인포메이션』 764호, 2010.

서정무, 「지역축제 이미지가 방문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설진아, 「소셜미디어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2009.

심성욱·김운한,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소셜미디어 광고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3(2), 2011.

안경모·이광우, 「지역축제의 관광가치추정:이천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4(2), 2005.

오익근·이태숙·전태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9(10), 2015.

우기남,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발전방안 - 2010 축제를 중심으로 - 」, 『제주관광학연구』 14집, 2010.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 2018.07.29. 접속

이미경·박지원·박한우·Mark Smith,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국제 회의 네트워크분석: 세계인터넷전문가총회(IR15) 트위터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0(3), 2015.

이수희·박득희·김맹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제주도 관광 인식에 관한 연구 - 한한령 이전과 이후 비교」, 『관광레저연구』 30(2), 2018.

이승권, 「축제성(festivité)과 지역축제」, 『한국프랑스학논집』 57집, 2007.

이용기·이덕우·이충기, 「지각된 환경단서가 방문객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수안보 온천축제의 경우」, 『관광학연구』 27(1), 2003.

이정록·남기범·지상현, 「대형 이벤트 개최가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연구 - 2013 순천만정원국제박람회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9(1), 2014.
- 정명재·노학래·박민식,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도 관광 이용객들의 반응 조사」,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 정성문·주여운·오치옥, 「축제의 속성으로 본 광주비엔날레 분석」, 『관광연구논총』 29(4), 2017.
- 정승훈, 「해양축제의 환경단서가 방문객의 긍정적 감정, 지각된 가치, 전반적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제14회 최남단 방어축제를 사례로 - 」, 『관광연구저널』 29(3), 2014.
- 제주시, 『2016년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7년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18년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서』
- 최민재,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2009.
- 최영·박성현,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011.
- 최화열·박연옥·윤병국, 「슬로우투어리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도보길과 제주올레걷기 축제를 사례로 - 」, 『관광연구저널』 29(2), 2015.
-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활용 관광사업 성과 시범분석 - 2013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 』,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ocial media users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re Festival

- Accessing big data analysis-

Jung, Soon-Yeo*·Kim, Dae-Hoon**·Yang, In-H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those who visited Jeju Fire Festival, a famous local festival, using social media and big data. For this, web blogs and internet communities (also known as cafes) provided by NAVER and DAUM were selected as the channels for analysis. For the material search using big data, 50 top keywords of each year by the topic of 'Fire Festival (or Deulbul Festival' in Korean) were extracted. The target period of analysis was limited to the three years of 2016, 2017 and 2018. For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 social metrics application called TEXTOM 2.5 was used to conduct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extraction of metrics data. Another application, called UCINET 6.0 was used to perform a social network analysis. To quantify the degree of relations, the linkages and eigen vector centralities between the found keywords were analyzed. The visualization of network between the

* Professor, Dept. of Accounting, Jeju National University

** Doctor's course completion, Accounting Dept. of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Doctor's course completion, Accounting Dept. of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was done using the Net Draw function of UCINET 6.0. To derive clusters comprising keywords with similarit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done by adopting a CONCU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n extraction of various keywords recognized by visitors, including Saebyeol Oreum, Jeju Fire Festival, Jeju March Festival, and Jeongwol Daeboreum. These results indicated clues to understanding the visitors' recognition and trends regarding the Fire Festival. Also, in the eigenvector centralities analysis, the outcome was similar to the result of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Furthermore, the CONCUR analysis found 4 distinctive similarity clusters. The diagnosis of changes in the visitors' recognition of local festivals using social media and big data, as is the case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f use in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for local festivals.

Key words : Local Festival, Big Data, Social Network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교신 : 양인하 63176 제주시 서사로16길 20

서사라주택 201호

(E-mail: kkangton@daum.net)

논문투고일: 2018. 09. 12

심사완료일: 2018. 10. 04

게재확정일: 2018. 10. 13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방향 모색

양미경*

I. 서론

II.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적 함의

- 1)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 2) 직업생태계의 변화
- 3) 다양성(Diversity)의 범위

III.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키워드

- 1) 문화다양성교육
- 2) 인간중심교육
- 3) 평생교육

IV.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인이자 직업인으로 살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대학을 포함한 사회가 어떠한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할지를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인간의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는지 살펴보고 평생직업 개념이 사라지는 직업생태계의 변화를 탐색한 후 4차 산업혁명 변화가 낳은 여러 측면의 다양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은 다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교

* 대전보건대학교 인문기초 교양학부 교수

육과 인간중심 사고의 함양 그리고 이들을 적시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서 평생교육의 조합이 필요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특성에 맞춘 문화다양성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등 산업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의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 전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형성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구는 과학기술이 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인 콘텐츠는 다양성과 유연성의 폭과 깊이에 좌우될 것이다.

둘째는 인간중심교육이다. 인간의 생각의 변화는 시장과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신기술은 인간의 창의성을 현실로 구현하도록 해주며 인간의 행복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그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키는 주체인 인간의 의도와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인간존중과 디지털시민성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중심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이러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평생교육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융합은 지식의 넓이뿐만 아니라 깊이의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고,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생활방식과 지식의 가치는 변화되어 간다.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끝없는 학습과 재교육이 불가피하다. 평생학습을 전제로 한 진로교육은 일생 동안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변화에 대한 결정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나침반과 같은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 문화다양성, 다문화역량, 인간중심, 평생교육

I. 서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고할 뿐이다.”¹⁾ 유럽 최대의 전략컨설팅 회사인 롤랜드버거가 이렇게 말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여전히 지금이 아닌 훗날의 어떤 시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미래사회 전반적 인식에 대한 정부의 2014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021~2040년을 미래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롤랜드버거. 김정희, 조원영 공역,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다산3.0, 2016, 20쪽.

미래의 일자리 수 증감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다(35.8%)가 감소할 것이다(25.0%)보다 높았다. 이 결과로만 보면 이때까지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닥쳐 상당수 기존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2016년 다보스포럼의 미래일자리보고서가 주는 충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랄까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활용이 늘면서 2025년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보다는 새로 생기는 것이 두 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은 일하는 방식과 패러다임의 변화, 그에 맞는 적절한 훈련과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은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기 시작했다.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등장으로 사물과 사물의 데이터들을 연결하게 되었으며 비트코인(Bitcoin)으로 이 세상의 누구든 무엇이든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를 지나 휴대폰 사용을 생활화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인간형 호모 모빌리쿠스(Homo Mobilicus)²⁾로 불리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산업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새로 맞닥뜨린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기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식이 되고 쓸모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간의 삶을 위한 전진이라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와 있다는 미래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직업을 가져보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가진 채로 십 여 년 전과 다름없는 대학 건물에서 오타만 수정된 증보판 교재로 수업을 하며, 20년도 더 된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자격시험을 보고 세상에 내놓아지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세상의 변화를 둘러보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표현하였다. 축적과 장인정신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와 현명한 시행착오로 표현하는 디지털이라는 상반된 가치

2)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삼성경제연구소, 2008, 253쪽.

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을 내놓았다.³⁾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변화의 시대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실용적 논의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연구 외에 각 과목, 전공별 교육방향을 다룬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⁴⁾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역량을 다룬 논문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창의력, 분석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 등을 핵심역량으로 꼽고 있다.⁵⁾ 그 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에서 평생진로개발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⁶⁾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환경에서 직업생태계는 거침없이 변화하고 지식 대상 뿐 아니라 방법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자연스럽게 다양성의 환경에 대응하기를 요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직업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간중심 사고의 중요성을 탐색하며 교육 방법에 대한 해법을 탐구하고 이를 위해 대학을 포함한 사회는 어떠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지를 살펴본다.

II.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적 합의

1)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의 결과를 정리한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미래전망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미국과 아시아에 빼앗긴 제조업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
- 3) 장병규, 「사람중심의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 KRnet Conference 기조연설, 2018. 6.26.
 - 4) 서우석, 「4차 산업혁명과 진로교육-실과교육에 주는 합의」, 『2017년 한국실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2017. 12, 27쪽.
 - 5) 박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진로교육의 방향」, 『교육제주』 2016가을/겨울 vol.1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6, 106쪽.
 - 6) 송병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의 방향」, The HRD Review. 2017, 6쪽.

에서 촉발하였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설명되고 있는 1, 2, 3차 산업혁명 정의에 대한 합의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 이후를 이끌어갈 사고방식(mindset), 기술(skill set), 도구(toolkit)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리더십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⁷⁾ 2017년에는 일자리, 산업의 붕괴, 빈부격차의 확대 등,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미래상에 대한 논의 등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의 정의를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 그룹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구호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혁명의 고도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어 닥친 산업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초지능성, 초융합성, 초연결성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초지능성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딥러닝(Deep Learning)을 포함하는 머신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게 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융합성, 초연결성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과학기술들이 융합하면서 다양한 경계를 허물고 있는 특징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 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세계가 연결되면서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 인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게 되어 이들의 생활패턴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초연결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페러다임은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개념, 가치, 인식 그리고 실천으로 이뤄지는 총체이고, 공동체는 그것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특정하게 결

7) World Economic Forum, WEF Annual Report 2017-2018, Switzerland. www.weforum.org

정하고 스스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⁸⁾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⁹⁾시대의 산업생태계는 과거와 전혀 다르며 산업, 직업, 교육 뿐 아니라 인간의 삶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2) 직업생태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핵심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펼쳐진 거대하고 혁신적인 드론 공연을 떠올려보자. 그 1218대의 드론을 작동한 사람이 단 두 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머지않은 미래세계에는 인간의 일자리가 극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다. 또한, 인간의 공연을 떠올릴만큼 자유자재인 드론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덩리닝을 거친다면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의 양적,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나 그 양적 변화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서울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향후 20년 내에 오늘날 직업의 50%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한 명의 노동자가 평생 10개 이상의 일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¹⁰⁾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서는 매장판매직, 운송직, 단순노무직 등의 현저한 감소를 전망하는 반면, 기술혁신과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의 업무가 증가하며 공유경제와 1인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이 생겨날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힘들고 위험하거나 꺼려지는 업무, 단순노동직 등은 자동화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식 정보 생산이 폭증하여 고부가가치 지식노동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오히려 상

8)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사. 2009.

9)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 포노 사피엔스(지혜가 있는 전화기)라고 부른 데서 나왔다. 『시사상식사전』, 2015.

10) 서울산업진흥원 신직업인재센터,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 서울산업진흥원, 2017.

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과잉반응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그 단어를 받아들이나 마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버(Uber) 기사, 3D프린팅 디자이너, 빅데이터 분석가, 드론 조종사,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등 직업들은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직업들이다. 이처럼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며 AI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 머지않아 인간에게 직업이란 것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과 협업하는 ‘코봇(cobot)’의 등장 이후 생산성이 85% 이상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¹¹⁾를 보면 미래의 인간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다만 변화의 내용과 방법, 시기는 인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3) 다양성(Diversity)의 범위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로 ‘다양성(diversity)과 유연성(flexibility)’을 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등 산업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의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 전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¹²⁾으로부터 정립된 개념으로서,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성은 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생활양식, 경제, 문화, 정보, 언어 등의 다양성 뿐 아니라 이들의 근간이 되는 가치, 가치관 및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해가는 방식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간에 경제, 자본 및 정보, 문화 등의 경계가 약화되고 시공간 뿐 아니라 지리적,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문학과 과학기술, 현실과 사이버 세계 등 많은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인종적, 문

11) 박가열, 「4차 산업혁명 시대, 30년 후 대부분의 ‘인간의 자리’가 대체된다.」, 한국고용정보원, 2016.

화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업이 늘어나게 될 뿐 아니라 인간과 기계와의 교류와 협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다양성을 키워드로 한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산업 및 고용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보스포럼의 2016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21세기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을 들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창의성의 요구가 현격히 증가되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²⁾ 미래준비위원회도 이와 비슷하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역량, 문제정의와 해결역량 등을 들었고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AI)이 우위에 있는 논리적 사고 영역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공감능력과 같은 능력을 혁신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선정하고 이 역량은 직업기초능력을 넘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연결성(Connectivity)과 창의성(Creativity)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정의하며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¹³⁾라고 하였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의 방법, 내용, 범위 등이 증가될 뿐 아니라 기계와도 협업하고 소통해야 하는 등 다양성의 범위의 확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의 향상을 요구한다.

Ⅲ.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키워드

1) 문화다양성교육

현대에는 네트워크의 다양화와 소통 기술의 발달로 다른 집단과 접촉이 늘어났지만 소통이 늘어나고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보다 오히려 정체성혼란,

12) World Economic Forum, Future of Jobs Report. www.weforum.org, 2017.

13) 김상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소프트 파워'.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연구센터, 2016, 9쪽.

인간소외나 차별이 늘어나는 부정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다른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로 변화의 혜택을 향유하다보니 정치적 또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긍정하지 않은 대중의견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직업생태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직무와 직무, 직업과 직업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신직업, 공유경제 같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와 직업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학과와 전공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문화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 학자인 벅크스는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가 다문화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았다.¹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문화다양성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다양성교육은 다양성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문화다양성은 창의융합역량의 원천이기도 하다.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초기에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용어였으나 각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공유되는 도덕 관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¹⁵⁾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구는 과학기술이 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인 창의적 콘텐츠는 다양성과 유연성의 폭과 깊이에 좌우될 것이다. 초연결의 사회에서는 인간 대 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 대 로봇 등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융합하느냐와 새로운 지식이나 낯선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활용하느냐로 발전의 수준을 가늠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가진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문화적 차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적 자세를 포괄하는 다문화적 감성과 역량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14) James A. Banks. 모경환의 역,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16, 2쪽.

15) 위키백과. “문화다양성”. <https://ko.wikipedia.org>

강조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이자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역량은 문화적 차이를 가진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일컫는다.¹⁶⁾ 새로운 문화나 다른 문화에 대해 그 차이를 인지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 창의적인 시너지를 생성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강조되어야 하는 중요한 태도이자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빠르고 넘쳐나는 정보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및 네트워크 속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연결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직업에도 특정분야의 숙련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양성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역량은 학습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으로 개발되는 지식이라기보다 태도와 습관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성별, 다양한 역량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구성에 문화다양성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다양성교육에는 교수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가치관의 변화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y, CRP)’을 통하여 한국의 다문화교육을 논의한 김종훈, 최주리의 연구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은 강의자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신념 및 가치 체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¹⁷⁾고 강조하였다. 경계가 모호해지고 교육의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지역과 대상이 특정된 교육이 아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MOOC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방형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에도 K-MOOC가 시작되면서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거침없이 퍼져가는 다양성 환경의 범위와 인간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속도는 인간의 유연성(flexibility)을 필요로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

16) 다문화역량[多文化力量, Cross-Cultural Competency], 『HRD 용어사전』, (주)중앙경제, 2010.

17) 김종훈, 최주리,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의 개념 탐색: 한국 다문화교육에의 적용」, 『다문화교육연구』, 2015, p.132.

렵다는 것은 미래의 직업 또한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학습하고 이후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산업사회로의 이동으로 전문 지식의 가치가 부식되거나 가치가 변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게 될 사람은 지식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변화에 빠르게 잘 적응하는 유연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며 계획을 수립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교육센터에서는 이를 미래문해력(Future literacy)으로 명명하였다. 사회 및 산업현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고도화와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력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특히 고등직업교육은 산업현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다양성교육과 인간중심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 인간중심교육

IBM의 왓슨(Watson)은 2011년 미국 ABC방송의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 출연, 우승하면서 유명해진 인공지능(AI) 컴퓨터다. 의료산업에서 병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왓슨의 역할은 훨씬 더 다양하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아기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깨기 전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부모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리는 장치를 개발하기도 하고, 기존에 상영된 100여 편의 공포 영화 예고편을 학습한 후 공포영화 ‘모건(Morgan)’의 예고편을 만드는 등 창작의 영역에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왓슨 기반으로 개발된 솔루션인 스페인의 ‘왓섬앱(WatsomApp)’은 AI를 통한 게임과 상담 등으로 왕따 문제를 40%나 해결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의 기술은 생산자이력 확인 기술로 커피산업의 비윤리적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현재 컴퓨터 대신 미래형 양자컴퓨터는 커피를 마실 때 카페인 분자가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 줄음이 사라지는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등 특히 신약 개발 부분에서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되고 있다.¹⁸⁾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추구하게 되며 이 변화는 결국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기술 혁명만이 아니다. 사회와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행동양식뿐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도 변화시킨다. 고령화, 저출산, 이주의 증대로 인한 문화다양성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간중심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노동 대신 여가 활동을 추구할 것이라는 생활문화의 변화 예측으로 케미피케이션전문가, 정원놀이전문가 등의 직업이 등장하고, 1인 가구의 증가는 반려동물장 의사, 동물물리치료전문가라는 직업을 생성하며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를 급성장시키고 있다.¹⁹⁾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일자리를 잃게 될 두려움, 기술혁명이 야기하는 인간소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많은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인간의 생각의 변화는 시장과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신기술은 인간의 창의성을 현실로 구현하도록 해주며 인간의 행복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그 인공지능에게 ‘어떤’ 데이터를 교육시키는가가 중요하며 교육을 시키는 주체인 인간의 의도와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삶의 형태가 변화하고 기계로 대체되는 일자리 등으로 인해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혼란이 오는 시기에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전제로 새로운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문화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국민적, 종교적 정체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세계시민주의 같은 인류 전체를 하나의 평등한 시민으로 보는 의식과 태도가 빠르게 확산되었다.²⁰⁾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행동으로 우리나라의 촛불시위, 미국 총기규제 시위행진의 기폭제가 된 ‘Never again’ 해시태그 운동, #me too 운동

18) IBM Korea(2018). https://blog.naver.com/ibm_korea

19) 서울산업진흥원 신직업인재센터,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 서울산업진흥원, 2017.

20) 최은경, 『글로벌미디어와 문화경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23.

등이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상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소통 환경을 반영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들에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와 시민성을 키워주는 인성교육으로서 디지털시민성 교육 또한 중요하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 혁명이 아무리 광범위하게 진전되어도 그 근간은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추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욱 더 불확실해지는 미래의 다양한 결정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가치관으로서 인간중심정신의 함양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적시적으로(just in time) 이루어나가면서 인류는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3) 평생교육

불확실성은 미래의 본질이다.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거대하고 빠른 사회변동은 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지식 격차를 극대화하며 평생직장 개념을 파괴해버리는 등 인간의 삶에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융합은 지식의 넓이뿐만 아니라 깊이의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고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생활 방식과 가치는 변화되어 간다. 직업 역량의 유효기간은 더욱 짧아지거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끝없는 학습과 재교육이 불가피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대책은 지속적인 적시 학습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30년에는 오래된 교과서가 아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교육포털에서 바로바로 다운로드해 공부하는 ‘적시학습시대(Just-in-time-learning)’가 올 것²¹⁾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이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발전한 것처럼 인간도 변화되는 지식과 가치를 평생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새로이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직업을 가지

21) 교육부(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화두 평생교육 청사진.

<https://blog.naver.com/moeblog/221252184219>

고 있는 사람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5년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교육접근을 위한 신역량군인 사회정서학습 SEL모델(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기초문해’로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핵심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의미하며 두 번째로 복잡한 도전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역량’,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성자질’을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을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생학습을 제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중요한 화두가 평생학습임을 각인시켰다.

기술혁명과 사회문화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교육 내용과 교육 체제의 혁신이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는 환경에서 진로교육은 더욱 그렇다. 채창균(2016)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학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50%에 불과하다. 즉 전공과 일자리의 연결성이 큰 의미가 없음에도 교육구성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공 수업에 맞추어져 있으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살아갈 다양성역량, 유연성, 창의융합 등의 미래역량 교육은 특강 정도로만 진행될 뿐이다. 1982년에 100세 시대를 전망했던 미국 타임지가 2015년에는 미국 텍사스대 실험을 근거로 142세까지 살 것을 예견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아니더라도 기존 직업에서 은퇴한 이후 근 80여 년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 직업생태계를 정면으로 조준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²²⁾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중요해진 것이다. 학문이나 직업, 직무에 따라 변화의 속도와 내용은 다를 것이므로 개인별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내용의 변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 및 초국경 학습 경험에 대

22) ebs 교육대토론(2018),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의 방향. EBS.

한 이해, 평생학습 차원의 교수방법의 다각화 등 교육 사회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²³⁾ 새로운 인재상과 직업, 직무. 그리고 그에 맞는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하고 교수자의 변화와 역량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학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진로 및 직업 교육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진로교육의 내용은 디지털 세대에 맞추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며, 인성교육, 다문화역량을 키워주고 협업 및 소통을 강조한 평생학습능력 등을 함양해야 한다. 평생학습을 전제로 한 진로 교육은 자신의 적성에 꼭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기존의 네비게이션형 교육이 아니라, 일생 동안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변화에 대한 결정의 순간에 자율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나침반형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인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화 환경에서 평생학습의 적절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공개강좌인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들 수 있다.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²⁴⁾ 아울러, 학습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역이나 국경 등 경계를 넘어 배경지식이 다른 학습자간 지식 공유가 가능하여 4차 산업혁명의 다양성과 창의융합이라는 특징에 더 다가갈 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형 MOOC인 K-MOOC는 이제 3년차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2017년 7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300여 강좌가 개설되었고 30만 건 정도의 누적 수강신청을 보여주고 있다.²⁵⁾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교육개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2018년 7월 정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5대 추진전략은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

23) 최홍, 이동원, 박준, 『다문화사회정책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10.

<http://www.seri.org>

24) 교육부 K-MOOC 홈페이지. <http://www.kmooc.kr/>

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NILE 브로슈어.

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 직업교육 훈련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조성 등이 다.²⁶⁾ 평생교육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초유의 환경 변화가 이끄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기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식이 되고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교재에 앞으로 10년도 활용하지 못할 학습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설계를 할 때 지식과 기술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로교육의 방향을 과학기술적 역량개발 논의에서 벗어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계보다 인간중심의 중요성을 탐색하며 평생교육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인간의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는지 살펴보고 평생직업 개념이 사라지는 직업생태계의 변화를 탐색한 후 4차 산업혁명 변화의 결과가 낳은 여러 측면의 다양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환경에서 산업구조의 혁신은 직업생태계를 거침없이 변화시키고 교육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시프트는 불가피하여 지식의 내용, 대상, 방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의 환경에 대응하기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교육과 인간중심 사고의 함양, 그리고 이들을 적시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서 평생교육을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 특성에 맞춘 문화다양성교육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

26) 교육부(2018). 관계부처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명은 제조업 등 산업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의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 전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다양성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초연결성, 초융합성은 인터넷시대 정보가 국경을 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와의 소통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초연결성, 초융합성은 창의융합역량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다양성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문화다양성은 창의융합 역량의 원천이다. 미래의 인재상은 지식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변화에 빠르게 잘 적응하는 유연한 인재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구는 과학기술이 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인 콘텐츠는 다양성과 유연성의 폭과 깊이에 좌우될 것이다.

둘째는 인간중심교육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창조적 혁신은 인간 중심의 공익을 위한 필요에 의해 존재한다. 인간의 생각의 변화는 시장과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신기술은 인간의 창의성을 현실로 구현하도록 해주며 인간의 행복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그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시키는 주체인 인간의 의도와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속가능한 휴머니즘 공동체다. 기술의 진보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인간 소외와 갈등을 해결하고 인간 행복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인간존중과 디지털시민성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중심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이러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인 평생교육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의 융합은 지식의 넓이뿐만 아니라 깊이의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고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생활방식과 지식의 가치는 변화되어 간다.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끝없는 학습과 재교육이 불가피하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전제로 한 진로 교육은 직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 역량을 키우는 네비게이션형 교육이 아니라, 일생 동안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변화에 대한 결정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나침반형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에 있다.” 1700년대에 활동한 교육자이자 사회비평가인 페스탈로치의 말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에 선 지금 오히려 더욱 적절하게 들린다.

참 고 문 헌

-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삼성경제연구소, 2008.
- 김상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소프트파워’』,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
 구소 철강연구센터, 2016.
- 김은미, 양소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57권 1호, 2013.
- 김종훈, 최주리,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의 개념 탐색: 한국 다문화교육에의 적용」,
 『다문화교육연구』, 2015.
- 플랜드버거, 김정희, 조원영 공역,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다산3.0, 2016.
- 박가열, 「4차 산업혁명 시대, 30년 후 대부분의 ‘인간의 자리’가 대체된다」, 한국고용
 정보원, 2016.
- 백승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2017.4, Vol.11, No.2, 2017.
- 서울산업진흥원 신직업인재센터,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 서울산업진흥원, 2017.
- 송병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의 방향」, 『The HRD Review』, 2017.
 9월호
-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사, 2009.
- 장병규, 사람중심의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 KRnet Conference 2018. 6.26.
- 정동훈, 영상 산업의 주류 기술로 등장할 인공지능. 한경Business, 2017.11.28
- 조현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2017.
- 채창균, 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 실태 분석, KRIVET Issue Brief 91, 1-4, 2016.
- 최은경,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갈등」, 『글로벌미디어와 문화경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최홍, 이동원, 박준, 『다문화사회정책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10.
- James A. Banks. 모경환의 역,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16.
- Klaus K. Schwab. 송경진역, 『제4차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새로운현재, 2016.
- Pew's Research Center, Research Report. Pew's Research Center, 2017.
- ebs 교육대토론,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의 방향. EBS. <http://www.ebs.co.kr>, 2018.
- IBM Korea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ibm_korea
- World Economic Forum. WEF Annual Report 2017-2018,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2017). Future of Jobs Report. www.weforum.org.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

다문화역량[多文化力量, Cross-Cultural Competency] 『HRD 용어사전』, (주)중앙경제, 2010. 9. 6.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5.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보도자료 2018.7.27.

교육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화두 평생교육 청사진, 2017.

<https://blog.naver.com/moeblog>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2018.

Abstract

Seeking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ang, Mi-Kyung*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such as super-connections, super-convergence and super-intelligence) on career education and what capacity is needed for young generation to live as professionals in this age. And explore what type of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do this, I look at how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human life and environment, and in what ways we demand a paradigm shift. After exploring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ystem where the concept of lifelong job disappears, the diversity of the various aspec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examined

In conclusion, career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a combination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for promoting multicultural competence, human-centered thinking, and lifelong education as a just-in-time education. First, it is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dap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arted with knowledge and technology-oriented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such as manufacturing, but ultimately it is a revolution in society and culture as a whole, and it has formed a more diverse cultural

*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environment than ever before. The tools that lea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ay be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e contents will depend on the breadth and depth of diversity and flexibility.

The second is human-centered education. The change of human thought creates the changes of market and industry, the new technology makes human creativity realistic and extends the area of human happiness. Therefore, when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ntion and level of human being, which is the subject of educ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very important. There is a need for a new type of human - centered education that includes human respect and digital citizenship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new era.

The last is lifelong education, which is a way to implement such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nvergence of scholars require the expansion of depth as well as the extent of knowledge at the same time, Endless learning and retraining are inevitable in order to actively adapt to changes in the field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competitiveness.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the value of existing lifestyles and knowledge is changing. Career education on the premise of lifelong learning should be a compass-like education that helps make wise choices in the moments of decision-making about the many changes that will be encountered throughout life.

Key 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Career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competency, lifelong learning

교신 : 양미경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대전광역시 대전보건대학교
(E-mail: mkyang@hit.ac.kr)

논문투고일: 2018. 09. 10

심사완료일: 2018. 10. 10

게재확정일: 2018. 10. 13

연구원 소식

회 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회 보

(2018. 07. 01 ~ 2018. 10. 31)

■ 학술행사

□ 근대 동북아시아의 바다와 해양도시

- 일시; 2018년 10월 4(목) 대담회: 동북아시아 번영을 위한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
5(금) 공동학술대회
6(토) ‘근대 동북아시아의 교류 양상과 제주 역사 문화’ 답사
-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층 진양현석관(세미나실)
- 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광대학교HK+사업단·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주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주요 프로그램

일시 : 2018년 10월 5일(금)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진양현석관		
13:00~13:30	등록	
13:30~13:50	개회사 : 전영준(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장)	사회 : 김은희 교수 (제주대학교)
	축 사 : 유권홍(원광대HK+사업단장)	
	환영사 : 송석연(제주대학교 총장)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 서영표 교수 (제주대학교)
14:00~14:30	• 중국 역사학계의 해양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발표: 김택경(용인대학교) / 토론: 이진선(동국대학교)	
14:30~15:00	• 러시아의 대러(다리니) 프로젝트-아시아의 밴쿠버 만들기	
	-발표: 이병한(원광대학교) / 토론: 정규식(원광대학교)	
15:00~15:30	• 일본의 울릉도 침탈과 임오군란	

	-발표: 김홍수(홍익대학교) / 토론: 양정필(제주대학교)	
15:30~15:50	Break Time	
15:50~16:20	• 小泉憲貞의 [隱岐誌](1903) 집필과 독도 인식	
	-발표: 최보영(동국대학교) / 토론: 심재욱(제주대학교)	
16:20~16:50	• 바다와 고향	
	-식민지말기 한설야 소설에 나타난 해양도시 표상을 중심으로	
	-발표: 하신애(원광대학교) / 토론: 이윤중(원광대학교)	
16:50~17:00	Break Time	
	종합토론	좌장 : 정병준 교수 (동국대학교)
17:00~18:00	동북아시아의 역사·문화·도시 연구	발표: 토론자 전원 및 청중
19:00~	만찬	

□ 여슈사건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여슈사건의 기억과 지역사회”

-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 장소 : 순천대학교 박물관 2층 시청각실
- 주최 : 순천대학교, 호남사학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후원 : 순천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주 요 프 로 그 램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장소 :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13:00 ~ 13:20	등록
13:20 ~ 13:30	개회사 강성호(순천대 인문학술원장)
13:30 ~ 13:50	축사 최진규(호남사학회장) 전영준(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장)
1부 발표 사회 : 이병례(순천대)	
13:50 ~ 14:15	제1주제: 국가폭력 구조와 여순사건 발표: 노영기(조선대)
14:15 ~ 14:40	제2주제: 여순사건과 순천지역 좌·우세력의 동향 발표: 임송자(순천대)
14:40 ~ 15:05	제3주제: 여순사건 관련 구술사업의 현황과 과제 발표: 박병섭(순천여고)
15:05 ~ 15:20	휴식

15:20 ~ 15:45	제4주제: 지리산 지구 전쟁(1948.10~1950.5)과 선전전, 인민·국민의 전쟁, 언어·상징의 전쟁 발표: 임종명(호남사학회)
15:45 ~ 16:10	제5주제: 4·3의 표상과 기억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 김창후(전 4·3연구소장)
16:10 ~ 16:20	휴식
2부: 종합토론 사회: 황동하(순천대)	
16:20 ~ 18:00	발표자: 노영기, 임송자, 박병섭, 임종명, 김창후 토론자: 김인덕(청암대),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류시현(호남사학회), 이영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8:00	폐회

□ 제주도 고향 신화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 2018년 10월 27일(토)
-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진양현석관
- 주최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한국무속학회
- 주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한국무속학회
- 주요 프로그램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진양현석관
12:30~13:00	등록	
13:00~13:20	개회 및 인사	
제1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 신연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13:20~14:00	사신승배와 사실퇴치의 신화와 의례 : 제주도의 사례를 구실삼아	발표: 김현선 (경기대학교) 토론: 강정식 (제주대학교)
14:00~14:40	<칠성본풀이> 속 좌정처의 성격과 그 제의적 의미	발표: 이경화 (고려대학교) 토론: 고은영 (제주대학교)
14:40~15:20	<구렁덩덩 신선비>의 업신화적 성격	발표: 김호성

		(경기대학교) 토론: 한상효 (건국대학교)
15:20~15:30	휴식	
좌장 :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30~16:10	제주신화와 일상성	발표: 강문중 (제주대학교) 토론: 김형근 (동아대학교)
16:10~16:50	인간 문화와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 본풀이의 총체성	발표: 전주희 (서강대학교) 토론: 김은희 (고려대학교)
16:50~17:00	휴식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강소전(제주대학교)		
17:00~17:40	무속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성 검토	발표: 홍태한 ((사)무형문화연구원) 토론: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17:40~18:20	제주신화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발표: 김진철 (제주대학교) 토론: 한진오 (제주대학교)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진양현석관		
제3부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허남춘(제주대학교)		
09:30~10:10	자식 점지 및 수복(壽福) 기원 신화의 측면에서 살핀 <이공본풀이> 신적 성격과 의미	발표: 김혜정 (고려대학교) 토론: 유형동 (건국대학교)
10:10~10:50	의례와 굿춤의 상관성연구 : 맞이굿을 중심으로	발표: 박영애 (국립무용단) 토론: 시지은(경기대학교)
10:50~11:00	휴식	
좌장: 김형근(동아대학교)		
11:00~11:40	<고전적본풀이>의 전승양상과 형성의 문제	발표: 이현정(제주대학교) 토론: 지연화(경기대학교)
11:40~12:20	조상신본풀이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	발표: 류진옥(제주대학교)

	양이목사본과 부데각본을 중심으로	토론: 이소윤(서울대학교)
12:20~13:30	점심식사	
	좌장: 윤순희(제주학연구소)	
13:30~14:10	제주도 곶놀이와 삼공본풀이	발표: 허남춘(제주대학교) 토론: 양인정(제주대학교)
14:10~14:50	제주도 곶자왓 지역의 무속신앙과 구비전승	발표: 현승환·강소진(제주대) 토론: 김승연(제주학연구소)
14:50~15:00	폐회	

■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

번호	직책	이름	소속학과	위촉기간
1	원장 (해양문화연구센터장 겸직)	전영준	인문대학 사학과	2017.03.1~2019.02.28 (2018.02.1~2020.01.31)
2	부원장	김은희	인문대학중어중문학과	2017.03.13~2019.03.12
3	편집위원장	서영표	인문대학 사회학과	2017.03.11~2019.03.10
4	운영위원 (제주 4·3연구센터장)	양정필	인문대학 사학과	2018.03.19~2020.03.18
5	운영위원	이영돈	해양과학연구소	2018.04.25~2020.04.24
6	운영위원 (제주 사회문화조사연구센터장)	최 현	인문대학 사회학과	2017.05.02~2019.05.01
7	운영위원	이동철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2017.05.01~2019.04.30
8	운영위원	김치완	인문대학 철학과	2017.05.17~2019.05.16
9	운영위원	이창익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2017.07.20~2019.07.19
10	운영위원	조성식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2017.07.20~2019.07.19
11	운영위원	방호진	경상대학 경영학과	2018.03.01~2020.02.28
12	운영위원	장창은	인문대학 사학과	2018.02.01~2020.01.31

■ 학술교류협정(2018. 07. 01 ~ 2018. 10. 31)

일시 : 2018년 8월 8일

내용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를 증진 시키고 교류·협력을 통해 기관 간에 공동 발전은 물론 관련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협정 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일시 : 2018년 10월 4일

내용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원광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은 상호간의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화, 도시 연구의 학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협정 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원광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일시 : 2018년 10월 12일

내용 :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상호호혜 원칙에 의거하여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협정 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 발간물

□ 『탐라문화』 59호(2018. 10. 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	정	1983.	2.	23.	규칙 제	53호
개	정	1997.	11.	17.	규칙 제	383호
개	정	1999.	6.	29.	규칙 제	435호
개	정	2001.	8.	31.	규칙 제	495호
개	정	2004.	3.	1.	규칙 제	597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	692호
개	정	2011.	7.	14.	규칙 제	958호
개	정	2012.	11.	9.	규칙 제	1043호
개	정	2013.	10.	4.	규칙 제	1131호
개	정	2014.	8.	8.	규칙 제	12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하 “탐라문화연구원”라 한다)은 제주학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탐라문화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조사, 발굴, 연구 및 보존
2.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
3.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교류
5.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자료실 설치와 운영
7.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위원 해외파견
8. 외부기관의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

9. 그 밖에 탐라문화연구원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항

제4조 (원장과 부원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탐라문화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연구센터)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제주어연구센터, 제주4·3연구센터, 제주사회문화조사연구센터, 신화·민속연구센터, 제주문화콘텐츠연구센터, 해양문화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 (연구인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연구위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의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7조 (조교 및 직원) 탐라문화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연구분과)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 활동 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구위원들이 각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1. 언어·문학분과: 제주어, 제주문학, 한국어, 한국문학, 외국어, 외국문학 등
2. 민속·예능분과: 민속, 종교, 의료, 음악, 미술, 체육 등
3. 역사·고고분과: 역사, 고고, 문화재 등
4. 철학·교육분과: 사상, 철학, 윤리, 심리, 교육 등
5. 사회·문화분과: 지리, 사회, 인류, 평화, 여성, 보건, 의료 등

6. 산업·경제분과: 농업, 수산, 경제, 경영, 관광, 무역 등

7. 자연·환경분과: 지질, 동물, 식물, 생태, 환경, 해양 등

제9조(운영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원장, 부원장,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와 일반회계, 국내외 기관의 지원자금,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조(시행세칙) 탐라문화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1983. 2. 23. 규칙 제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1. 17. 규칙 제3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29. 규칙 제4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31. 규칙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3. 1. 규칙 제5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92호)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제주대학교 기타하부조직 설치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각 부처장 및 부학(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처장 및 부학(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7. 14. 규칙 제9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9. 규칙 제10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4. 규칙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 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8. 8. 규칙 제12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바,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1조(연구자의 의무와 대상)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란 연구원 규정 제6조(연구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 학술지 <탐라문화>에 투고하는 자와 심사자,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연구원 연구윤리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4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 관련 분야 인사 중,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원 관련 연구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사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반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반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연구자로서의 자격 정지
- 5) 주의 조치
- 6) 기타

10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4)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규정 제12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탐라문화』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3조 5항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탐라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 횟수)

『탐라문화』는 매년 3회 발행하며 간기는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게재 원고의 내용과 종류)

1. 제주도의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종류에는 1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3. 『탐라문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 투고)

1.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간기 별 원고마감은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2.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교정)

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 후,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

재 여부를 확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한다. 단 우리 연구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논문과 특집 및 기획 논문에 대해서는 2인의 심사의원을 위촉하여 게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 연구노트, 서평, 자료 소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 ② 연구 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정성
 - ③ 참고문헌 및 인용의 적절성
 - ④ 학술적 가치와 완성도
 - ⑤ 학술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5.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을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수정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8. 1차 판정 결과 제7조의 ⑤-⑦에 해당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결정에 해당하는 논문은 각기 전항에 의거해,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6조(접수 및 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접수 및 논문게재의 가부를 통고한다.
2.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1차 판정	2차 판정	비고
①	게재	게재	게재	게재	-	-
②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③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④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검토	수정사항 검토
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 심사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 검토 후 결정.
⑥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또는		
⑦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결정		
⑧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⑨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⑩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제8조(부칙)

-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규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탐라문화』 투고 및 편집 규정

1. 투고자격과 방법

- 1) 투고를 희망하는 논문은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tamla.jams.or.kr>)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지는 우리 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및 특별연구위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3) 논문의 주제는 제주도 문화 및 동아시아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
- 4) 논문 투고 시에는 “원고 매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본문의 원고량을 200자 원고지 매수로 환산한 후 본문 및 각주의 분량을 합산한다(본문의 경우 한글 - F10 - 문서 - 문서정보 - 문서분량 - 글자항목의 원고 매수 ; 각주의 경우 : 4줄당 200자 원고지 1매로 계산).
- 5)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article), 단보(proceeding & report), 서평(book review), 자료(research materials), 번역문(translation) 등으로 한다. 다른 서평의 경우에는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7) 논문심사를 원하는 연구자는 『耽羅文化』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아래아한글(이하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탐라문화연구원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tamla.jams.or.kr>)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8) 논문의 투고는 該當刊記에 대하여 2개월 전까지 접수받고 발행 1개월 전에 심사 완료한 것에 한해서 게재가 가능하다.
- 9) 투고지는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시에

는 게재 논문에 따른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연구논문의 게재료는 10만원, 전임 교원의 학술연구비 수령 논문은 30만원으로 한다.

- 10) 원고의 게재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11)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탐라문화연구원 전임교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편집규정(원고 집필 요령)

제출된 모든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원고 작성 요령>

- 1) 제출된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초과 게재료-조판면 기준 30면 이상 1면 초과당 1만원 부과)를 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꼭 필요한 경우 영어를 괄호 안에 적는다. 고유 명사의 경우 해당 언어 발음을 한글로 적되, 일상화된 고유 명사는 예외로 한다. 한자문화권의 경우 고유명사는 한자 표기를 할 수도 있다.
- 4) 『耽羅文化』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해야 한다. 영문 초록에는 제목, 이름, 소속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초록의 분량은 관사를 포함하여 250~300단어로 제한한다.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한다. 논문 말미에는 필자의 e-mail주소를 기록한다.
- 5) 그림 및 사진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게재 결정 후에 원본 파일을 별도로 첨부한다.

- 6) 본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본문의 장과 절, 항 번호는 I-1-1)-①의 순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II·III·IV·V…)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본문에서는 논저 인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각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 쪽수를 기재하도록 하며, 인용 또는 언급된 논저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본문의 경우}

- 예) … 지붕을 덮어 하루에 집의 외곽을 완성시켜 준다(현용준, 1986: 62-63쪽). (×)
- … 이러한 시점에서 박재윤 외(2009 ; 2010)의 연구에서는… (×)
- … 표선의 당캐할망당에서 신으로 모셔지는데, 바닷가에 나무를 깔고 모래를 덮어 해변을 만든 공을 인정해서 마을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³³⁾ (○)

33)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전라남도편, 제주도편』, 203-204쪽. 표선리 당캐할망당 당 신화에서는 ‘세명주’라 하기도 하고 ‘설맹디’라 하기도 하는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것이라 했다(표선리원로회, 『표선리향토지』, 1996, 154-155쪽). 이 당의 본풀이는 “한라산의 거녀신 ‘설문대할망’ 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여신의 이름 ‘설문대’가 ‘세명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신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했다(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325쪽). 2009년 제주신당조사에서는 이 당을 ‘표선리 당캐 세명주할망당’이라 했다(제주전통문화연구소편,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188쪽).

- 8) 본문 중에서 강조할 부분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며, 다른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 9) 참고문헌의 순서는 ① 한국 ② 중국·일본 ③ 서양의 순서로 하고, 저서와 논문의 구별 없이 한국의 것은 가나다 순, 중국·일본은 한자음의 가나다 순, 서양은 알파벳 순서로 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 순서로 한다.
- 10) 한국·중국·일본의 참고문헌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 』, 서양의 것은 논문은 “ ”, 저서나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쪽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예) 논문

홍이섭, 「한국사에 있어 이십세기전반기의 규정문제」, 『동방학지』 12, 1971.

윤용택,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dot통시 문화」, 『탐라문화』 2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Pizam, A, “Tourism impact: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1978.

예) 저서

한우근,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사회배경과 삼정의 문란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4.

Capra. J, *The Hidden Connections*, Doubleday, 1978.

예) 번역서

프리츠프 카프라,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김재희 옮김, 범양사, 1997.

Freire. P,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1996, 교육문화연구회(옮김), 『희망의 교육학』, 아침이슬, 2002.

3.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탐라문화』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우리 연구원은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 편집위원은 다년 간 연구해 온 중진학자 혹은 최근 3년간 전국 규모 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추천 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주제의 적합성에 관련된 심사를 수행하고, 주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의 각 분야(문학, 역사, 철학, 사회, 언어, 교육 등), 지면사정을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발표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기반으로 ‘특집논문’, ‘기획논문’ 등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의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규정의 심의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告示

이번 『탐라문화』 제59호에 투고된 논문은 13편이고,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7편의 논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 『탐라문화』 58호에 게재 예정이었던 「新羅 三千幢의 性格과 推移」는 저자의 사정으로 『탐라문화』 59호에 게재되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모두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총 장	송석언
원 장	전영준
운영위원	김치완, 방호진, 이동철, 이영돈, 이창익, 장창은, 조성식, 최 현
부 원 장	김은희
편집위원장	서영표
편집위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학), 류찬열(중앙대학교 교양학부), 민영현(부산대학교 철학과), 박준호(전북대학교 철학과), 배영미(일본 오사카대학교 언어문화연구과), 안중철(독일 튜빙겐대학교 한국학과), 장희홍(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진영중(성공회대 영어학), 최낙진(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허대식(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홍종옥(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교수)
조 교	이영준
편집조교	고수미

耽羅文化 제59호

초판인쇄	2018년 10월 25일
초판발행	2018년 10월 28일
발행인	송석언
편집인	전영준
발행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 : 064) 754-2310 홈페이지 : http://tamla.jejunu.ac.kr E-mail : tamla@jejunu.ac.kr
제작·공급	景仁文化社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전화 : 031) 955-9301 FAX 031) 955-9310